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281-10



2013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이행내용 보고서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23307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용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이하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구조조정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아 ‘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는 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2013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2013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배경, 시행내용 및 성과,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인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림수산업분야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 차

향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						
	제1절	2013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3	제3장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50	
	1.	농림수산물 부문	3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25	
	2.	임업 부문	7		1. 농림수산물 부문	52	
	제2절	2013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2. 산림 부문	57	
	1.	농업·농촌 부문	9				
	2.	임업·산촌 부문	12				
	3.	수산업·어촌 부문	14				
	제3절	2013년 농림수산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5				
	1.	농림수산물 부문	15				
2.	임업 부문	19					
향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						
	제1절	협동조합 개혁	5				
	1.	농협 개혁	25				
	2.	산림조합 개혁	29				
	3.	수협개혁	32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43				
	1.	농산물 유통 개혁	34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3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38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44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24					
2.	임산물 유통 개선	45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56
					1.	농지은행제도	65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71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73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76
					5.	농업핵심인력 육성	79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79
					나.	농업법인 활성화	82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88
					라.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88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91
					가.	전문임업인 육성	91
					나.	기능인 영입단 육성	92
					7.	어업인력 육성	94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97
					1.	농업생산기반 확충	97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7
					나.	밭 기반 정비사업	99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100
					라.	수리시설 개보수	101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103
					바.	농촌용수 개발	104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107
					2.	농업의 기계화	111
					3.	농업시설의 현대화	113

목 차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113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118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114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161
다. 축산시설 현대화	116	1.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66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117	가.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166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19	나. 농업의 6차산업화	189
1. 식품산업의 육성	119	다. 향토자원 산업화	192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24	라. 농공단지 조성	195
3. 종자산업의 육성	126	2. 농업의 경영 안정화	197
4. 곤충산업 육성	129	가. 농업재해보험 확대	197
5. 종축산업의 육성	132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200
6.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137	다. 농지제도 개선	201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41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203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41	3.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206
2. 농업 정보화 촉진	145		
3. 임업 정보화 촉진	151		
4. 수산 정보화 촉진	153		
제5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55		
1. 농식품 수출 확대	155		
2. 수산물 수출확대	160		
3.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162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162		
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165		
4. 수산부문 수입관리 대책	167		
제6절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169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169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169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173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75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177		
2. 농업환경오염 경감	180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180		
나. 친환경 비료 지원	181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211
		1. 효율적인 수급조절	211
		2. 민간유통기능 강화	212
		3.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214
		4. 쌀 소비 촉진	216
		제2절 채소산업	218
		1. 노지채소	218
		2. 시설채소	220
		제3절 과수·화훼산업	222
		1. 과수산업	222
		2. 화훼산업	225
		제4절 축산업	228
		1. 한우산업	228
		2. 낙농산업	231
		3. 양돈산업	234
		4. 양계산업	235

목 차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37	으로 육성	316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238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318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241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321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243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323
9. 축산물등급관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45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33
10. 축산물 이력제 추진	248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335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252	사. 가로수 조성·관리	337
제5절 임업	254	아. 학교숲 조성	342
1.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254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344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54	가.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344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260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347
다. 경제림 단지 육성	263	다. 해외조림 확대	348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265	제6절 수산업	350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271	1. 연근해어업	350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271	2. 해면양식어업	355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274	3. 내수면어업	357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78	4. 원양어업	360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83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287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33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92	1. 일반농산어촌개발	365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292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70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300	3.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372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300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374
나. 임업 기계화 촉진	303	가.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374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305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375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309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376
마. 국산재 이용 촉진	312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315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316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			

책제5장

목 차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78
제2절 교육여건 개선	380
1.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380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381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81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83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개선	385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388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388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89
다. 공중보건인사 농어촌 우선배치	390
제4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392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392
2. 농촌 보육여건 개선	394
3. 취약농가 인력지원	395

표 목 차

제1장	표 1-1. 2013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01	표 3-22.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33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2	표 3-23.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135
	표 1-3.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81	표 3-2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136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90	표 3-25.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136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90	표 3-26.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136
제2장	표 2-1. 2013년 농축산물 신통경로 거래액	73	표 3-2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138
	표 2-2.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84	표 3-2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139
	표 2-3.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64	표 3-29.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140
	표 2-4.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84	표 3-30.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141
	표 2-5. '12년도 농식품분야 민원분석	45	표 3-31.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147
	표 2-6. 산림분야 규제 현황	8	표 3-32.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48
	표 2-7.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실적	95	표 3-3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47
제3장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6	표 3-34.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48
	표 3-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76	표 3-35. 국내 근층산업 시장규모 추정	149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86	표 3-36. 주요 가축개량 추세	133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86	표 3-37.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138
	표 3-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96	표 3-38.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8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종신형 기준, 갑)	6	표 3-39.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13년말 기준)	139
	표 3-7.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7	표 3-40.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12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97년~'13년)	7	표 3-41. 농식품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14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7	표 3-42. 1994~2013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144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87	표 3-43. 농업인 정보화 수준(%)	6
	표 3-11. 2013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88	표 3-44.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 (2013년까지)	132
	표 3-12.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38	표 3-45.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17
	표 3-13. 농업법인 주요 경영지표	48	표 3-46.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17
	표 3-14. 경영권설립사업비 지원현황	98	표 3-47. 29개 수출전략 품목	138
	표 3-15. 최근 3년간 입업가능한 영림단 조직 현황	99	표 3-48. TRQ 운용 품목(63개)	6
	표 3-16.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59	표 3-49. 2013년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내역	14
	표 3-17.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89	표 3-50. 2013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15
	표 3-18.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99	표 3-51. 특별긴급관세(SSG) 품목 및 발동현황	61
	표 3-1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10		
	표 3-20.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12		
	표 3-2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12		

표 목 차

제4장

표 3-52. 2013년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I	표 4-15. 숲가꾸기 산물 수집 실적	28
표 3-53.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II	표 4-16.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9
표 3-5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5	표 4-17. 2014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20
표 3-55.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8	표 4-18.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21
표 3-56.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8	표 4-19.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3
표 3-57.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8	표 4-20. 10년 단위 산사태 피해 현황	20
표 3-58.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5	표 4-21.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	20
표 3-5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9	표 4-22.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8
표 3-6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194	표 4-23. 산림박물관개관 현황	25
표 3-61. 부처별 지원 현황	15	표 4-24.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25
표 3-6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	8	표 4-25.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8
표 3-63. 가축재해보험 추진실적	19	표 4-26.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2
표 3-64.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25	표 4-27. 백두대간 보호지역 2단계 자원실태조사 현황	292
표 3-65.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 개요	8	표 4-28. 남한지역 9개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9
표 3-66.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207	표 4-29.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9
표 3-67. 어촌체험마을조성 지원 실적 및 계획	8	표 4-30.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2
표 3-68.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8	표 4-31.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8
표 4-1. 화훼생산현황	25	표 4-32. 임도시설 기본계획(요약)	9
표 4-2. 농업 중 화훼산업 비중	25	표 4-33. 2014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22
표 4-3. 우유 수급상황	22	표 4-34.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9
표 4-4.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3	표 4-35.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34
표 4-5. 최근 5개년 우유급식량 변화	3	표 4-36.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9
표 4-6.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13.12월 기준)	20	표 4-37.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5
표 4-7.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중	25	표 4-3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9
표 4-8.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5	표 4-39.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5
표 4-9. 산림유전자원 보유휘황	25	표 4-40.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리단 조직 현황	9
표 4-10.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	25	표 4-4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10
표 4-11. 목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9	표 4-42. 단기임산물 품목별 추산단지 지정 현황	9
표 4-12.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8	표 4-4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10
표 4-13.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2005년)	4	표 4-44. 2013년 목재 수급 실적	33
표 4-14.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3)	2	표 4-4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17
		표 4-46.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현황(2012년말)	9
		표 4-4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19
		표 4-4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19

표 목 차

제5장

표 4-49.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33	표 5-20.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인원	3
표 4-50. 5대 트레일 및 5개 명산 둘레길 구축계획(안)	37	표 5-21.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3
표 4-51. 전국 등산로 현황	38		
표 4-52. 훼손등산로 정비 실적 및 계획	39		
표 4-53. 트레킹길 조성 실적 및 계획	39		
표 4-54. 도시숲의 규모별 유형과 기능	33		
표 4-55.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33		
표 4-56. 학교숲 조성 실적	33		
표 4-57. 해외조림 추진실적	39		
표 4-58.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3		
표 5-1.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36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6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367		
표 5-4.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369		
표 5-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1		
표 5-6.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추이	2		
표 5-7. 시·도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현황	3		
표 5-8.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3		
표 5-9.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추진실적	375		
표 5-10. 가축분뇨 처리현황(2012)	7		
표 5-1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8		
표 5-12.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8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8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8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1994~2013년)	389		
표 5-16. 2013년도 공중보건조사 배치현황	9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9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9		
표 5-1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9		

그림목차

제3장

그림 3-1.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1
그림 3-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서부충남 고품질양돈사업단) 운영 모델(예시)	4
그림 3-3.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1
그림 3-4.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
그림 3-5.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체계	7
그림 3-6. 농식품 ICT 융복합 지원센터	7
그림 3-7. 농업경영체 DB의 연계/통합 확대계획안	8
그림 3-8. 식품종합정보망 윈스톱 정보서비스 개념도	149
그림 3-9.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16

제4장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3
그림 4-2.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방법	3
그림 4-3.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3
그림 4-4.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3
그림 4-5. 한국의 치산녹화	21
그림 4-6. 산림재해방지 조림	22
그림 4-7. 경제림육성단지 입목생육 상황	4
그림 4-8. 연도별 입목축적	27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녹색댐 기능	8
그림 4-10.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289
그림 4-11.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1
그림 4-12. 등산인구 증가추이	35
그림 4-13. 지리산둘레길 전경	37
그림 4-14.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 (2011년도말 기준)	35
그림 4-15. 녹색네트워크 개념도	33
그림 4-16. 2013년말 가로수 시도별 조성 현황	9
그림 4-17. 2013년도말 가로수 수종별 조성 현황	9
그림 4-18.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40

그림 4-19.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4
그림 4-20.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4
그림 4-21.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22
그림 4-22. 학교숲 효과 분석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343
그림 4-23.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358
그림 4-24.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설치 현장	359

제 1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3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제2절 2013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제3절 2013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13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1 농림수산식품 부문

✎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조혜윤

우리 농업은 저성장 및 농촌 고령화 심화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 확대 등 전면적인 개방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업계 내부에서는 명확한 농정 철학 정립과 새로운 농정방향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왔다.

정부는 농정방향 부재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고 농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인,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경쟁력, 소득, 복지의 3대축을 기초로 25대 중과제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가소득 증대

’13년 농가소득은 약 35백만 원으로 ’12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TO 체제가 출범한 ’94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시장개방과 국내 농식품 소비 감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농가당 농업총수입이 30백만 원을

넘었고, 농업의 소득도 15백만 원을 넘어섰다. 6차산업화 정책등의 영향으로 농업의 소득이 전년대비 15.6% 증가하여 농가소득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가소득 증가에 힘입어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도 '12년 57.6%에서 62.5%로 높아졌고, 60세 미만 농가의 1인당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소득을 넘어서게 되었다.

☑ 유통구조 개선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기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시 긴급 수입 등에 의존하던 정부 주도의 인위적 수급조절방식에서 탈피하여 신뢰와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주요 5개 채소에 대해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10~'12년 평균 19%였던 5대 채소 가격변동률이 '13년에는 12.9%로 축소되었다.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과도한 시장 개입 조치로 지적되던 할당관세 적용을 35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축소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유통경로 비중 확대('12년 8.4% → '13년 11.7) 및 산지조직화 진전 등으로 '12년에 2,919억 원이었던 유통비용 절감액이 '13년에는 4,24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농업 기반 구축

전면적 개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전통농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ICT기술을 융복합하는 '과학기술기반 창조농업 촉진전략'을 추진하였다.

온실·축사 등의 농업시설과 재배·사양관리를 원격으로 자동제어하는 ICT 융복합 모델을 개발·보급하여('10~'13, 21개) 노동비를 20%절감하고 생산성은 30%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용적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촉진을 위해 '7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책·R&D·현장의 연계를 추진하였고, 신기술인증제도 도입하였다.

BT기술을 활용한 종자개발을 통해 장미, 국화 등 59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14억 원이 절감되었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4,986억 원의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 농가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최근 수년간 정체상태에 있던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확대하였다.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ha으로 인상하여 농가당 쌀 직불금 지급액이 '12년 770천원에서 '13년 88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밭 직불 대상품목도 '12년 19개에서 '13년 26개로 확대하여 밭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 수가 '12년 182천호(54천ha)에서 '13년 220천호(73천ha)로 늘어났으며, '14년부터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40만원/ha)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기상이변의 심화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지원 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였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육성(426명)하여 재해피해 조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복구비를 인상하였다.

☑ 농업인 생활·복지 안정 강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농지가격의 2%에 상당하던 가입비를 폐지하면서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12년 2,202건에서 '13년 2,927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12년 266천명(1,077억 원)에서 '13년 285천명(1,192억 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농업인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촌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농어촌특례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정시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던 소득평가액 차감항목을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출비용을 확대하였으며, 소득평가액 산정시 차감되는 직불금 항목도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추가하여 5개로 확대하였

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기존의 보육료 특례효과 유지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육료 특례(15만원 한도)를 보육시설 이용비용(특별활동비, 간식비 등)으로 변경하여 특례의 실효성도 제고하였다.

☑ 소비자 알권리 충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표시제를 개선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12개 품목에 양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의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였고,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에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커피 가공품 4종류(원두, 액상, 조제, 인스턴트)를 추가하였고, 국산농수산물의 경우 양잠산물(누에번데기, 오디, 뽕잎)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식품 안전관리

GAP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집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누에번데기·오디·뽕잎)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가축질병방역 긴급행동지침을 전면 개선하고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평시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2 임업부문

✦ 산림청 산림정책과 서기관 최은형

2013년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산림정책의 틀을 새로이 짜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있던 한 해였다. 주요 산림정책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추진에 큰 탄력을 받았으며, 정부3.0과 규제개혁 등 국정 주요 이슈에서도 선도부처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산림자원의 육성, 임산업의 경쟁력강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관리,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우선 산림정책의 근간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산림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그동안의 입목축적 증가,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인 추진 여건이 크게 바뀐 점과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1년 남짓한 작업을 거쳐 변경계획을 2013년 7월 확정 고시하였다. 계획기간이 현 정부임기와 일치하는 만큼 금후 산림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서는 제2단계 숲가꾸기 사업('09~'13)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산주 자부담금을 폐지하였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시범 지정하여 목재생산 등 본격적인 임업경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운영표준을 제정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임산업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기계화 목재수집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산재생산 노력을 통해 목재자급률을 17%까지 올렸다. 또한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을 통해 약 2천여 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였으며, 5개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구축과 국산목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기반의 규모화, 유통기반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세대별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 산림복지 서비

스 수혜자가 전년대비 16.3% 증가한 1,434만명에 달하였다.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 여가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유아 청소년 대상 숲교육을 확대하고 ‘숲으로 가자’ 캠페인을 확대하였다. 또한, 산림복지와 산림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림분야 6차 산업화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림생태계 관리분야에서는 우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금후 정원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의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였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확대하였다. 산불은 주요시기별 감시인력의 집중배치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예년대비 74%로 수준으로 피해가 감소하였다. 산사태도 취약지역의 적극적인 발굴 조사와 함께 사방사업 확대로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피해를 줄였으며, 소나무재선충은 피해확산에 따라 특별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방제 전담인력을 확충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산림의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여 권역별 양자협력을 확장하였다.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인도네시아), 황폐지 복구(베트남), 아랄해 산림복구(카자흐스탄) 등이 정상간 공동선언문에 반영됨으로써 산림분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확대를 위한 협정의 연장 등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10건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UNCCD COP 1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였으며, 창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외에 건조일수 증가에 따라 봄철 산불피해에 따른 주택소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진화작업 후 복귀하던 산림헬기가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있었다. 또한, 가뭄과 피해목 제거 지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른 수요증가로 목재펠릿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2013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부문

✱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강대일

☑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13년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04.5) 시행 10년차, 마지막 해로서 2013년 투융자규모를 14조 2,913억원으로 계획하여 집행은 91.4%인 13조 58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10년간('04~'13) 「119조 투융자 계획」으로 집행한 금액은 117조 1,940억원으로 계획 123조 2,092억원 대비 95.1%(당초 계획 119.3조원 대비 98.2%)가 집행되었다.

분야별로는 전체 집행액 13조 584억원 중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7조 4,456억원(57.0%),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에 2조 2,567억원(17.3%),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에 1조 7,543억원(13.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1조 6,018억원(12.3%)이 투자되었다.

품목별로는 쌀에 2조 1,484억원(16.5%)이 투입되어 비중이 높았으며, 지원대상별로는 농업인 등에 7조 6,885억원(58.9%)이 투입되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4년 5월에 FTA, 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04~'13)과 대책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119.3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19조 투융자 계획은 2007년 12월에 FTA 확대 및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보완·발표되어 금액으로는 123.2조원으로 증액되었다.

표 1-1 2013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예산(A)	2013년 집행내역				집행률 (B/A)
		예산현액	집행액(B)	차년이월	불용액	
합 계	142,913	147,552	130,584	6,744	10,224	91.4
[분야별]	142,913	147,552	130,584	6,744	10,224	91.4
농업경쟁력 강화	79,388	82,036	74,456	3,729	3,851	93.8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	26,240	27,630	22,567	1,810	3,253	86.0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20,753	20,878	17,543	358	2,977	84.5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6,532	17,008	16,018	847	143	96.9
[품목별]	142,913	147,552	130,584	6,744	10,224	91.4
쌀	23,208	24,837	21,484	2,732	621	92.6
특작.원예	17,083	17,462	14,981	267	2,214	87.8
축 산	14,081	14,450	12,729	357	1,364	90.9
임 업	12,598	12,877	12,381	147	349	98.3
공 통	46,153	47,741	41,426	1,787	4,528	89.8
기 타	29,790	30,185	27,583	1,454	1,148	92.6
[지원대상별]	142,913	147,552	130,584	6,744	10,224	91.4
농업인 등 지원	86,700	88,625	76,885	2,643	9,097	88.7
SOC 사업	29,270	31,408	27,595	3,651	162	94.3
정부사업	26,943	27,519	26,104	450	965	96.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19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1999~2003),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 계획(2004~2013)에 따라 1992~2013년간 국고기준 약 186.1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장지향적인 농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농업 전반에 걸쳐 전업화 및 규모화 진전
 - 경지 3ha 이상 농가 : ('04) 82천호(6.6%) → ('13) 98.9천호(8.7%)
 - 양돈 1천두 이상 농가 : ('04) 2.8천호(21.6%) → ('13) 3.0천호(52.4%)

- 한우 50두 이상 농가 : ('04) 4.4천호(2.4%) → ('13) 14.4천호(12.1%)
-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확대와 김치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 친환경인증 농산물 : ('04) 461천톤 → ('13) 1,181천톤
 - 안전성기준 부적합률 : ('04) 3.8% → ('13) 1.4%
 - 농축산물 수출실적 : ('04) 20.0억불 → ('13) 57.2억불
- 중·장기적인 농림예산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속 확충

(단위 : %)

구 분	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밭기반 정비율	57.9	74.4	77.6	81.5	85.2	88.6	92.0
수리답율	78.0	79.5	79.8	80.1	80.4	80.6	80.8(p)

- 농촌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의 산업화 등을 통해 도·농상생 토대구축 및 지역 개발 촉진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04) 76개소 → ('13) 712개소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04) - → ('07) 4개소 → ('13) 65개소
-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 면단위 상·하수도 시설 등 확대로 생활여건 개선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04) 35.2% → ('12) 62.2%
 -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04) 18.2% → ('13) 60.6%(p)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13년 : 40천명, 1,021억원),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13년 : 월평균 290천명, 1,238억원) 경감 등 추진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경영 안정장치 강화
 - 재해보험 가입률 : ('04) 6개 품목(20.1%) → ('13) 40개 품목(19.1%)
 - 가축공제 가입률 : ('04) 5개 축종(24.1%) → ('13) 16개 축종(77.3%)
-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 예산에서 직불제 예산금액 확대

- 직불금 비중 : ('04) 8,675억원 → ('13) 16,157억원

2 임업·산촌 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황인욱

가. 임업·산촌부문 투융자 실적

2013년도 임업부문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12년도 1조 7,951억 원 보다 3.9% 증가한 1조 8,658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87억원, 농특회계 5,991억원, 혁특회계 87억원, 광특회계 3,166억원 및 책특회계 427억원이 편성되었다.

부문별로는 숲가꾸기, 조림 및 묘목생산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에 6,913억 원을 투자하였고,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휴양등산증진 등 산림자원 이용에 4,590억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사방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5,316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사업에 1,839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회계·부문별 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2예산 (A)	2013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B)		
계		17,951	18,488	18,658	707	3.9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8,836	8,970	8,987	151	1.7
	■ 농 특 회 계	5,670	5,838	5,991	321	5.7
	■ 혁 특 회 계	194	87	87	△107	△55.2
	■ 광 특 회 계	2,831	3,166	3,166	335	11.8
	■ 책 특 회 계	420	427	427	7	1.7
부 문 별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191	6,760	6,913	628	10.0
	■ 산림자원이용	4,267	4,590	4,590	323	7.6
	■ 산림자원보호	5,711	5,299	5,316	△301	△5.4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782	1,839	1,839	57	3.2

자료 : 산림청, 2013년

나. 임업부문 투융자 성과

☑ 대·내외 정책여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촉진 등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4.14. 시행)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산림부문 탄소흡수원을 규정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이 제정되었다.

또한, 목재의 탄소저장기능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13.5.24. 시행), 산림자원육성 및 재해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통적인 임업부문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투융자 성과

임업부문은 그동안 국토녹화와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기반 구축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간별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2차 치산녹화기간(’73~’87)에 국토녹화 달성
- 3차 산지자원화 기간(’88~’97)에 녹화바탕위에 산지자원화기반 조성
- 4차 산림기본계획기간(’98~’07)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ha당 임목축적 : (’79) 17.9m³ → (’00) 63.5m³ → (’07) 97.8m³ → (’10) 125.6m³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ha당 평균임목축적은 125.6m³로 증가하였으며, 국산재 생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목재자급률은 16.2%로 증가하였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여 국유림률 24%를 달성하였다.(추정치)

아울러, 숲가꾸기·조림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임도시설 확충 및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림사업 생산성을 높였고, 맞춤형 경영지원,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산림문화체험·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림휴양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등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체계구축, 산사태방지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재해예방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3 수산업·어촌 부문

✕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동규

가. 어업·어촌부문 투융자 실적

2013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9,114억원으로, 2012년 8,150억원에 비해 964억원(11.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보면 수협경영정상화지원, 어업지도단속, 수산시험연구(R&D), 유류피해지역지원 등 일반회계에 1,733억원(19.0%),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수산자원조성,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연근해어선 감척, 국가어항건설 등 농특회계에 6,285억원(69.0%),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등 광특회계에 1,097억원(12.0%)이 편성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은 2013년 6,033억원으로 2012년 5,723억원에 비해 310억원(5.4%) 증가하였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에 1,229억원(20.4%),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에 1,340억원(22.2%), 산지 및 소비지유통개선 사업으로 1,318억원(21.8%) 등이 편성되었다.

제 3 절

2013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농림수산식품 부문

✱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김재경

☑ 예산편성 방향

기본방향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급·물가안정, 가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선진화 등 당면현안 해결과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농림수산식품분야 미래 성장 준비에 중점을 둔 첨단기술 개발, 생명산업 육성 등 농업의 성장기반 확충, 농업·농촌 체질 개선 및 소득안정 지원 강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 농촌 지역 활성화 및 농업인 복지 지원 내실화,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등 국정 과제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 필요성 및 실수요 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타당성 점검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농업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중점편성 방향

먼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원예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첨단·고부가가치 생산·가공 등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를 위해 종자·생명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를 위해 계약재배 및 비축사업 확대 등으로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효율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과 농업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등 사전 예방적 지원 확대 및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및 영농재개를 위한 재해대책비 등 사후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의 정주·생활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농지연금, 가사·영농 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보육시설 확충, 학자금 대출 지원 등 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예산편성 규모

2013년 예산의 전체 모습

2013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전체 규모는 13조 5,268억원(추경미포함)으로 2012년 대비 1.1%(△1510억원) 감소하였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6개 예산의 규모는 8조 2,225억원이며 7개 기금의 규모는 5조 3,04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2조 3,953억원, 식품업산업 7,339억원 등을 투자하였다.

부문별 규모 및 주요 특징

첫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식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농업 체질강화 부문에 3조 673억원을 편성하였다. 축산·원예·과수 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영농규모화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예산을 신규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투자 및 현장 중심의 농축산식품 R&D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가축질병 대응체계 구축 지원 등 사전 예방적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둘째,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2조 907억원을 편성하였다. 수확기 쌀값 및 '12년 실지급면적을 고려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예산은 적정 실소요를 반영하였고,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70만원/ha에서 80만원/ha으로 10만원 상향 반영하였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은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소요에 따른 적정 수준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FTA 등에 따른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예산 확대 및 FTA 대응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직불도 지속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에 1조 6,484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농촌 기초생활 정비를 위한 농산어촌종합개발 등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하였다.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건강·연금 보험료와 고령농에 대한 농지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사 및 영농도우미, 보육시설 확충,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학자금 대출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넷째,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양곡관리 및 농산물유통 분야에 3조 4,995억원을 편성하였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

지매입·비축 등 쌀 수급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농축산물 비축 확대, 관측사업 및 자조금 지원 강화,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등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소비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과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설 현대화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영농을 가능케 하기 위한 농업 생산기반 예산을 2조 894억원 편성하였다. 이상기후 등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안전영농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개발 및 종합적인 영농기반 정비를 위해 새만금 등 대단위 간척지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여섯째,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7,339억원 편성하였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술·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정보·평가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식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홍보 등 한식세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등 공세적·전략적 수출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부문별 재정부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3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부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2예산(A)	'13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
총지출(예산+기금)	136,778	135,268	△1,510	△1.1
◇ 예산 일반지출	91,189	82,225	△8,964	△9.8
◇ 기금 일반지출	45,589	53,043	7,454	16.4
I. 사업비	133,327	131,746	△1,581	△1.2
▣ 농업·농촌	125,172	123,953	△1,219	△1.0
○ 농업체질강화	27,506	30,673	3,167	11.5
○ 농가소득·경영안정	19,710	20,907	1,196	6.1

구 분	'12예산(A)	'13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
○ 농촌개발·복지증진	15,902	16,484	581	3.7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330	34,995	2,666	8.2
○ 농업생산기반조성	29,723	20,894	△8,830	△29.7
▣ 식품업	6,702	7,339	637	9.5
▣ 기타사업비	1,453	453	△999	△68.8
II. 기본적경비	3,451	3,522	71	2.1

2 임업 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황인욱

가. 편성방향

2013년도 산림예산은 첫째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 둘째 “기후변화 대응 등 숲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기본방향과 재정사업 성과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흡수 역량을 강화,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산림복지체계 구축,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및 금수강산 생명축 복원,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과 세계녹화 추진 등 다섯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나. 예산규모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095억원으로 전년대비 1.9%(362억원)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법정부담금, 임목죽매각대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8,658억원으로 전년대비 3.9%(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예산의 0.53%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87억원, 농특회계 5,991억원, 광특회계 3,166억원 및 책특회계

4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혁특회계인 산림항공본부 혁신도시(원주) 이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55.2%(194억원) 감소한 87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2예산 (A)	2013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B)		
계		17,951	18,488	18,658	707	3.9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8,836	8,970	8,987	151	1.7
	■ 농 특 회 계	5,670	5,838	5,991	321	5.7
	■ 혁 특 회 계	194	87	87	△107	△55.2
	■ 광 특 회 계	2,831	3,166	3,166	335	11.8
	■ 책 특 회 계	420	427	427	7	1.7

자료 : 산림청, 2013년

다. 부문별 투자실적

부문별 투자규모는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에 6,913억원, 산림자원 이용에 4,590억원, 산림자원 보호에 5,316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사업에 1,839억원이며 2012년 대비 증액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2예산 (A)	2013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B)		
계		17,951	18,488	18,658	707	3.9
부 문 별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191	6,760	6,913	628	10.0
	■ 산림자원이용	4,267	4,590	4,590	323	7.6
	■ 산림자원보호	5,711	5,299	5,316	△301	△5.4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782	1,839	1,839	57	3.2

자료 : 산림청, 2013년

부문별 세부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서는 숲가꾸기·조림사업을 내실화하고, 녹색R&D 투자확대와 목재활용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임도시설, 기계장비 보급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기능별 숲가꾸기로 산림의 관리를 강화하고, 조림은 경제림 조성을 확대하였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조림을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의 확충과 기계장비 보급을 통하여 목재 생산성을 높이는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숲가꾸기 : ('12) 2,780억원 → ('13) 2,863억원
 - * 산물수집 : ('12) 556억원 → ('13) 556억원
- 조림 : ('12) 720억원 → ('13) 858억원
- 임도시설 : ('12) 664km, 1,198억원 → ('13) 721km, 1,354억원
- 임업기계장비 보급 : ('12) 513대, 60억원 → ('13) 256대, 60억원

아울러, 목재펠릿 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이용가공사업을 지속 지원하였다.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12) 178억원 → ('13) 204억원
 - * 펠릿제조시설 조성 : ('12) 1개소 → ('13) 4개소
- 산림경영자원육성 : ('12) 128억원 → ('13) 229억원

둘째, 산림자원 이용 부문에서는 임업인 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고, 고부가가치인 청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활용한 휴양·체험·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산림경영기술 지도·보급과 임업인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사업을 지속 지원하였다.

- 특화품목 등 산림경영지도 : ('12) 221억원 → ('13) 260억원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12) 398억원 → ('13) 371억원

산림휴양·체험·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공간 확충과 고객 맞춤형 산림문화체험·교육활동 및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도시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하는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 산림휴양등산증진 : ('12) 84억원 → ('13) 161억원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단지 : ('12) 270억원 → ('13) 405억원
-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 : ('12) 327억원 → ('12) 327억원

셋째, 산림자원 보호 부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해 방제물량 등 여건 변동을 반영하였다.

- 산불방지대책 : ('12) 572억원 → ('13) 590억원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2) 10천명, 337억원 → ('13) 10천명, 329억원
- 사방사업 : ('12) 2,337억원 → ('13) 2,722억원
- 산림병해충방제 : ('12) 698억원 → ('13) 704억원

또한, 백두대간 및 산림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였다.

-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12) 190억원 → ('13) 200억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 ('12) 505억원 → ('13) 363억원
-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복원 : ('12) 201억원 → ('13) 130억원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산림항공본부의 혁신도시(원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국가산림통계 : ('12) 72억원 → ('13) 83억원
- 산림자원정보화 : ('12) 78억원 → ('13) 80억원
- 산림항공본부 이전(서울→원주) : ('12) 194억원 → ('13) 87억원

제 2 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제3절 농림수산업분야 행정규제 개혁

제 1 절

협동조합 개혁

1 농협 개혁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정미영

☑ 시행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12)하고,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드디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20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경제사업은 농협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17년까지 경제지주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4.96조원의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사업부제 구축 등 사업이관을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족자본금(계획 : 이차보전 4 + 현물출자 1)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향후계획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협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 졌지만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출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농협의 경제사업을 차질없이 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이관하여 농협의 판매·유통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령 개정 등을 점차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활성화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며, 효율적인 사업이관과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 산림조합 개혁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임원필

☑ 시행배경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14년 현재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였으며, '78년도부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880명)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경영 기술지도,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제도의 도입,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 마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과 산주와 임업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3년 현재 136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여건미흡으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일부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는 2005년도에 최초로 중앙회소속 14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시행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말 기준으로 자산은 2조 3,165억원, 부채는 2조 1,200억원, 자본은 1,9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결과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수협외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 8. 3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 2. 4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시행일 이전에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여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도에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1차년도 예산 56억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사업을 5년간('08~'12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35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2007년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19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9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미만인 6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이상 2%미만인 10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3개 조합을 합쳐 모두 13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였다.

2007년말 기준 6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대구조합 합병('08), 전북표고조합 파산('08),

고흥조합 신용사업 양도('09)하였으며, 1개조합은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10)되어 추가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2개조합은 경영개선으로 경영정상화('10, '11) 되어 '11년말 구조조정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말 기준 부실우려 9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 에 필요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해당조합에 각각 조치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7개 조합은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165억 원(국비 145억원, 산림조합 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5년간 구조개선사업결과 2008년 19개 조합에서 2012년말 10개 조합으로 감소하였다.

'13년부터는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순자본비율 2%미만인 7개조합, 자선건전성등이 취약한 3개 조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와 경영개선약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평가 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산림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국고 145억원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4년에 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9억원으로 순자본비율 2%미만 6개조합의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합의 경영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여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하는 등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수협개혁

☒ 수산정책과 사무관 하두식

☑ 시행배경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16년부터 바젤Ⅲ·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을 제정(2013.11)하였다.

제정 주요내용은 중앙회가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은 2016. 12월부터 은행 자본규제 강화(바젤Ⅲ) 및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신용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사업 부문을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유통·마케팅·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민관합동의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13. 1), 이를 토대로 전문가 및 수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기본방안”을 수립하였다.(2013. 9)

3)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2개 일선수협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순자본비율을 산출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3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2개 조합 중 1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이행목표 부여 등 적기 시정조치를, 1개 조합은 회생가능성이 낮아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하여 ‘14년 말까지 합병 등의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향후계획

2016년 중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조합의 경영부실화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부실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농산물 유통 개혁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기주

☑ 시행배경

농산물 생산은 기상변화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가격변동이 심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1999년부터 농업관측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파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관측대상품목을 3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상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한 노지채소와 과수의 수급안정을 위해 노지채소는 '95년부터, 과실은 '01년부터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업대상 품목을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

하였고,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물량을 800천톤까지 확대하였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2002년)과 감귤(20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명절 수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어 사과, 배만 대상으로 100천톤 확대하였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시행 당시의 대상 품목(파프리카, 참다래)을 25개로 확대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조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적립된 자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에는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2012.2.22)하였다.

향후계획

향후 수급안정사업 확대를 통해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채소 및 과실 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 시행배경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를 야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배추값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에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2012년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3.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유통비용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13.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새롭게 수립한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주체들의 유통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 '농산물 B2B',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체계적인 수급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생산자·소비자·정부·학계 등이 참여하여 수급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확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수립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과거에 비해 새로운 농산물 유통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주요 추진 과제는 로컬푸드 기반의 직거래 확대, 체계적인 수급정책,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들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B2B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 확대

2013년부터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매장 사업자에 대해서 인테리어·시설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 결과, 20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3년말에는 32개소까지 증가하였다.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한데 모아 가정으로 배송하는 형태의 직거래인 ‘꾸러미사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또한, 직거래의 장점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거래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직거래 유형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1회 직거래 페스티벌을 10월말에 개최하여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거래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거래실적은 1조 2,347억원(수산/가공제외)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하였다. 농협을 통한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는 2013.9월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농협중앙회 도매분사를 통한 유통계열화 거래실적은 1조 47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경유할 경우 도매시장 경로에 비해 14.6%p 유통비용율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에서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였는데, 패커를 통한 유통시 한우는 8.7%, 돼지는 6.0%의 유통비용율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실적은 1조 2,034억원으로 66.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의 신유통이 확산된 결과, 2013년 신유통을 통한 거래액은 5조 50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6%가 증가하였다.

표 2-1 2013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단위 : 억원)

구분	직거래	친환경 전문	생협	aT 사이버 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농산물	축산물
2012년	10,173	934	2,540	8,504	9,596	7,224
2013년	12,059	1,031	2,991	12,347	10,047	12,034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논의해 왔던 농업계의 숙원인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농협법 개정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12.3.2 시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삼도록 하였다. 산지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앙회가 책임지고 판매한다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의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일례로 농협안심물류센터¹⁾를 경유할 경우 도매시장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율이 14.6%p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지농협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수집하고, 농협 도매유통회사는 전국단위 물류센터¹⁾를 활용하여 소비지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수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협 직거래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생산량의 10% 내외에 불과한 계통출하물량을 2020년 50%까지 확대하여 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 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²⁾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 1)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계획. 수도권(안성)은 2013년 9월, 기타 4개소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
- 2) 현재 우리나라에는 50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121개의 도매법인과 55개의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절반 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시행하였다.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방안 마련('13.5월)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가락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확대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T/F 구성('13.7월),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마련('13.8월)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락도매시장에 상장애외품목 대금정산조직을 설립('13.11월)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안법령을 개정(법률개정안 '13.11월 국회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13.11월 개정·시행)하였다.

* 매수집하 허용 및 가공·물류 등 겸영사업 범위 확대

** 중도매인간 거래 단계적 허용을 통해 소매점의 one-stop 쇼핑 지원

수급관리 체계화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농업관측 고도화,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계약재배, 비축사업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관측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과 정부의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농축산물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측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관측 내용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013년부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부(농식품

부, 기재부, 농진청 등)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3년에만 총 8회 개최하였고, 수급조절위원회를 농안법 시행규칙에 올림으로써 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수급조절매뉴얼도 2013년부터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제정하여 매월 가격대별로 위기구간을 설정하고 각 위기구간별 정부 대책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정책 투명성을 높였다.

농산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생발전 추구

유통개선 대책의 마지막 분야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제도 정착이다. 19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조직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 유통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의 감액이나 반품 시 그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저가납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1년 5월에는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지에 배포하였다. 2012년에는 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계약체결부터 이행까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 11월 산지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소비자단체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사례 및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비자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산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년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는 8.4%에서 11.7%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통비용절감액 추정치도 2012년 2,919억원에서

4,24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배추 등 5대 채소류의 전월대비 가격변동율도 19.0%(’10~’12년 평균)에서 12.9%로 감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외부평가를 받아 점검 받고 있으며, 2014년 중에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조민경

☑ 시행배경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 방문객 수는 29만명에 달했다. 2009년 매출액은 51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31만명이 다녀가 57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

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에는 1조 6,073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관문 홈페이지(싱싱장터, www.esingsing.co.kr)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정례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고은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과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나아가 거래 안정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단위: 만톤, 조원)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물량	575	607	659	623	650
금액	6.1	6.9	7.3	9.6	1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공영도매시장(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 충남천안시장)를 선정하여 국고 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전오정시장은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천안도매시장

은 '12년에서 '14년까지 연면적 30,356㎡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각화 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적극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3.3월), 시설정비위원회 구성('13.5월), 사업시행지침 마련('13.6월),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13.6월, 수원도매시장) 등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였다.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 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2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방안 마련('13.5월)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가락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확대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T/F 구성('13.7월),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마련('13.8월)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락도매시장에 상장예외품목 대금정산조직을 설립('13.11월)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안법령을 개정(법률개정안 '13.11월 국회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13.11월 개정·시행)하였다.

* 매수집하 허용 및 가공·물류 등 겸영사업 범위 확대

** 중도매인간 거래 단계적 허용을 통해 소매점의 one-stop 쇼핑 지원

평가 및 향후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임산물 유통 개선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주식

☑ 시행배경

임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이 없어 수확 후 홍수출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장가격의 불안정은 지속하였으며, 다단계적 유통구조로 생산자는 저가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지속하였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에 대한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임산물유통체계 기반을 확충하고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유통·가공분야 지원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임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국내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경수유통센터 4개소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72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3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79	43,778	39	21,928	13	6,600	12	6,000	8	3,000	7	3,000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³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어린나무가 62%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2개소(2013년 18.3억원)지원하고, 지리적표시등록품목에 대한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 지원 12개소(2013년 7.2억원) 및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가공기계장비 지원을 635개소(2012년 6.4억원)하고 있다.

최근 임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안정성과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소비자의 관심도가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 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49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였다.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현재 6개품목(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 조경수, 산채류)에 대하여 산지 생산량,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전망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13년 6억원)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8년도까지 692개(11억원)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미 구축한 업인홈페이지 운영개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숲으로」임산물 종합홈쇼핑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표 2-4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등록연도	등록번호	품목	등록번호	등록연도	품목
2006 (8)	1	양양 송이	2009 (6)	21	울진 송이
	2	장흥 표고버섯		22	황성 더덕
	3	산청 곶감		23	악양대봉감
	4	정안 밤		24	영동 곶감
	5	울릉도 삼나물		25	가평 잣
	6	울릉도 미역취		26	홍천 잣
	7	울릉도 참고비	27	보은 대추	
	8	울릉도 부지갱이	28	청도 반시	
2007 (5)	9	경산 대추	2010 (6)	29	정선 곤드레
	10	봉화 송이		30	거제맹종죽순
	11	청양 구기자		31	태백 곶취
	12	상주 곶감		32	인제 곶취
	13	남해 창선고사리		33	덕유산고로쇠수액
2008 (7)	14	영덕 송이	2011 (7)	34	진도 구기자
	15	구례 산수유		35	황성 참숯
	16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36	담양 죽순
	17	영암 대봉감		37	무주 머루와인
	18	천안 호두		38	충주 밤
	19	문경 오미자		39	함양 곶감
	20	무주 머루		2012 (5)	40
			41		강릉 개두릅
		42	화순 작약		
		2013 (2)	43	화순 목단	
			44	원주 옷칠액	
			45	무주 천마	
			46	원주 옷칠액	

또한,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식용 임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GAP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을 지원(2009년 2억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보완을 지원(5개소, 2.5억원)하였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계획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다양한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유통·가공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리적표시등록 등을 통한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과 국내 임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학조

☑ 시행배경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 상장제로 전환된 1997년을 기점으로 소매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금결제와 영세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유통 관련 주요 시설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 하는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졌으나, 산지위판장의 시설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3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광특예산 세부사업인 수산물유통시설건

립 사업으로 12개소 1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 위판장 건립(2개소, 18억원), 수산물 직매장(3개소, 8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6개소, 83억원), 해양수산물 합공간(1개소, 5억원) 건립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중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농특예산으로 수산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한 후 대형 소비처 등에 공급하는 산지거점유통시설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건립 지원(15년, 5개소 준공 예정)으로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FPC·위판장 등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 단위에서 집적하여 판매하는 도매 중심 유통시설인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지원(16년, 1개소 준공 예정)을 통해 FPC와 분산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새로운 유통경로 창설로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을 통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3 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1 농림수산식품 부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박종민

☑ 시행배경

2013년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총 921개(주 규제 395개, 부수 규제 526개)로 등록규제 대부분이 국민의 먹거리 관련 안전·유통관리 및 농축산물 품질, 검역·검사와 관련된 불가피한 규제이다.

2013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여건을 보면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우리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밀돌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내외 경제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투자 위축, 내수시장 악화 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 소비위축 등이 나타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및 서민생활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추진 동력이 강력한 새정부 초기, 규제개혁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흡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민생

관련규제는 합리화를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규제를 구현하며,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과 동반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규제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문 규제개혁은 농업 관련 산업 진입규제 및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농촌지역 투자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불편요인 해소 및 시설기준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불편 및 애로해소 등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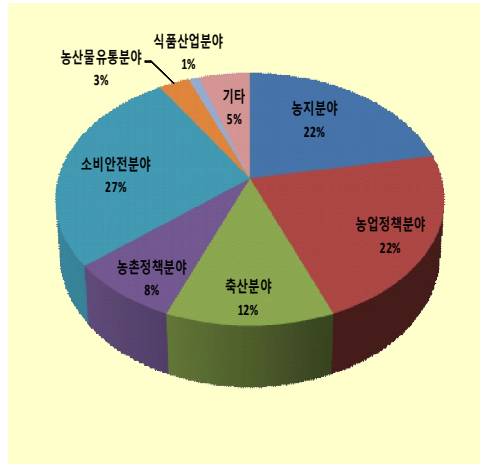
2013년도에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각종 애로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민원을 재검토하여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농식품분야 손톱 밀 가시뽑기 특별공모」 및 전문지 분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고,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한 농정확인 및 소통 강화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농식품분야 전체민원('12년도 9,477건)을 분석하여, 중점개선분야를 선정하고 과제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13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개선과제 62건을 발굴하였다.

표 2-5 '12년도 농식품분야 민원분석

분야별	민원건수	비율(%)
농지분야	2,035	22%
농업정책분야 (농업정책, 농협, 농자재)	2,035	22%
축산분야 (축산정책, 위생·방역관리 등)	1,077	12%
농촌정책분야	781	8%
소비안전분야 (원산지, 친환경, 검역 등)	2,589	27%
농산물 유통분야	313	3%
식품산업분야	139	1%
기타	508	5%
합 계	9,477	100%



- 새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현장의 규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전국 정책수요자(지자체, 농식품단체·협회)를 대상으로한 「농식품분야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공모」와 농업전문지 등에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정책건의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총 85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였다.
 - 농식품 현장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장·차관이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 2013년 장관 현장방문 : 총 28회, 29개 시·군, 42곳 방문



수출농업 제도개선



귀농귀촌 제도개선

-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한 법령 제·개정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불요불급한 규제 등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다

* 2013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실적 : 11회(39개 법령)

합리적인 신설·강화 규제 도입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흡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 품질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민생 관련규제는 합리화를 통해 좋은 규제를 생산하는데 주력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실인증을 한 부적격 인증기관이 재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였다.
- 종자산업 활성화 및 우량종자 유통을 위해 유통종자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수산물을 인증 농수산물로 표시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표시 및 거짓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중 타부처 협조필요 과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기재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하여 농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하고, 농지연금 가입비(담보농지 가격의 2%)를 폐지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하였다.

- 발농업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해 기재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발농업직불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작물도 발농업직불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 자연재해 농어가 피해지원을 위해 기재부, 방재청, 해수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규제개선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언론·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SNS, 블로그, 전문지홍보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지속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총 890회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스토리텔링기법의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규제개혁 성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현장에 해소,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규제개혁에 성과를 인정받아 전부처 대상 규제개혁부문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2012~201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향후계획

2014년에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13년 중에 확정·발표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일선현장 집행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고객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농식품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변화된 농업 경영 환경에 맞게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정비 과제의 효율적인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 현장간담회, 특별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등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산림 부문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함태식

☑ 규제현황

산림분야의 규제는 2004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 산림법 분법화 및 2007년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통합으로 감소한 후,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되면서 규제가 증가하여 2013년말 현재 18개 법률 및 하위법령 등에서 39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표 2-6 산림분야 규제 현황

(단위 : 건)

법 률 명	규제수	법 률 명	규제수
산림조합법	119	입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13
산지관리법	4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1	사방사업법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8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산림보호법	1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8	해외농업개발 협력법(농림부 소관)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1

이중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인 ‘경제적 규제’가 262건(67%)으로 가장 많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는 63건(16%),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에 속하지 않으면서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적 규제’가 68건(17%)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규제내용별로 보면 산림조합 관련 150건, 입지 등 산지 관리 관련 69건, 목재산업 관련 32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경제혁신 등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과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림분야 규제는 산지입지나 목재산업 등과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령제한 기준이나 입업후계자 선정기준과 같이 개인의 사업참여 등을 제한하는 규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 산림청에서는 25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모두 개선을 완료하였다. 자체 선정 과제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에서 기업인들로부터 접수받은 건의과제인 ‘손톱밀가시’ 과제도 2건이 있었다. 손톱밀가시는 대나무 집성제도 조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두 가지였으며, 201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 자체 개선한 과제는 <표 3-2-2>와 같다.

표 2-7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실적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 (산림보호법 시행령)
2	입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입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확대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개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	목재펠릿 품질 기준 개선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 및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 개선 (국립산림과학원고시)
5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 하고 의무적으로 표시 (국립산림과학원고시)
6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까지 확대하여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7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8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의 1차, 2차 과태료 금액을 완화(1차 100→50만원, 2차 150→100만원, 3차이상 200→2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9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 (산림청고시)
10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 (2013년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11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연장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잦은 연장에 불편 해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무기계약직 정년을 정규직과 같이 만57세에서 만60세로 연장 (산림청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
13	사용허가 또는 대부분 국유림의 교환제도 개선	국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공익사업,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 국유림 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분 국유림과 사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	종묘산업 등록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5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산림사업 대행 및 공고 절차를 명확히 이행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림사업 시행시 산주 동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산지전용허가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체계화 되도록 개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7	특별관리입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특별관리입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자가 생산신고 시 생산적합성조사서 제출 생략(전문기관에서 대행)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8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산지전용시 면적, 표고, 평균경사도 또는 입목축적 등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 (산지관리법)
19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20	케이블카 입지 확대	공원지역과 같이 일반산지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 정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21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도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도로 등으로부터 보이는 지역에서도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22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규제 완화	공동명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23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채석단지 지정 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산림청장→시·도지사) (산지관리법)
24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준공 허용 확대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복구준공이 가능하므로 단계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완료된 부분에 대한 사업개시가 불가능한 것을 단계별 부분준공(중간복구)을 통한 사업개시 허용 (산지관리법)
25	입업용 산지에서 행위제한 완화	환경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입지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향후계획

2014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규제의 감축, 네거티브·일몰제 확대, 핵심규제 개선, 미등록규제 발굴,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용을 비롯하여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도입하여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분야에서는 기존 규제 393건 중 국무조정실과 190건을 중심으로 10% 이상을 감축하고, 30% 이상의 규제에 대해 일몰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여 감축 8%, 일몰설정 27%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급효과가 크거나 다수부처와 관련된 핵심과제는 12개 분야 44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손톱밑가시 과제로 선정된 2건은 상반기중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 3 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제5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1 농지은행제도

✎ 농지과 사무관 박홍진

☑ 시행배경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20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 및 사업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8.12.29)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연도	1990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
사업명					농지연금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임대·매도 수탁			
	농지(영농) 규모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1) 농지유동화정보제공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www.fbo.or.kr)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어촌체험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 '06.1월) 및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12.3월)와 연계하여 귀농,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1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농지실거래가격(이용상황별, 읍·면·동별, 최고·최저·평균)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시시장 거래 형성, 귀농·귀촌 준비자 및 농지 매도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농지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384ha 1,232억원, 농지임대차 1,219ha 344억원, 농지교환·분합 6ha 9억원 등 총 2,609ha 1,584억원을 3,22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조 8,229억원을 지원하여 166,976ha의 농지를 규모화시켰다.

표 3-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계	1990~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 적	166,976	143,504	5,863	5,220	4,282	2,787	2,711	2,609
금 액	68,229	55,579	3,204	2,512	2,118	1,611	1,621	1,58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호당 평균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화 사업을 통해 139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4천호에서 2013년 70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3년 5.9ha로 2.3배 이상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3) 5.9

이는 2013년 쌀 재배농가(700천호)의 평균 경영규모 1.19ha의 4.9배의 규모이다. 또한, 2013년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416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33천ha)의 49.9%로서 쌀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관리를 통해 농지의 이용효율화를 도모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10.1.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16,487농가에 9,706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6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호, ha)

구 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115,799	219	6,613	7,997	9,737	27,237	14,948	15,923	16,638	16,487
면 적	67,597	110	3,372	4,277	5,162	15,956	8,118	10,837	10,059	9,70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임대 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수준에 해당하는 저가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 지급으로 농가 부담을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회생을 도모하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2,6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제한 상한을 완화(만 70세 이하 → 만 75세 이하)하였다.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5,917	183	444	490	635	1,148	978	1,009	1,021
면 적	7,761	311	629	696	878	1,369	1,313	1,302	1,252
금 액	14,235	422	953	1,195	1,700	2,400	2,400	2,600	2,56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5)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 하고, 매입 비축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주어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730ha를 매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입한 농지 2,651ha 중 2,630ha를 2,964농가(농가당 0.9ha)에게 임대해 주었다.

표 3-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호, 억원)

구 분	매 입					임 대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 적	2,651	495	711	715	730	2,630	192	755	876	807
농 가	4,444	829	1,175	1,236	1,204	2,964	262	831	1,019	852
금 액	5,587	750	1,573	1,599	1,665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6)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의 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중신형 기준, 감평)

(단위 : 만원)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51만원	58	66	77

2013년까지 총 가입건수는 2,927건이며, 총 452억원의 연금액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81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표 3-7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가 입 (건)			평균 연금액 (만원)			담보농지 (m ² , 백만원)	
계	종신행	기간형	계	종신행	기간형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2,927	868	2,059	81	87	79	4,217	1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누계)

향후계획

농지구묘화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 동안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수료율 인하(평균 10 → 5%),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사업활성화 방안('13.10)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 문제 및 환매대금 일시 완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도록 '14.1부터는 담보농지 평가방법(감정평가 도입) 개선·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이자율 인하(4%→3)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경감 및 월지급액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14.5에는 가입연령 요건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를 통해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 차이가 많은 고령농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춘태

☑ 시행배경

2013년 전체 농가인구 2,847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37.3%(1,062천명)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1,142호 가운데 65.2%(744천호)는 경지 규모가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 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 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1)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

흥 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 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였다. 2011년, 2012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 대상자 범위를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공사에서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까지 확대하였다.

2)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및 사업 홍보 추진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의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증대,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일부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0년 이후 경영이양 신규 사업물량을 재조정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373회 7천명)하였으며, 지역별 8개 케이블방송 자막 방송, 지방지 129회 광고 게재, 안내문 7만매, 리플릿 3만매, 현수막 설치 167개, 지역신문(시·군단위) 169회, 포스터부착 1만부, 좌담회 개최 121회 3천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 고령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99.8천명에게 직불금 4,001억원(1인당 연간 4,00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72.5천ha를 전업농 69.6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97년~'13년)

(단위: ha, 백만원, 명)

예 산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등 지원현황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1인당 양수면적
105,298	547,419	99,799	72,622	434,213	69,557	1.04

※ 매매·임대차 중복지원자 제외(고령농업인 2,959명, 전업농 12,753명)

☑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수대상자 및 이양대상자 연령 확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구조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울러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유통정책과 서기관 신우식

☑ 시행배경

FTA, DDA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

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공동계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 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0년까지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 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및 소비지 시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에서 통합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57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부터는 통합경영체 위주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좀더 강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월)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규모 또는 마케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직은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

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시행배경

농업종합자금은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 등 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 경영체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산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추진 경과

199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에는 전업농육성사업 및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13개 시설사업 자금을 통합하였고, 2002년에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 등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2개 운전자금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3천만 원 이상),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조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2004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2천만 원 이상),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객토자금, 전통식품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2005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1천만 원 이상),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인력육성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따라 '07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설립기간이 짧은 신생 영농조합법인 등도 담보 제공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사업은 능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필요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현황

지원조건은 연리 3%,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이며, 지원규모도 최근 5년 평균 13,886억원 규모로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원)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융자금모	69,430	11,924	14,681	13,744	15,250	13,831
이차보전액	3,199	535	641	794	659	570

지원성과

농업종합자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대출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 결과 무리한 과잉투자 해소와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불식된 것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아울러,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점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 지원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 자금지원	연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향후계획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대출절차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 사전감지 및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핵심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박경희

☑ 시행배경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2013년 3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연령을 만 45세 미만을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함)의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및 생산·유통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농산업인턴제를,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여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부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영어 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3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연령을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기존 만 45세 미만)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을 1,800명 수준으로 상향(기존 1,500명)하였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1,849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성이 1,523명(82.4%), 여성이 326명(17.6%)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28명(23.1%), 30대가 647명(35.0%), 40대가 774명(41.9%)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353명, 경북 318명, 경기 261명, 전남 230명, 경남 172, 충남 163명 순이다.

표 3-11 2013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849	261	88	104	163	353	230	318	172	78	82
(%)	14.1	4.8	5.6	8.8	19.1	12.4	17.2	9.3	4.2	4.4

2010년까지는 창업융자금의 신청 및 융자금 대출이 확보한 예산의 50%에 못 미쳤으나, 융자금을 선정(단어가 누락된 듯합니다!!) 당해 연도에 최소 4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40% 이상 사용한 자에 한해 3년 동안 분할하여 잔여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융자금 대출을 확보예산의 95%까지 지원하였다.

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 중 창업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88명을 선정,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선진기술 및 국제 감각 습득 지원을 위해 국내외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경영교육 1,198명, 국내연수 21명, 국외 연수 111명을 교육하였다.

라) 농산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농고·농대 휴·재학생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며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도농가는 최대 2인까지 인턴채용이 가능하며,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50%를 5개월간 지원한다. 2012년에는 기존 18세 이상이던 인턴 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20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인턴이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산업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마)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였으나, 해외연수 인원이 소수이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통폐합되어 교육부에서는 '13년부터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다.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대학에서 판단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에서 50%의 대응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 향후계획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조 4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136천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정착 실적평가를 토대로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관련 규정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건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농업분야의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총 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실태 조사(시장·군수) 근거규정을 두어 관리 측면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 및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법인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3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효율적 지원 및 정책자료 축적을 위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DB 등록을 유도하고자 법인세 등 감면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농업법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13년 농업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회계·노무 및 조직·갈등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002년 5,59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농업법인 수는 12,981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10,023개, 농업회사법인은 2,958개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 종사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9.7천명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법인 수	5,208	5,260	5,308	5,520	6,003	6,537	9,740	10,867	12,981
영농조합법인	3,852	4,293	4,410	4,624	5,075	5,597	8,107	8,724	10,023
농업회사법인	1,356	967	898	896	928	940	1,633	2,143	2,958

자료: 통계청, 단, 2009년 이후 모집단 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2010년부터 이전 수치와 시계열 분석 단절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8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법인은 전체의 63.5% 수준이며,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법인이 32.4%, 유통업 25.7%, 가공업 18.6%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판매액은 평균 14.6억 원이고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40.2%, 가공업 24.7%, 농업생산수입 2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 당자산은 12.8억 원, 부채는 7.9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62.1%로 전년(157.2%) 보다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농업법인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개, 백만원, %, %p)

구분	유형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률
전체	결산 법인수	8,520	10,352	1,832	21.5
	자산	1,257	1,282	25	2.0
	부채	768	793	25	3.3
	매출액	1,675	1,639	-36	-2.1
	영업이익	35	11	-24	-68.6
영농조합법인	결산 법인수	6,594	7,636	1,042	15.8
	자산	952	931	-21	-2.2
	부채	575	553	-22	-3.7
	매출액	1,353	1,252	-99	-7.3
	영업이익	23	12	-11	-47.8
농업회사법인	결산 법인수	1,926	2,716	790	41.0
	자산	2,304	2,269	-35	-1.5
	부채	1,429	1,467	38	2.7
	매출액	2,778	2,720	-58	-2.1
	영업이익	77	9	-68	-88.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2013년)

평가 및 향후계획

세제지원 및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경영지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6차산업화를 이끌 핵심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창업·투자유치 활성화, 전문화된 경영 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주식·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료 축적을 통한 합리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법인의 주식 등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공제 한도가 타 분야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규모화된 농업법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

후 농업법인도 기업상속공제 수준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안치홍

☑ 시행배경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습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전국대표실습장, 지역품목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13년에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대상 농산업연계 취·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사업 및 농고 산업연계프로그램사업을 공모방식(기존 연속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여 참여 학교와 학생을 확대,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개선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3년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대표실습장 10개소와 지역품목실습장 8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실습교육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자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9개 도, 30개 캠퍼스에서 96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32학점을 이수하는 실습중심 평생교육체계로 '13년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생산성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3월 농한기에 교육을 운영,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업교육과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개경쟁방식을 지속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운영주체 발굴·지원 및 우수과정 선정 등 성과 중심 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농정목표와 현장수요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 유통·마케팅, 농촌개발·거버넌스, 농식품가공, 친환경농업 등 5개 분야를 설정, 공모를 통하여 53개 기관 77개 과정을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과정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인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19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선도하였다.

신규 미래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농업계학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의욕있는 농업계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연속지원방식의 지원체계를 공모방식으로 전면개편,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성과를 높였다. 농고 17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산업과 연계하여 취·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실습/현장실습, 창조미래인력 양성, 산업체연계프로그램, 진로탐색/비전스쿨, 승계농/후계농 양성 등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산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도농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3개 농고를 대상으로 선도농업인과 소통, 전국FFK전진대회, 선도농코칭, 우수학생 국외연수 등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전국 16개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창업 및 취업교육, 영농승계교육, 컨설턴트 양성교육, 선진기술연수교육, 창조자율교육, 선진지 국외연수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교육기관들의 운영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농대, 공모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유형의 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13년도 교육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유형별 평가위원을 통해 서면평가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시 환류

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농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전·후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단기교육과정(WPL)의 경우 현업적용도 평가를 처음 도입하여 교육성과평가를 확대·병행하여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교육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력포털(AgriEDU)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정보노출 취약점 개선, 기능 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 및 서비스 안정화, 최적 시스템 운영 환경을 위한 성능을 개선하였다.

최고의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수·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자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마이스터는 3단계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각 시험단계별 시행계획, 관련규정, 시험운영위원 선정 등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여 농업마이스터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각화된 홍보와 맞춤형 보수교육을 통해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들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컨설턴트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 교육체계 개편 계획 수립을 통해 범농업계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향후계획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을 운영하여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의 30%를 교육생 자부담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농업·농촌교육공모, 기획과제공모,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농업계학교 역량강화 교육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하여 농정현안 및 중장기 농정수요에 대응하고,

농업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범농업계 교육의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확대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생산기술력 외 경영역량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기술지도와는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 및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컨설팅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1인당 사업량의 제한, 컨설팅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점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실적 평

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및 부합을 확인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인증업체 Pool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에는 농업경영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기술위주의 농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의 기술·경영 컨설팅 위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조직경영체 우수 컨설팅사례를 발굴하여 타 경영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사회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컨설팅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별 사업성과를 심층 종합평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 컨설팅 수행단계별 평가점검

컨설팅 추진성과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점검단을 통해 '13년도 지원대상 578개 경영체별(개인 483, 법인 93, 조직경영체 2)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승인하였으며, '12년 종료사업을 포함하여 총 962건('12년 649, '13년 313)의 사업완료 실적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3-1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량(개소)	220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934	649	578
사업비(백만원)	1,710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9,916	5,375	5,375
국 고	671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3,111	1,735	1,7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경영컨설팅 인프라 구축·강화

다양하고 우수한 컨설팅업체의 발굴 및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 참여업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4개의 신규 업체가 새로이 인증을 획득하여 '13년 총 64개의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를 확보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농산업분야의 컨설턴트 Pool을 확대하고자 컨설턴트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컨설턴트별 역량검증을 통해 수임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13년 기준 총 779명의 컨설턴트가 농업경영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임단가는 48.6만원이었다.

다) 컨설팅 성과관리 및 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의 일환으로 '12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649개 중 20%를 샘플링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과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업소득 증가율이 29.2%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종적·횡적 저변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백서를 제작하여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3년 평가점검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이 평균 29.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17.64%, 농업경영비는 29.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는 농가위주의 기술컨설팅에서 법인위주의 경영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지원경영체 및 과제 선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영체 경영수준 및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컨설팅 성과와 만족도,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가. 전문임업인 육성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주무관 박재신

☑ 시행배경

우리나라 전체산림 636만 9천ha 중 68%에 해당하는 433만 8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 규모는 1인당 2.06ha로 매우 영세한 실정임 또한,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있으므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을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 자금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통해 임업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전문임업인 선발 배경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을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장기수 조림을 위한 임야 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문임업인은 2013년도에 본인사망 또는 자격포기자 등 26명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로 독립가 24명, 임업후계자 591명, 신지식임업인 2명을 선정(선발)하여, 독립가

560명, 입업후계자 5,250명, 신지식입업인 69명을 합하여 총 5,875명을 선정(선발)하였다.

나) 전문입업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독립가, 입업후계자, 신지식입업인 등 전문입업인에게 입업경영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대출금 350억원을 확보하여 연리 1.5%~3.0%로, 상환기간 15~35년으로 융자지원 하였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입업경영 능력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입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전문입업인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입업국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였다.

향후계획

전문입업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지원확대, 융자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세금감면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기능인 영입단 육성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영순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어린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립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립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1,146단 9,441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7단 1,652명, 산림조합 367단 3,997명, 산림사업법인 632단 3,792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표 3-15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구 분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1,022	8,859	1,090	9,005	1,146	9,441
국유림 영립단	141	1,619	146	1,606	147	1,652
산림조합 영립단	392	4,306	357	3,877	367	3,997
산림사업법인 영립단	489	2,934	587	3,522	632	3,79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립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립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0개단 120명의 영립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립단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와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 767점(8,500만원)을 신규 영립단에게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영립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 사업 등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7 어업인력 육성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윤이

☑ 시행배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수산경영 기술지도와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서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산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기술 및 교육 등 각종 수산관계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3% 장기저리(3년거치 7년 균등상환)로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사업 계획과 신용도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5천만 원, 전업경영인은 7천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81년부터 2013년까지 21,601명에게 총 6,130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3-16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까지		2013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21,601	612,909	20,621	562,890	980	50,019
어업인후계자(1981년부터)	17,871	398,198	17,118	364,799	753	33,399
전업경영인(1992년부터)	3,486	191,396	3,285	177,376	201	14,020
선도우수경영인(1995년부터)	244	23,315	218	20,715	26	2,600

자료 : 해양수산부, 행정통계자료(2013년)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2013년에는 980명에게 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창업자금지원 2억 원과 주택구입비 혹은 신축자금 4천만 원을 3% 장기저리(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76명에게 361억 원을 지원하였다.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 어업후계인력 확충을 위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대상연령을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조정, 전업경영인의 경우 어업인후계자 선정 3년 이상이 지나야 선정될 수 있으며,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 선정 5년

이상 혹은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선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1인당 지원한도를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경영인은 1억 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억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지속적인 어촌지역 유입을 위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용자 지원 규모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1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시행배경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3까지 국고 2조 5,412 억원을 투입하여 125.1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3-17 대구회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25.1	73.8	2.1	75.0	42.4
사업비(억 원, 국고)	37,632	25,412	67.5	570	69.0	11,6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회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회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밭 기반 정비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시행배경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 기반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1조 8,808억원을 투입하여 101.2천ha를 착수하였다.

표 3-18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80	101.2	56.2	4.7	58.8	74.1
사업비(억 원, 국고)	38,774	18,808	48.5	742	50.4	19,2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군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고 2조 1,002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5.5천km를 완료하였다.

표 3-1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5.5	72.9	0.8	75.1	8.7
사업비(억 원, 국고)	29,689	21,002	70.7	666	73.0	8,0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0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70,043	17,477	7,729	18,108	2,696	24,033
30년 이상	40,738	16,646	3,128	15,113	2,426	3,425
30년 미만	29,305	831	4,601	2,995	270	20,60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343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92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0.4천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3-2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계획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이후	
사업비	149,323	59,271	4,800	85,252	
사업량	수원공	5,842개소	2,344개소	131개소	3,271개소
	수로정비	21.6천km	6.7천km	0.4천km	14.5천km

☑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간척지농업과 사무관 조래청,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국고 4조 2,687억 원을 투입하여 160.9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우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월)하여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 농의 재배작물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232천ha→303천ha, '13.2월) 하였다.

표 3-22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302.7	160.9	53.2	5.1	54.8	136.7
사업비(억 원, 국고)	118,491	42,687	36.0	2,900	38.5	72,9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제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2,869지구(국가관리 241지구, 지방관리 2,628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650지구(국가 179, 지방 1,471)를 완료하였다.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배수개선사업에 2,900억원을 지원하여 101개(신규 22개 지구 포함) 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방조제개보수사업에 500억원을 지원하여 110개(신규 30개 지구 포함)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농촌용수 개발

농업기반과 서기관 박종훈, 사무관 신동원

시행배경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용수공급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중인 지구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66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78천ha(80.5%)이고,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88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73천ha(59.3%)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23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2012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966
	천ha	880	878	859	806	778
수 리 답(B)	(B/A)%	76.6	77.9	79.2	79.8	80.5
	천ha	421	440	478	504	573
수리안전답(C)	(C/A)%	36.6	39.0	44.1	49.9	59.3
	천ha	269	249	225	204	188
수리불안전답(D)	(D/A)%	23.4	22.1	20.8	20.2	1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81개 지구(33천ha)에 2,450억원을 투입하여 9개지구 3.0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도에는 80개 지구(32천ha)에 2,600억원을 투입하여 4개지구 1.6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2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사업량(천ha)	136.4	86.8	1.6	48.0
	추진율(%)	100	63.6	64.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14년

나)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1,368억원을 투입하여 2.8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에는 28개 지구(0.9천ha)에 국고 124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지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5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소 규모 (’03~계속)	사업량(천ha)	11.0	2.8	0.3	7.9
	추진율(%)	100	25.5	28.2	

다) 지표수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9,004억원을 투입하여 30.6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에는 78개 지구(7.6천ha)에 국고 614억원을 투입하여 26개 지구 2.4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6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48.6	30.6	2.4	15.6
	추진율(%)	100	63.0	67.9	

☑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59%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19%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김춘기, 박재수

☑ 시행배경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水系)단위의 종합개발방식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금강(錦江), 영산강(榮山江) 등과 같은 대단위 수계(水系)의 말단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3-2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홍보, 영산강Ⅳ, 서산A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시설재정비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용,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용,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시행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추진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총 24개지구 306천ha를 진행하여 2013년까지 16개지구 166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지구 등 8개지구 140천ha 및 서산A간척지 6천ha에 대해 시설재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시행 중인 8개 사업지구에 2013년까지 총 6조 4,887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정리 11,25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895ha를 조성함으로써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서산A간척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미달되어 재해대응능력을 높이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여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13년까지 820억원을 지원하여 29% 진척을 보이고 있다.

서산A간척지는 70년대말 중동건설 붐 퇴조로 외국 건설현장에서 반입된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농지확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19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간척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어오다가 2000년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농업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현대건설이 당초에 설치한 수로, 방수제, 양수장, 배수장 등 영농시설이 노후되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시설재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를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후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차원에서 2011년 12월에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4공구(768 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 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팜랜드(경기도 주관)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설계, 재원부담 및 역할,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가 사업추진방식, 재원부담 등 협약을 5월에 체결하여 기반조성공사와 하부시설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입찰 등을 추진한 후 11월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이다.

표 3-2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별	위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7지구)			166,097		4,649,714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 산 강(I)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 ~ '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 ~ '79	12,521
창 념	경 남	창녕	2,269	'75 ~ '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I)	충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 산	충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 강(II)	전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삼 교 천	충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 호	충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 산 강(II)	전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미 호 천(II)	충북	청원, 청주	4,430	'89 ~ '12	323,900
새만금(외곽시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방조제	'91 ~ '11	2,949,008

☑ **향후계획**

2014년에는 새만금, 금강Ⅱ 및 서산A간척지 재정비 등 시행 중 9지구에 국고(농특회계) 974억원과 농지관리기금 3,575억원을 투입(총 4,549억원),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523ha를 준공하여 급수면적 326ha를 확대(용수개발) 하고, 영산강Ⅲ-2지구는 농지조성 144ha를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홍보지구는 수질개선타책 일환인 습지조성 등 68ha, 화옹 4공구 에코팜랜드 768ha는 착공, 서산A간척지는 방수제 5.5km를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9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9지구)	5개 시도	20개 시·군	144,394	'89 ~ '23	7,266,026
금 강Ⅱ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군산·익산·김제	43,000	'89 ~ '18	833,384
홍 보	충 남	홍성·보령	8,100	'91 ~ '16	482,410
영산강Ⅳ	전 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01 ~ '15	832,497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	충 남	서산	6,446	'08 ~ '17	279,815
영산강Ⅲ-1	전 남	영암·해남·강진	13,160	'95 ~ '23	588,255
영산강Ⅲ-2	전 남	해남	7,840	'97 ~ '18	424,600
화 옹	경 기	화성	4,482	'91 ~ '22	935,517
시 화	경 기	안산·화성	3,636	'98 ~ '16	439,413
새만금(내부개발)	전 북	부안·김제·군산	41,000	'09 ~ '20	2,450,135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방조제 내측의 간척지 8,570ha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선행공종인 방수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여 공정을 61%까지 추진하였다

2013.6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농업용지 조성 대상지 8,570ha중 방수제 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는 5공구 1,513ha 간척농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이후 착공을 위해 1공구(1,369ha) 및 4공구(666ha) 세부설계를 착수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시도휴게시설 개발사업 등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지와와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는 새만금위원회('11.3)에서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농지조성구간의 방수제공사는 2015년, 농지조성은 대규모농업회사가 입주예정인 5공구(1,513ha)를 2013년 착공 2017년까지 완공하여 조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농업용지(6개 공구 7,057ha)는 세부설계를 거쳐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시도휴게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부실시설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신시-야미구간 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업의 기계화

✕ 식량정책과 서기관 이범섭

☑ 시행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개발, 보급 촉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2년도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의 80%를 저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5,0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

계 검정제도를 임의검정에서 의무검정으로 전환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려면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293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지역농협 695개소에 농기계은행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의 보급 촉진과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논농업은 건조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기계화를 달성하였으며, 지역농협 임대사업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의 약 24.7%인 208만 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다.

다만, 밭농업 재배에 필요한 경운, 정지에 대한 기계는 개발되어 있으나, 밭작물의 품목, 농작업이 다양함에 따라 파종,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기계화가 미흡한 콩·인삼 등 특화작목 및 조사료 등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거나 신규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밭작물 전용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에 기계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정부에서 밭농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농기계 임대사업과 2008년부터 농협이 운영해온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고추·마늘 등 규모화된 밭작물단지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를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시설의 현대화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성기

☑ 시행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관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쌀 품위향상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200, 민간128)가 설치된 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벼 건조·저장시설(DSC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Drying Storage Center)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전국에 1,301개소를 설치하였다.

RPC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로 과거 농가가 직접 벼를 건조하여 과건(過乾)·급건(急乾)으로 벼의 품질이 저하되던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농가는 수확한 벼를 RPC에 입고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벼를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가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농가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향후계획

2014년에도 건조·저장시설 33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7개소, 32억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위성 증설시설 지원(18개소, 41억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8개소, 10억원)할 계획이다.

표 3-30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110	110	104	83	29	29	37	1,301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258	253	239	207	89	89	103	2,720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원예경영과 방문진 사무관

시행배경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작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산 원예·특용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 특작 시설의 내재해형 표준모델을 도입하여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증개축 및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의 시설원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일반원예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신규 온실 수요 증가 요구에 따라서 첨단온실 신축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제공

2007.4월부터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예·특작시설 관계 전문기관에서 조사·개발한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맞는 설계도·시방서를 개발하고 농업기술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여 재해경감 기반을 조성하였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노후 온실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및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2,949ha를 지원하였다. 한편 고추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비가림시설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다. 2017년까지 3,600ha에 3,600억 원을 지원하여 고추 자급률을 2011년의 40% 수준에서 2017년 6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에는 360ha 규모의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었다.

향후계획

기존의 내재형 규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규격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폐기하고, 품목별·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변화기준에 맞는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보완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시설 재배기술, 환경 친화적 시설·장치 등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다. 축산시설 현대화

✕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홍상준

☑ 시행배경

축사경쟁력강화사업으로 '94~'99년까지 축사의 신개축, 개보수 및 자동화시설 등 지원을 통해 전업 규모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되었던 시설 노후, 사육환경 변화 및 FTA 확대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노후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10년부터 모든 번식전문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HACCP 인증 의무화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 향후계획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조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해 2017년까지 조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축종별 준전업농~전업농 및 기업농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 축사 현대화시설자금 지원 예산 : ('09) 99,539백만원 → ('10) 114,728 → ('11) 163,255 → ('12) 276,000 → ('13) 220,000 → ('14) 169,200

아울러, 사육두수 과잉 등 수급이 불안한 축종은 수급 안정 시 까지 축사 신개축 등 지원을 제한 할 계획이다.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어촌어항과 사무관 김지혜

☑ 시행배경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고령화·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촌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 정부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1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계속	8,754억 원	230개 권역	국고보조 80%, 70%, 5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 특수상황지역 80%, 일반농산어촌지역 70%, 도시활력증진지역 50%

☑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54억 원 중 2013년까지 7,622억 원을 투자하여 200개 권역은 완공하고 30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86%) 중에 있다.

표 3-32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 업 량	174(160)	174(160)	184(170)	190(173)	206(181)	208(188)	212(200)	18(30)
	사 업 비	576,031	24,789	25,831	26,457	39,484	35,019	34,594	113,212

* 사업량 : 착수기준 누계, ()내는 사업완료 권역수입

사업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개 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 당 평균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개 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 당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 사업이면서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편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에 의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2018)”을 새롭게 수립함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휴양·관광산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화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 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경석

☑ 시행배경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1년 5조 달러에서 '13년 5.3조 달러, '16년은 6조 달러로 추정 (연평균 3.7% 증가)되고 있다. 유럽 식품시장 규모는 '11년 기준으로 18조원으로 세계 식품 시장에서 비중이 36.1%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큰 편이나 '08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어 '16년에는 34.1%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평균 증감률은 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16년에는 전체 식품시장에서 3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식품시장은 153조원 규모이다. 2002년 79조원이었던 국내 식품산업은 연평균 6.8% 성장한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식품산업은 농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11년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이 10억원 성장하면 농림어업 부문에 각각 3.2억원, 1.5억원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11월 13일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9월 28일에는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과 ‘농림수산물·농산어촌 비전 2020’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식품정책이 공급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으로 국민건강,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식문화 등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하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14년 3월 27일에 ‘국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식생활 서구화와 칼로리 섭취량 증가에 따른 비만·당뇨 등의 영양 과잉, 저소득층·노령인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결핍 등 식생활 및 영양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차원에서도 식품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원료 중 국산원료 이용비율이 29.7%(¹²)에 불과한 만큼,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국내외 수요를 개척하는 것이 이번 신식품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4년 3월 수립·발표한 “新(신)식품정책”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산업진흥과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식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식품정책 인프라 구축 등 7대 분야 3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1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

<p>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생활 교육·홍보 확대 ③ 취약계층 영양 개선 ③ 로컬푸드, 슬로푸드 활성화 ④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p>농식품 품질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산물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② 원산지표시제 강화 ③ 지리적표시제 관리 강화 ④ 농식품 인증제도 개선 	<p>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②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강화
<p>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②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확대 ③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④ 원산지인증제 도입 ⑤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⑥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p>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중소식품산업 육성 ②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③ 미래전략품목 육성 ④ 기자재·포장·디자인산업 육성 ④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p>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식서비스현장·인증제 도입 ② 민간자율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③ 우수 외식업지구 조성 ④ 한식의 국내외 진흥 ⑤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기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新식품정책 체계 구축					
	통계정비	인력양성	R&D 확대	표준화·규격화	규제개선	푸드시스템 구축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R&D 수출지향형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12)하는 등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부가 산업으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 R&D 예산을 확대('13. 313억원 → '14. 376억원)하였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로서 식품산업 제공정보 확충과 함께 수요자 편이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13년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자 수가 전년(74천명)보다 111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으로 '13년 현재 77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추진 중으로 '13년 현재 총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육성 중이다.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해 운영 및 시설자금, 컨설팅, R&D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외 식업지구 선정 등 외식산업 육성 및 품목별 가공산업 육성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미 및 한-EU FTA 등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유로존 위기, 동일본 대지진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13년에 농식품 수출이 57억 달러로 국가 총수출액(5,596억불) 대비 1.0%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력교육 확대, 해외진출 외식기업 컨설팅, 한식 우수성 규명 및 한식 콘텐츠 개발 보급 및 다양한 홍보 등 한식세계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우리 전통발효식품 육성 등 우리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 교육을 확대 중이며, 인증제도 개편,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호 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신식품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첫째, 텃밭가꾸기,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등 현장중심·지역중심의 식생활교육을 위해 교육기관과 체험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농식품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를 도입하고,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외국산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

스(DB)를 활용해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 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합성 연구도 확대해 식품기업이 우리 농산물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의 유망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하고 기자재, 포장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등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다섯째, 민간자율로 외식서비스현장 제정·확산 및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외식업에도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나 미국의 자갓서베이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식품정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식품소비량 통계 및 농식품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새로운 직종 창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확대와 국내외 한식 진흥을 꾸준히 추진하고 식품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농업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서기관 조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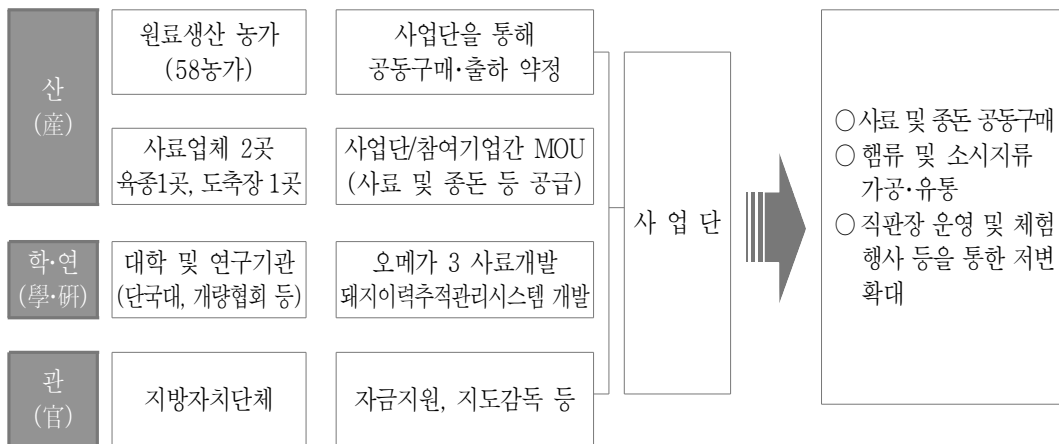
☑ 시행배경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며,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0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산물을 R&D를 통해 고차 가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3-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서부충남고품질양돈사업단) 운영 모델(예시)



지원분야는 사업단 컨설팅, 인력양성,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와 사업단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05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³⁾은 3년동안 20개 사업단에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하는 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22개 본 사업단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09년도에는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12개 사업단⁵⁾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11년도에는 신규사업단 선정 시부터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하고 13개 사업단⁶⁾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3) 시범사업단(20개) : 안성맞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 경청정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 녹차, 함평 과학농업, 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 4) 본 사업단(22개)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행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 5) 광역사업단(12개)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재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넉치, 우리밀 산업화
- 6)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13개) : 미역다시마, 한국명품김치, 경기막걸리세계화, 경기북부양돈산업, 유기쌀가공식품, 친환경농식품, 명품김세계화, 비빔밥산업, 복분자, 유자, 약선가공식품, 명계부가가치, 제주콩

'12년도에는 별도의 신규사업단을 선정하지 않고,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13년에는 '12년에 이미 선정한 '14년 예비사업단 10개소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업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단 스스로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하였다.

향후계획

'14년 10개소) 지원 및 '13년도 선정된 '15년 예비사업단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업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16년에 지원할 예비사업단(약 5개소)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업단 사례 전파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종자산업의 육성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상준

시행배경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육종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 유통, 민간역량강화·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10개소) : 부산어묵전략식품, 고령지역선두유, 충북친환경채소, 동부권발효밸트, 완전식품소이푸드, 울금식품, 빛그린매실, 자생생물자원로컬푸드, 제주갈치 블루어리사업단, 제주 그린포크

민간의 종자업체가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확대(10ha, 270억원 → 54ha, 656억원)를 위하여 '12.2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첨단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3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3년도에 상세기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5개 분야 사업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또한, 기존 종자산업법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13.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수는 2013.12월말 기준 1,368개이다.

표 3-3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10	966	35	197	283	152	130	30	139
'11	932	39	185	300	139	112	30	127
'12	1,073	39	202	328	160	118	33	193
'13	1,368	60	227	411	213	132	48	277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유전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명자원통합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 결과 2009년 22백만 달러에서 2012년 45백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 기상악화, 병충해 발생 등으로 종자 기업의 해외채종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41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 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3.12월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4,736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4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13. 12. 31. 현재)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화 해 류	1,532	317	128	534	532	21	1,147	33	1,114	0	2,679	350	1,242	534	532	21
식량작물	762	22	27	62	592	59	3	1	2	0	765	23	29	62	592	59
채 소 류	756	24	565	48	94	25	7	0	7	0	763	24	572	48	94	25
과 수 류	239	89	22	34	90	4	4	1	3	0	243	90	25	34	90	4
특용작물	171	4	21	19	122	5	1	0	1	0	172	4	22	19	122	5
버 섯 류	85	19	11	33	19	3	3	2	1	0	88	21	12	33	19	3
사료작물	25	3	0	0	22	0	1	0	1	0	26	3	1	0	22	0
계	3,570	478	774	730	1,471	117	1,166	37	1,129	0	4,736	515	1,903	730	1,471	117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식물자원은 219천점('14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자원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DB’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이후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재래종 유전자원 주권 강화를 위해 신규 수집자원에 대한 DB구축을 지속하여 농생명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재원

☑ 시행배경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 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애완·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의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3-35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 원)

활용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	2015
학습·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적곤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12월에 “2009년 1,570억 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에 대한 「201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곤충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총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천적, 경북은 화분매개, 경남은 식·약·사료용 소재를 특화할 계획이다. 각 센터에서는 특화분야 연구 및 상품화, 농가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2)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곤충자원을 이용한 가축 사료화 이용시설 및 제품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수집·보존 및 표본자료 DB구축, 곤충의 가치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관련 대학·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곤충산업육성 교육과정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하였다.

5) 곤충가치 및 산업정책 홍보사업

'13.9.10~10.20일간 경남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곤충산업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곤충산업 라디오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생명산업대전” 행사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활용한 고부가 생명산업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장 마련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였다.

6)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산정 단가’(고시)에 곤충(천적, 환경사료용, 학습용)신규 반영하여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 보전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등에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등에분변토 생산 시설을 폐기물재활용 시설에 추가하여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계획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위주로 편중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등 곤충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확대가 필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곤충사료화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사료소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 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5 종축산업의 육성

✕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재성

☑ 시행배경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아 그 능력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법에 따라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2013년에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부분에서는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 12개월령 이상)된 암소 50두 이상(목표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호 내외로 총 9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11,035두를 선정, 보증 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량 씨수송아지는 검정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고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총90개소

(농가 85, 도센터 5)에 이르렀고, 특히 2013년엔 20개 농가를 선정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암소개량에 의지가 있는 한우 농가 및 한우사업단(지역조합, 협회)을 중심으로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육질조사 및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우수한 암소개량집단을 구축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3년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10,298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201,868두에 대해 암소검정(번식정보, 발육조사, 초음파, 친자확인)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사업참여농가 11천호(200천두)에 대하여 한우암소능력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로 한우농가의 고능력암소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표 3-36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우												
- 1등급이상 출현율(%)	35.2	33.3	35.9	47.9	44.5	50.3	54.0	56.7	63.1	62.4	58.1	61.3
○젖소												
산유량 (kg/305일)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9,556 (8,554)	9,598 (8,553)	9,563 (8,527)	9,638 (8,584)	9,672 (8,652)	9,771 (8,800)	9,737 (8,723)
검정농가 (초산우)												
○돼지(듀록,σ)												
- 일당증체량(g)	654	648	644	638	640	650	647	657	678	673	674	669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97	307	320	320	312	318	319	319	321	-	-	-
- 육용계 체중 (6주, g)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1,974 (5주)	1,950 (5주)	1,991 (5주)	-	-	-

※ 한우의 경우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 기호 증가로 증체량보다는 육질위주의 고급육생산 중심으로 개량방향 전환
 - 한우 씨수소 육질선발 강화('07) : (육량1:육질1) →(육량1:육질3)

셋째, 2012년 한우암소개량센터가 농협 가축개량원에 신설되었는데, 동 센터에서는 초우량 한우 암소의 수정란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수정란을 한우 사육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암소를 선별하기 위해 한우개량사업소 및 한우 육종농가 보유 개체들 중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암소나 전국 암소 중 자손의 도축 성적이 상위 0.01% 이내

인 암소를 엄선하여 수정란 생산에 이용한다. 2012년도에는 총 690개의 수정란을 생산한 데 이어, 우수 한우 암소의 수정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235개의 수정란을 확대 생산하였다. 이 수정란 중 979개는 판매, 109개는 씨수소 생산을 위한 기초축군 조성을 위해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이식에 이용하였다.

2013년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한 한우 보증씨수소는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39두와 보증씨수소 18두를 새로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78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777천개를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검정을 받는 낙농가 3,285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150천두를 대상으로 우수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국내에서 2두를 선발하고 3두 도입한 것을 포함, 보증씨수소 총 16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60천개(str)의 정액을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 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젖소개량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2011년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국제유전능력평가는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 산하 기구인 국제유전능력평가기구(Interbull)에서 참여국 전체 씨수소 유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13년 현재 33개국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 유전능력평가 결과 참여국 전체 135,646두의 씨수소 중 국내산 206두와 수입산 723두의 씨수소가 참여하여, 유량부분 상위 10% 이내에 한국형 보증씨수소 8두가 포함되었고 “지구”라는 씨수소가 유단백 상위 0.4%, 유생산량 1.9%, 유지방량 2.1%의 성적으로 우리나라 젖소개량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돼지개량 부분의 성과를 보면 듀록 수퇘지의 경우 농장검정성적을 기준으로 일당 증체량이 2008년 647g에서 2013년 669g으로 3.4%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의 우량종축 선발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참여하여 종돈장 교배모돈의 10%를 공동선발한 종돈의 정액으로 유전적 연결을 통하여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9개소 모돈 3,500두(듀록 5개소 520두, 랜드 3개소 440두, 요크셔 7개소 2,490두)가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듀록의 90kg도달일령은 2008년 144.8일에서 2013년 138.1일로 6.7일정도 단축되었다.

닭 개량 부분에서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0년도 279개에서 2010년 321개로 15.0% 향상되었으며, 2002년 이후 산란지수는 317개 수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1년 닭경제능력검정소 매각 이후 닭 개량 부분에서의 성적은 집계가 중단되었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종돈장,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돼지 개량은 규모 있는 종돈장의 경우 자체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종돈장은 종돈을 수입한 뒤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검정을 통해 종돈장에 우량 종돈의 선발·계획교배의 자료를 제공하고 양돈농가에는 종돈 선택지표를 제공하여 양돈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닭 같은 경우는 원종계를 수입하는 종계장에서 닭경제능력검정소에 검정을 의뢰하여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현 검정소부지가 노후화되고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매각처분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종축장(종돈·종계장)의 청정화·규모화를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종축장(종돈·종계장)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종축장 인증을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종돈장 13개소, 종계장 5개소가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되어 있다.

향후계획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개량 부분은 현재까지 육질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개량방향에서 높은 근내지방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육량·육질을 동시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선발방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우량한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두수를 500두/년(보증씨수소 20두/년 선발)에서 2015년까지 900두/년(보증씨수소 30두/년 선발)로 확대하여 선발 강도를 강화하고, 근친방지 및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씨수소 생산용 종축용 암소두수를 늘리고 씨수소 두당 정액공급량도 120천개/두에서 100천개/두로 감축할 것이다. 또한 개량형질을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폭 넓은 개량방향을 제시하기 사료효율, 부분율 수율을 조사·분석하여

개량방향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11천호(230천두)에 대하여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우개량에 있어 가장 핵심인 혈통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축인공수정사를 교육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산유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수명연장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낙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량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유균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검정농가의 혈통비율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7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지원은 종전과 달리 보증씨수소 선발 등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청정육종농가 30호를 선정하고 고능력수정란(400개/년)을 이식하여 2018년까지 보증씨수소를 확대생산(5두/년)하고,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종자소 유전평가(인터벌)에 참여하여 국내환경에서의 한국보증씨수소의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고효율개량, 유전자원 자립화 및 국산정액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개량의 경우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그 종돈의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유전적 연결을 도모하여 국가단위평가를 통해 우량종돈 생산을 위한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에 종돈의 70% 이상 참여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표현형 기반의 종돈유통을 육종가 기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 종돈장 및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통해 청정·우량종돈(정액)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장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종돈장 확대를 유도하고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 등 정책사업을 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4년 완공되는 닭경제 능력검정소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국내생산 토종닭 순계(PL)에 대해서는 수입종축 수준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종축장전문화지원을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지원조건이 유리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유통가공과 사무관 이재영

☑ 시행배경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고급화·다양화·건강 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으로서 수산물 가공업계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 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보급 및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103개소, 215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11개소, 79억원) 및 수산물 공동가공시설(2개소, 16억원) 등 총 116개소에 대해 국고 310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도에 총 8개소에 154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3-37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이후
합계	11개소	1,522	9,734	8,759	14,360	16,750	15,400	36,850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	500	1,150	-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	15,222	3,250	1,000	5,350	-	-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	1,984	2,000	2,000	5,000	3,516	
영광	염상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3)	-	500	1,000	1,000	1,500	1,000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	500	1,000	1,000	2,450	-	-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	-	-	250	1,760	1,000	1,100	3,390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	-	-	-	300	4,484	4,966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	250	4,500	2,500	5,25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	-	3,000	2,359	3,000	2,000	2,100	6,444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	-	-	-	-	-	300	8,200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	-	-	400	8,600

자료 : 해양수산부, 2014년

그리고, 우수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10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 친환경 수산물을 23,280톤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표 3-38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구 분	인증 및 출하 실적		
	2012년	2013년	증(△)감
인증건수(건)	62	66	4
인증업체(개소)	53	53	-
인증품목(개)	9	9	-
출하실적(톤)	13,508	23,280	9,772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3년

* 인증 대상품목 :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굴, 홍합, 전복, 흰다리새우, 김, 미역, 툇,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성별교 꼬막, 완도 전복, 기장 미역, 장흥 키조개, 완도 넙치, 진동 미더덕 등 16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3-39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3년말 기준)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1호	'09. 2. 25	보성별교꼬막	보성별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제10호	'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제11호	'11. 5. 13	장흥매생이	(사)정남진장흥매생이생산자협의회
제12호	'12. 2. 28.	여수굴	여수굴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제13호	'12. 8. 27.	남원미꾸라지	(사)남원추어산업협회의회
제14호	'12. 8. 27.	고흥미역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제15호	'12. 8. 27.	고흥다시마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제16호	'13. 9. 26.	진동미더덕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4년

아울러, 인증마크의 혼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12.1.1일부터 인증표지를 사각형의 도장 모양 표지(logo)로 단일화 하였으며,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산물가공업에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12.7.22일부터 신고제로 일원화하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가공업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

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의 확대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발굴 등 수산물 인증·표시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관 안형근

☑ 시행배경

농림업분야는 세계적으로 FTA 확대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육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제한을 많이 받아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농식품업 관련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농림업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농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업을 IT·NT·ET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의 육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융복합연구센터(구, 농업연구센터)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생명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중추 사업으로의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투자영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1994~2010)을 4개 사업(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융복합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청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R&D 공동기획단’을 구성(2011.3월)하여 부·청 공동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등의 신규 지정공모과제 기획 시 부·청이 상호 협력으로 사업 대상과제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는 공동기획을 추진하여 28과제(총 143억원)를 도출하는 등 R&D 공동 기획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개편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 체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와 ‘50대 핵심기술’을 설정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3-40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구 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 용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 시행내용 및 성과

1)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활동조직 및 인프라 선진화, 성과지향적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림수산물 분야 R&D 성과활용 시행계획’을 수립(2013.4월) 하여 매년 계획에 따른 성과활용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94년부터 2012년까지 총 5,037개 과제 10,5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계속추진과제 340개 950억원, 신규선정과제 114개 261.7억원 등 총 454개 과제에 1,211.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41 농식품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관리)

(단위: 개, 억원)

구분	1994~2012		2013			
	과제수	금액	계속과제	금액	신규과제	금액
합계	5,037	10,549	340	950	114	261.7
기획과제 (지정공모)	298	2,866	117	561.4	53	178.7
일반과제 (자유응모)	4,739	7,683	223	388.6	61	830
사업 관리비	-	395				

* 해당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94~'1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10~),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11~), 수출 전략기술개발사업('11~),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11~), 농림수산물연구센터지원사업('11~), 기술 사업화지원사업('1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12~)

** 자료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2013년

2)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13년까지 농식품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4,282과제이며, 이 중 901과제(21%)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활용에 404(9%),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1,242(29%), 지식기반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 타연구활용)에 1,345(30%) 과제가 활용되고 있다.

표 3-42 1994~2013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개)

구 분	성과활용				성과활용 추진증	성과 미활용	합계
	농산업 기술사업화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과제수 (%)	901 (21)	404 (9)	1,242 (29)	1,291 (30)	33 (1)	333 (8)	4,282 (1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년

☑ 향후계획

2014년부터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에서 제시한 4대 중점 연구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에서 농정목표와 R&D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R&D투자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과학기술기반 창조농업 촉진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현장-R&D(농업인, 산업계 등)’의 연계를 통해 고질적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Total Solution형 R&D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 수립을 통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에서 제시한 장기(10년) 비전을 5개년 단위의 R&D 정책방향과 중점 과제 도출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며, 사장되는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을 제고를 목표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사업’,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등 R&D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 농업 정보화 촉진

가. 시행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IT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시대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목표는 ICT융복합 활성화로 미래성장산업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 신뢰 향상, 정보화로 창조적 농정 실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이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성공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 뿐 아니라 타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사회 인프라에 IT 접목 등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ICT융합 초기단계로 우리 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관련 모든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농식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농식품 분야에서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과수 및 양돈분야의 원격제어 및 자동제어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등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2013년 8월에는 ICT를 활용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확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농업 중심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에 분야의 확산사업인 스마트온실 보급사업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작물생장에 필요한 조건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종 센서를 통해 온실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의 측창, 천창 등의 시설물을 제어하고 작물생장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분(양액)의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수분야의 확산사업은 과수원의 온습도, 풍향, 강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고, 병해충의 예찰을 통해 방제의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서리방지, 냉해방지, 야생동물의 침입방지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의 토양, 병해충 상태, 기상 및 작물의 생리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영농활동을 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3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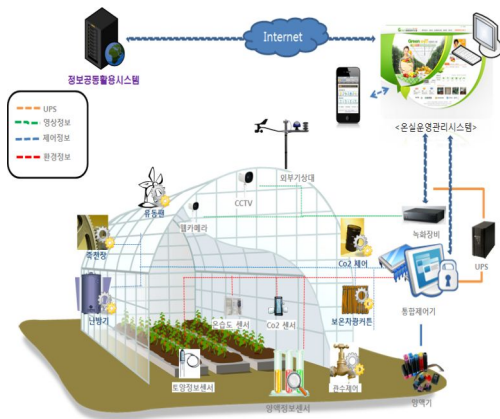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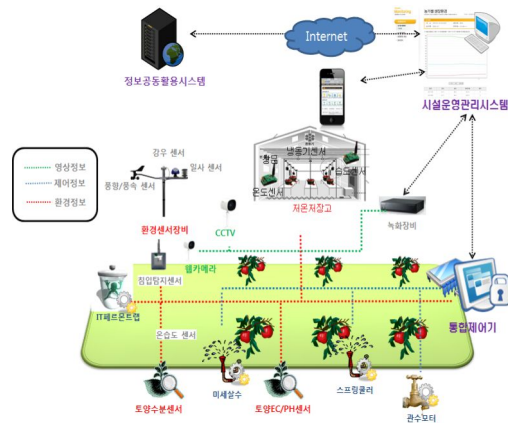


그림 3-4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14년에는 양돈분야에 대한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축사의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폐지의 사육단계별로 필요한 사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급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축사별 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향후 양계, 낙농 및 한우 등으로 ICT 융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과수 및 양돈분야 등에서 추진하는 확산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에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에는 농장에서 축적된 ICT 융복합 정보를 활용하여 컨설팅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원격 및 현장지원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그림 3-5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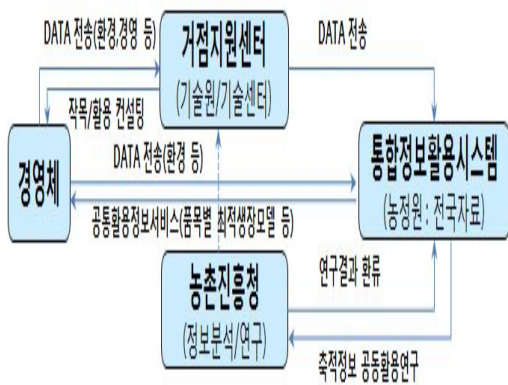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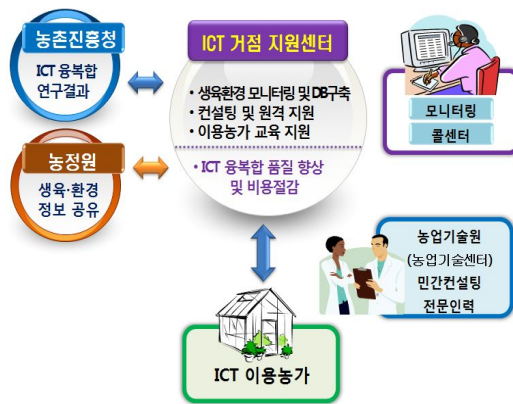


그림 3-6 농식품 ICT 융복합 지원센터



ICT 융복합 기술에 익숙치 않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지역에서 이론교육을 배우면서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지정하고 실습형 교육과정도 편성하였다.

2)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맞춤형 농정 구현

우리 부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하고 신규로 33개 항목(재배품목,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수혜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

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보조금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 부 농림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비농업인 직불금 부당수령, 직불사업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직불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불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이 차단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 될 것이다.

그림 3-7 농업경영체 DB의 연계/통합 확대계획안



이러한 경영체 정보와 함께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들의 관련정보를 연계·통합·관리·개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빈번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농업 현안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협력사업과 정부3.0 선도과제로 채택된 ‘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 구축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까지 16개 기관 21개 사이트로 확대하여 농식품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종합정보망은 품질안전정보, 소비이용정보, 식생활·영양정보, 레시피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식품종합정보망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웹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적인 테스트를 통해 매거진 형태로 매분기별 ‘농식품 소비공감’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농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3-8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서비스 개념도



4) 농업정보이용활성화로 정보격차 완화

‘13년도 농업인의 일반국민 대비 PC대비 정보화 수준은 67.8%로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43.1%로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취약한 상황이다(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표 3-43 농업인 정보화 수준(%)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장애인	57.5	73.9	78.8	81.3	82.2	83.4	83.8
저소득층	55.6	73.0	78.1	80.5	81.4	82.2	83.2
농업인	33.8	49.8	57.9	61.8	63.6	64.8	67.8
장노년층	40.9	58.4	64.2	67.5	69.2	71.2	72.6
평균	45.0	62.0	68.0	71.1	72.4	74.0	75.2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부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서비스, 지식서비스 및 경영정보화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 단계별 정보제공, 품목별 커뮤니티 활성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화 교육 등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의 측면에서는 농식품 지식기부 등으로 TED형 교육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선도 농업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체정보화 측면에서는 농가경영장부의 보급 확대 및 농업에 필요한 SW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13~'17)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물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의 3대 과제인 ICT 융복합 모델 확산, 농식품 ICT 생태계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체 통합 DB 구축으로 보조금 이력관리, 중복지원 방지 등 사전·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정상화 및 정책자금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함은 물론 행정비용을 연간 468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종합정보망구축은 분산 제공되고 있는 농식품 관련 정보 사이트를 품질(Quality)-소

비(Consume)-식생활(Life)을 연계한 통합 농식품 소비 지원망을 구축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부3.0 가치 실현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보급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3 임업 정보화 촉진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주요원

☑ 시행계획

정보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이용 기회 증가에 따라 식물자원 정보관리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추진 등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역할 증대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림생물정보의 선진화 요구에 따른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1~2015)에 의해 산림청 내 및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산림생물정보 정보망 개발 및 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으며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 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국내 식물표본관 15개소의 산림생물표본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미 구축된 산림생물자원의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해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DB영문화와 영문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전국 57개 기관에 산재된 식물과 곤충 표본정보에 대한 DB구축과 이미 구축된 국가 생물종 이미지 정보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변환작업을 수행중이며, 검색기능 및 서비스강화, DB 성능향상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작업을 수행중이다.

2013년까지 산림생물정보 DB 식물·곤충도감, 표본, 종자, 수목원 보유식물, 균류, 포유류 등 24종류 447만 건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재된 국내 생물다양성정보의 78%를 차지한다.

표 3-44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13년까지)

(단위 : 만점)

합 계	식물자원	곤충자원	균류자원	조류	포유류
447	264	181	9.8	4.4	0.4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사립수목원의 산림유전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기본도면 및 식물이력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시작하여 2013년 54개소의 수목원·생태숲에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다.

☑ 향후계획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1~2015)에 의해 산림청 내 산림생물 관련 28개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 생물종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국외 생물자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국제생물정보 관련 기구·기관 및 국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 구축된 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GIS) 기반의 관속식물 분포정보시스템 8만건에 대한 추가 구축을 통하여 산림생물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정부 3.0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생물정보 통합 및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아이폰 등을 활용한 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고품질 화상 정보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수산 정보화 촉진

☒ 소득복지과 사무관 안중현

☑ 시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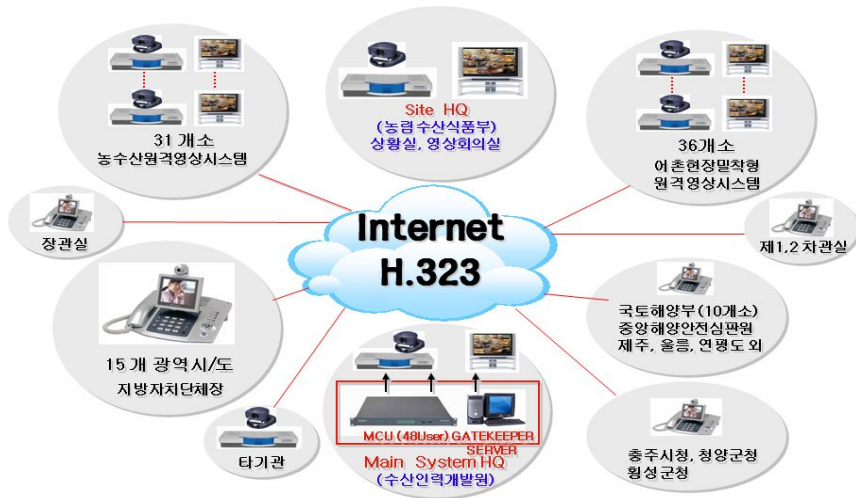
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업인 정보화교육을 수행해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 교육을 받고, 정부 정책설명·홍보, 어업인간담회 등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0개소 지방수산사무소(2003년 완료)와 36개 어촌계에 수산 원격영상시스템(2012년 완료)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 측면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22,685명에 대하여 원격영상 또는 집합, 방문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어촌지역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매년 어업인과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2014년 제11회)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어업인 복지포털시스템(행복海)을 구축하여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향후계획

2013년 농어촌지역정보화 현황을 보면 컴퓨터 보유율 64.5%, 인터넷이용률 42.2%로 2012년 대비 각각 2.4% 및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화 격차지수가 32.2점으로 매년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9년 39.7점→2010년 38.2점→2011년 36.4점→2012년 35.2점→2013년 32.2점)

앞으로 어업인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의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 수강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 5 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 농식품 수출 확대

✎ 수출진흥팀 사무관 유재형

☑ 시행배경

농식품 수출은 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인해 국내 유통량이 감소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가 소득 지지도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농림업 생산액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출을 통해서 국제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농식품 수출산업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 가공식품은 1.8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각각 휴대폰 수출에 비해 1.3배, 2.5배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08년~'10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 정책의 고용효과는 27,256명으로 분석되었다. 용자사업의 10

억원당 생산유발효과는 18.54 ~ 19.08억원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 34.87 ~ 35.54억원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용자사업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이 여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측면에서도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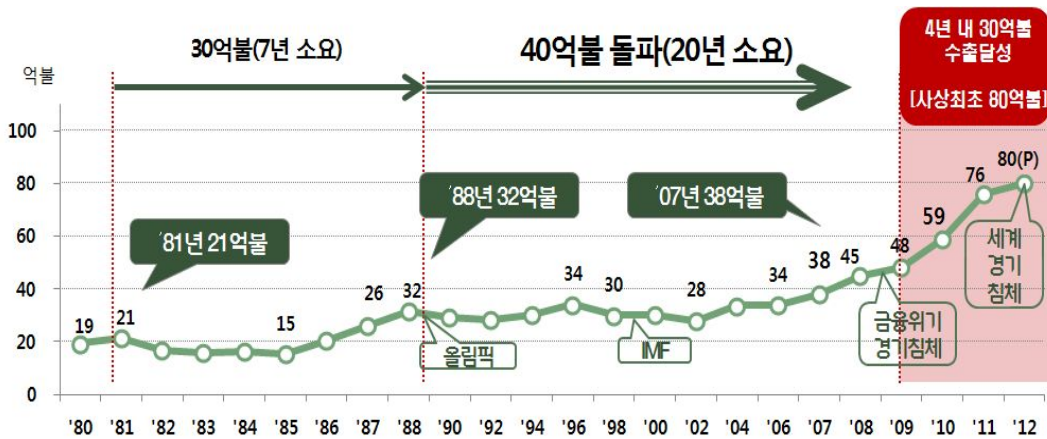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식량안보 및 환경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8,006.1백만 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국가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3%로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낸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1년 대비 6.3% 증가한 1,079.4백만 불, 가공식품은 4.5% 증가한 4,565.4백만 불, 수산물식품은 2.3% 증가한 2,361.3백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은 비스킷이 추가되어 13품목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켈런·참치와 김·라면은 각각 6억불과 2억불을 최초로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3-9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 19억달러 ...> ('07) 38 → ('08) 45 → ('10) 58.8 → ('11) 77→ ('12) 80

표 3-45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A)	2012(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 합계	2,851.5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4	8,006.1	4.1
○ 신선농림축산물	522.4	608.2	535.5	597.1	675.0	739.3	873.9	1,015.6	1,079.4	6.3
○ 가공농림축산물	1,057.3	1,613.3	1,768.9	1,934.7	2,373.2	2,558.8	3,207.9	4,367.4	4,565.4	4.5
○ 수산식품	1,271.8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2,308.4	2,361.4	2.3

1)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아세안(전년 동기대비 15.6% 증), EU(15.6%), 미국(10.7%) 등 FTA 체결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해까지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중국(Δ 7.4), 홍콩(Δ 2.7), 대만(Δ 2.8) 등 중화권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미국과 EU의 수출 증가는 FTA 체결로 주력 품목인 김, 라면, 음료 등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세안의 경우는 한류의 영향으로 라면, 음료, 김 등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권은 주력 품목인 인삼의 재고 증가로 인한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5.9%(11개국)를 차지했던 1억불 이상 수출 국가는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이 추가된 총 14개국으로 전체 수출대상국(194개국) 대비 7.2%로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국 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4.4%로 전년(85.3%)대비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출국가인 일본의 시장 점유율도 전년(30.9%) 대비 1.1% 감소(29.8%)하여 점진적인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6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12년 수출액(백만달러)	2,389.0	1,278.5	664.0	259.0	297.2	253.8	1,192.8	419.6
국가별 비중(%)	(29.8)	(16.0)	(8.3)	(3.2)	(3.7)	(3.2)	(14.9)	(5.2)
전년대비 증가율(%)	0.6	Δ 7.4	10.7	6.7	Δ 2.7	Δ 2.8	15.6	15.6
5년 평균 증가율(%)	13.5	24.1	10.3	Δ 3.1	14.6	19.2	27.5	14.3

* 1억달러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07년 8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12년 14개)

2) 수출성장동력 확충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수출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2년에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농식품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9개 수출 전략품목을 지정하였다.

표 3-47 29개 수출전략 품목

구분	EU
신선식품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품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수산식품	해삼, 굴, 김, 전복, 넙치, 참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중요하다. 국제박람회 참석은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유망권역, 벤더발굴, 미개척시장 등 전략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40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 135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 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3) 농식품 수출 기반 강화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품목별로 표준물류비의 1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기본물류비 지원 대상을 전략품목 중심의 차등지원(전략품목 10%, 일반품목 8%)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을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불 이상(기

존 20만불 이상)인 업체로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함으로써 DDA협상 등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에 대비하였다.

인센티브는 지원비율을 표준물류비 범위내(12%→10%)로 축소하는 대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전체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이 5% 미만 국가에 수출시 지원하던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를 전략품목에 대해 기존 주력수출국을 제외한 국가(2개국)로 수출시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토록 개선하여 전략품목의 전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다.

수출업체의 자생력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등록 지원, 공동물류활성화 지원, 물류효율화 컨설팅, 수출안전정보 통합 DB구축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수출보험, 안전지킴이,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선도유지제 사업 등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을 확대하였다.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80년부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업체와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시자금을 증액(100억원 → 120억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업체별 배정 최고한도를 200억원 이내로 신설 운영하였다.

☑ 향후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위기에 취약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의 현지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 적극적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가공식품까지 패러다임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위 품목도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 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팀을 운영하여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품목 육성을 위해 수출전략품목 29개를 선정하여 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전략품목 집중육성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 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수산물 수출확대

✖ 수산정책과 서기관 이병웅

✔ 시행배경

한류의 긍정 이미지와 연계하여 한국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對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 국과의 FTA 체결의 가속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일본의 엔저 등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로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전략적으로 주력·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침으로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3년 주요 사업에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우수수산물 지원이 있으며, 총 사업비 1,748억원을 투·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 원을 저리로 127개 업체에 융자하여 736백만달러의 우수 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11회, 로드쇼 3회, 판촉전 1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 광고 등을 위하여 6.9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42대의 기기 구입비 3.5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9~2013년까지 총 1,421억원을 투자하여 '13. 7월 준공하였다. 아울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지원, 환변동 보험지원 등 중소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넷째 해외 수출시장 여건조성 및 유통·주력시장 발굴을 위하여 수출 1위 국가인 일본과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개선에 관한 한·일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공고시기 조정 등 통상협력을 추진하였고,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시장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관련 기관 및 업계로 구성된 '중국 수출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판로를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21.5억달러이지만, 국내 수산물 수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저현상 및 세계 경기침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산물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 사항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대응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3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농업통상과 사무관 고연자

☑ 시행배경

UR 농업협상 결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면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인 TRQ(Tariff Rate Quota) 방식을 통해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Q제도는 수출국에게는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게는 관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혼란, 농업인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쌀, 보리, 고추 등 주요 농축산물 63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수입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 수입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표 3-48 TRQ 운용 품목(63개)

구분	최소시장접근(MMA)	현행시장접근(CMA)
해당 품목	종유(5), 종돈(1), 전지분유(3), 연유(4), 조란(1), 천연꿀(1), 골분(1), 잠종(1), 사과나무등종묘(4), 뽕나무(1), 종자용감자(1), 감자(종자용 이외)(1), 양파(2), 마늘(4), 고추(5), 고구마(4), 밤(2), 잣(2), 오렌지(1), 감귤류(4), 대추(2), 녹차(2), 생강(6), 보리(11), 미곡(16), 조(1), 인삼(22), 사료용근채류(3), 참기름과그분(1), 에틸알콜(1), 참깨유박(1), 기타배합사료(1), 보조사료(4)	종계(2), 탈지분유(4), 유장(14), 버터(2), 녹두·팥(4), 매니옥(4), 매니옥펠리트(1), 기타서류(4), 호밀(1), 맥주맥(2), 귀리(1), 종자용옥수수(2), 옥수수(8), 수수(1), 메밀(5), 기타가공곡물(11), 감자분(2), 맥아(2), 밀전분등(3), 변성전분등(11), 매니옥전분(2), 고구마전분(1), 대두(6), 낙화생(5), 참깨(1), 유당(2), 인조꿀(1), 옥분(1), 누에고치(1), 생사(4)
개수	33개(세번 119개)	30개(세번 108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는 63개 TRQ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농업분야 재투자,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 농가소득 안정, 품목별 특성 및 WTO 협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혼합방식으로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지정기관배정방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국영무역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대상품목은 쌀, 참깨 등이며, 수입권 공매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상품목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차익 발생이 예상되는 인삼, 생강, 밤 등이며,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수입추천대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실적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상품목은 최소비용으로 수입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료용 식물, 옥수수 등이다. 또한, 혼합방식은 위에 열거한 방식들을 혼합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요품목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등이며 대부분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영무역에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과 수입권 공매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안기금 등에 적립하여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9 2013년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내역

수입관리방식		MMA	CMA
국영무역(2)		쌀(1)	참깨(1)
수입권공매(5)		인삼, 생강, 밤, 대추(4)	낙화생(1)
실수요자 배정 (46)	실적기준 등 (15)	보리, 종돈, 보조사료(3)	종계, 버터,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기타가공곡물, 맥아, 변성전분 등,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콜(12)
	선착순(31)	종우, 전지분유, 연유, 조란, 꿀분, 잠종, 묘목류, 뽕나무, 감자(종자용), 고구마, 오렌지, 감귤류, 조(종자용),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기타배합사료, 녹차(17)	탈지분유, 유장, 매니옥펠릿, 기타서류,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인조꿀, 옥·꿀분, 누에고치, 생사, 밀전분 등, 감자분(14)
혼합 방식	국영무역+수입권공매 (3)	마늘, 양파 (2)	메밀·기타곡물(1)
	국영무역+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대두(2)
	국영무역+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1)	고추(1)	
	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 (4)	갯, 감자(종자용이외), 천연꿀, 참기름과그분획물(4)	
계		32	31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수입관리 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한 생산자피해 최소화 및 수입이익금의 농업투자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냉동고추, 냉동마늘 등 일부 품목의 유사대체 품목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수입관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DDA협상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별긴급 관세제도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부과하는 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부터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TE)로 양허한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 등 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증감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품목,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원자재, 물가안정을 위한 가공용 원료에 대해 운용해오고 있다.

2013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총 41개품목으로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23개 품목, 요소, 농약원제 등 농업용 원자재 5개 품목,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주보리 등 가공용 원료 13개 품목이다.

2013년 할당관세는 사료용 원료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수를 확대하였고, 물가안정용 품목은 국제곡물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표 3-50 2013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단위: 품목수)

구분	계	사료원료	농업원자재	가공원료 등
2012년	62	22	5	35
2013년	41	23	5	13
증감	△21	1	0	△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3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고추장, 당면, 찹쌀, 메주로 4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고추장 45%, 당면 28%, 찹쌀 50%, 메주 13%를 적용하였다.

또한, UR 협정에서 관세상당치(TE : Tariff Equivalent)로 개방된 품목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WTO에서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한 품목은 총 146개(2014 HSK 10단위 기준)이며, 매년말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 가능 품목 중 다음연도 부과대상품목, 세율, 기준발동물량 및 가격 등을 결정하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녹두, 팥, 메밀, 인삼 등 34개 품목에 대해 실제 특별긴급관세가 발동되었다.

표 3-51 특별긴급관세(SSG) 품목 및 발동현황

구분	개수	해당 품목
SSG 품목 (2014 HSK 10단위 세번기준)	146개	종우, 종돈, 종계, 종란, 골분, 정척, 수정란, 과실나무, 감자, 옥수수, 녹두, 팥, 매 니옥, 고구마, 보리, 귀리, 수수, 메밀, 조, 밀, 울무, 낙화생, 대두, 종자, 인삼, 사료, 변성전분 등
발동대상 품목 (‘14년, 기재부령)	22개	인삼(22)
실제 발동된 품목(‘95~‘12) (‘13년 세번기준)	34개	녹두, 팥, 메밀, 대두, 기타곡물, 기타곡분, 곡분(밀, 귀리), 압착플레이크(귀리, 기타), 가공곡물(울무, 기타), 전분(밀, 고구마, 기타), 대두(2), 낙화생(4), 인삼 (10), 육·설육분, 변성전분(2)

☑ 향후계획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안정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를 지속 운용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농가 보호 및 관련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관세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4 수산부문 수입관리 대책

☒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정재훈

☑ 시행배경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13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 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로,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4),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 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114억원(13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되는 수산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2013년 수산물 수입은 3,895백만달러로 전년 3,975백만달러 대비 2%(80백만달러)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한·중, 한·인니, 한·베트남 FTA 협상 진전과 국제 수산물 교역시장 확대에 따라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자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 소비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 제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 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결 및 해외 현지 가격조사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현우

☑ 시행배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12)」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05)·제2차('06~'10)·제3차('11~'15)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우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유기질비료 3,081천톤(1,613억원)을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671천톤(629억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67천ha(76억원)를 조성하여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로,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2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개소(누계 44),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 36개소(누계 1,112)를 신규로 조성 지원(254억원)하였다.

셋째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친환경인증 45천 농가의 38천ha에 대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47억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1,314농가에 대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도매시장 유통활성화, 직거래 지원 및 대량수요처 발굴, 산지 거점조직 및 유통시설 확충,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경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개장·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 단체에 직거래 매취자금 445억원을 지원하였다. 5대 광역시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을 초청,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TV 다큐제작 및 반영,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 워크숍, 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표 3-52 2013년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	친환경비리지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농비 작물 종자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산물중 합물류센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맞춤형비료					광역 단지	지구 조성	
예산액 (억원)	1,450	756	-	80	94	478	47	209	45	719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3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중 8.3%(2001년 0.2%보다 42배 증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1,373억원(2001년 1,500억원 보다 21배 증가), 화학비료 사용량 262kg/ha('99~'03 평균 375kg/ha 보다 30%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53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친환경 면적(ha)	49,807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1
유 기	6,095	8,559	9,729	12,033	13,343	15,518	19,311	25,467	21,206
무농약	13,803	18,066	27,288	42,938	70,139	94,533	95,253	101,657	98,237
저농약	29,909	48,370	85,865	119,136	117,306	83,955	58,108	37,165	22,208
친환경 농가(호)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46
유 기	5,403	3,235	7,507	8,460	9,403	10,790	13,376	16,733	13,957
무농약	15,278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101,657	89,992
저농약	32,797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친환경 생산량(천톤)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	1,498	1,181
유 기	68	96	107	115	109	122	123	168	117
무농약	242	320	444	554	880	1,040	980	842	693
저농약	488	712	1,235	1,519	1,369	1,054	749	488	371
화학비료 사용량(kg/ha)	376	257	340	311	267	233	249	267	262
농약 사용량(kg/ha)	12.8	12.9	13.1	13.8	12.2	11.2	10.6	9.9	10.9

☑ 향후계획

농업과 환경의 조화 속에서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제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1~'15)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표시제와 인증제로 구분, 운영되어온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등 공급 확대로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용량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시('12.10.개장) 및 전남 나주('12~'16)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전한 수요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급식·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조합 간 상생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재포장업체 등에 대한 의무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농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조성·운영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흙·물·생명살리기'를 위해 '농업환경종합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토대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나.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훈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 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 12% 제고 및 농약·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2004.2월)하여 농업환경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고, 2007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

태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12년까지 1,076개소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36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 농가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6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중이며, 2013년에는 광역단지조성 신규 2개소와 2~3년차 사업 10개소에 국고 127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향후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선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3년말까지 1,112개소가 지원되었으며, 2014년에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30개의 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총 1,300개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13년까지 44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남윤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에 대해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37천ha에 대해 6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에 대해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에 대해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에 대해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에 대해 305억원, 2012년에는 49천ha에 대해 294억원, 2013년에는 38천ha에 대해 24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5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ha, 천호)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액	208	287	345	376	305	294	247
면 적	53,682	76,352	90,132	93,318	71,766	48,921	37,080
농가수	69	97	112	116	88	60	4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8.3%(141,651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3년에는 7.0%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단가를 약 50% 수준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였다.

2013년부터는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기간을 3.1~3.31까지(30일)로 단축하고,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4년 385kg/ha에서 2013년 256kg/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40천ha에 대해 269억원을 지원하고,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인증현황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변경 항목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며,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해 지자체 통보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분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기지속직불을 도입하고, 품목별 재배난이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차등화 하는 등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남윤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

중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2)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 2012년 13.5억원, 2013년에는 14.6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을 통하여 5대 광역시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CF를 제작·송출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융자)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310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에는 445억원(추경 145억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결제자금(융자) 1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여 물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 지방비 251)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지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사업비 289억원(국비 144.5, 지방비 144.5)을 투입하여 부지 30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친환경자조금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환경오염 경감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소비정책과 농업사무관 조경은

☑ 시행배경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 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 권장 23)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표1>과 같이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

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3-55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기관(개소)	43	45	49	51	48
GAP관리시설(개소)	484	565	606	718	756
인증 농가수(호)	28,562	34,421	37,146	40,200	46,000
인증 면적(㎡)	40,081	46,701	46,701	55,000	58,703
생산 계획량(톤)	434,047	509,931	642,165	691,000	749,27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향후계획

정부는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들의 GAP 참여 확대를 위해 GAP 인증 절차 통합, 인증 소요기간 단축, GAP유통체계 구축, 위해요소관리 강화, 학교급식 등 GAP인증농산물 대량수요처 발굴을 통한 GAP인증농산물 소비확대,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AP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식량산업과-농기자재산업팀 사무관 최남근

☑ 시행배경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

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에 투입하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인센티브를 통한 시비량 절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친환경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 가격이 점차 인상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경지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화학비료 소비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중 많은 편이고 양분수지가 높아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소비량 감소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사후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50만톤 1,250억원, 2012년 286만톤 1,434억원, 2013년도 308만톤 1,61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3-56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량	1,350	2,000	2,100	2,500	2,500	2,858	3,081
금액	473	1,160	1,218	1,450	1,250	1,434	1,613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원단가를 1~3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별 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작물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도록 개선하였다.

2006년 화학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면서 화학비료 총사용량(실증량 기준)은 1,272천톤을 사용하여 전년에 비해 32.2%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은 1,621천톤을 사

용하여 일시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 1,471천톤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 1,292천톤으로 12.2% 감소하였고, 2010년 1,105천톤으로 14.5%로 감소하여 오다가 2011년 1,110천톤, 2012년 1,182천톤, 2013년 1,143천톤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표 3-57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단위 : 실증량, 천톤,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량	1,621	1,471	1,292	1,105	1,110	1,182	1,143
증(△)감	27.4	△9.3	△12.2	△14.5	0.4	6.5	△3.3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비료는 사용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비종 설계 등으로 고농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되, 2013년부터는 국고보조는 중단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식량산업과-농기자재산업팀 사무관 최남근

☑ 시행배경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질은 1957년부터 규산질은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부터는 국고 비율을 70%로 낮추고 지방비 비율을 30%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가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492천톤(규산 289, 석회 203)을 지원하였다.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599천톤(규산 366, 석회 233)에 이어 2010년에는 826천톤(규산 643, 석회 183), 2011년에는 822천톤(규산 535, 석회 287), 2012년에는 739천톤(규산 472, 석회 267), 2013년에는 671천톤(규산 452, 석회 219)으로 확대·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표 3-58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단위 : 천톤, 백만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40,073	40,354	65,139	88,113	77,823	70,071	62,917
물 량*	549	492	599	826	822	739	671
- 규 산	290	289	366	643	535	472	452
- 석 회	259	203	233	183	287	267	219
- 폐화석(톤)	20,000	15,000	28,836	27,128	43,503	44,146	31,926

* 폐화석 물량은 석회 물량에 포함

향후계획

2014년에는 토양개량제를 701천톤(규산 434, 석회 267)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맞춤형비료공급, 유기질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 7 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1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경미, 사무관 최윤석

☑ 시행배경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 정착, 베이비부머(babyboomer)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홍보 및 정보 제공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도심(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97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여, 2013년에 386개 마을, 화재보험 165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 실시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고, 도시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를 제정하여 201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등급제는 농촌관광 사업자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3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2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S/W 및 협조체계 구축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 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조성을 지원(마을당 3억원)하고 있다. 2013년까지 727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659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인력육성 및 사무장제도 도입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 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6개 교육과정에 4,524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에 38개 마을(2012년 49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3년에는 389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3년에는 10,446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어촌 일손돕기 등 683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기업·단체의 자발적인 도농교류 참여확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단체의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으로써, 2013년 22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계획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1사1촌운동 확산 등 농촌체험

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설 및 서비스 등의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계속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4년 2,840명 계획)할 예정이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촌관광 체험 콘텐츠 공모, 계절별 테마형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의 6차산업화

✳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재형·방도혁·이재천

☑ 시행배경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제조·관광 등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경영능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동안, 농가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 추진되었던 신활력사업이나, 향토산업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및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이 6차산업화와 관련되어 추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처별, 품목별로 제조·가공 분야, 음식·관광·유통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단위 사업별로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정책사업간 유기적 융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의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 우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대상을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 주도의 6차산업으로 정하였고, 특히 농업소득으로 가계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 사업자의 창업부터 사업화, 활성화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6차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

다. 법률에는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및 6차산업화 지구 등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담겨지게 될 것이다.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에 근거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화 되어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2013년은 6차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농업·농촌 분야 산업들의 융·복합을 위해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6차산업화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정리하고, 사업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 혹은 해당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6차산업화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규제들을 찾아내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에 대한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증대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차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보다 쉽게 6차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매뉴얼 및 지원정책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이미 6차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6차산업화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농가 사이에서 6차산업화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지역 특성에 맞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토자원 산업화

☒ 농촌산업과 사무관 방도혁, 사무관 이재천

☑ 시행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이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여러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 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

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 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제한적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5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사업량(개소)	139	19	30	30	30	30	30	21	
예산(억원)	1,607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409	438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는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는 2,356억원, 2011년도 2,435억원, 2012년도 2,031억원, 2013년도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6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구 분	계	기획평가 구축지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지원
2010	2,356억원	-	1,035	396	10	392	523
2011	2,435	-	848	501	13	547	526
2012	2,031	-	557	545	38	429	462
2013	2,106	4	561	572	50	416	503

* 2013년의 2,106억원은 수산분야 174억원 미포함 금액.

☑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으로 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 내외의 신규지구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여러 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아직도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 유도,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전파를 통해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농공단지 조성

☒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재천

☑ 시행배경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3-61 부처별 지원 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특화농공단지 수산분야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조성 32개소, 개보수 61개소 등 93개소에 50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3년 말 기준으로 453개소를 지정하고 390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3년 말 6,44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683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48천여 명, 생산액 49조 1,633억원(업체평균 86.5억원), 연간 수출액 118억 43백만 달러(업체평균 208만 달러) 등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초 400개소 조성 목표를 조만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조성보다는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년부터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 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신규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의 경영 안정화

가. 농업재해보험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배우용

☑ 시행배경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게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운영하여 대상 품목·축종 및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10만 8천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재해피해가 많아 가입 농가수는 전년보다 24.9% 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포함하여 3,324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만 4천농가가 봄동상해, 태풍, 가축질병폐사 피해 등으로 보험사업자로부터 1,10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2013년 5월에 농업재해보험 제도개편안을 확정하여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국가재보험체계 개편 및 전문손해평가인 육성 등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농작물재해보험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품목수를 늘려 2013년 4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9만 5천농가(경작면적 160천 ha)에 달하였다. 보험사업자는 봄동상해, 태풍 피해 등으로 8,600농가에게 45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위험보장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

(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 중에 배에 대해서는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표 3-6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

구 분	2001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품목(개)	2	7	10	15	20	25	30	35	40
국고지원(백만원)	2,183	70,010	63,852	68,162	77,770	103,086	97,340	144,546	178,895
가입면적(ha)	4,096	21,466	23,661	26,037	48,331	53,452	86,604	108,373	160,203
가입금액(조원)	0.1	0.8	0.9	0.9	1.3	1.6	2.1	2.5	3.3
가입 농가수(호)	8,055	27,398	29,145	32,538	45,882	52,738	67,653	74,983	95,102
순보험료(백만원)	3,016	57,627	55,670	55,423	62,524	86,357	111,004	151,609	226,900
가입률(%)	17.5	24.0	22.7	23.1	12.5	13.1	13.5	13.6	19.1
지급 농가수(호)	407	5,174	7,198	3,382	8,681	14,343	19,611	46,337	8,600
보험금(백만원)	1,319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132,628	490,978	45,088
손해율(%)	45.7	36.6	110.4	45.0	105.8	104.6	119.5	357.1	21.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2013년

2) 가축재해보험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재해보험은 대상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부터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2013년에는 1만 3천 농가가 1억 6천3백만 마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업자는 질병폐사, 화재 피해 등으로 5,036농가에게 65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3-63 가축재해보험 추진실적

구 분	2001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축종(개)	3	9	11	12	12	14	15	16	16
국고지원(백만원)	4,717	19,000	22,892	26,413	29,723	31,675	39,417	52,296	48,126
가입두수(천두)	2,318	53,300	57,535	60,448	63,393	80,479	95,950	128,806	163,325
가입금액(조원)	0.4	1.5	1.7	1.8	2.0	2.2	2.6	3.6	4.6
가입 농가수(호)	4,369	10,920	9,869	9,852	19,866	9,547	12,156	11,250	12,605
순보험료(백만원)	7,007	30,804	38,863	44,323	48,842	53,259	64,648	81,931	105,486
가입률(%)	21.7	40.7	43.9	45.9	48.1	53.1	54.6	71.4	77.3
지급 농가수(호)	1,621	3,205	3,874	4,513	4,520	3,902	3,750	5,396	5,036
보험금(백만원)	4,163	27,330	36,293	50,379	44,333	48,116	48,082	69,309	65,743
손해율(%)	61.0	90.4	102.4	115.0	98.5	98.0	80.6	86.5	78.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LIG손해보험, 2013

☑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정위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거대재해를 대비한 신속한 손해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상품개선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폐사된 가축사체의 도축, 운송비 등 잔존물 처리비용을 주 계약으로 전환하고, 젖소 유량감축 손실 보전과 낙뢰 등 전기적 사고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시행배경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6차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상이변·시장개방 등에 따라 각종 재해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건설하게 영농을 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까지 부채대책(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추진으로 32,933억원의 재정이 지원(이차보전)되었고, 이는 농가당 연평균 2,033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3.3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 농지제도 개선

☒ 농지과 사무관 문지인

☑ 시행배경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허용,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 농지잠식 방지를 위한 가축·곤충 관리시설 및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의 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농지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 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1)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의 완화(농지법 시행령)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리경작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누구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 확대(농지법 시행령)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등의 조정(농지법 시행령)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을 100퍼센트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하였다.

4) 부속시설의 면적제한 규정을 추가(농지법 시행규칙)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 역시 각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향후계획

유희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등의 조정, 부속시설의 면적제한 규정 추가에 따른 농지제도 개선은 변화된 농업여건과 관련하여 유희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운영 현황을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서기관 안진수

시행배경

1996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기후변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暴雨), 폭설(暴雪) 및 장기성 냉·한해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요인으로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산림재해의 대형화 다양화에 따라 2001년 “산림보험제도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2년도에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림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1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대상에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별도항목으로 신설하고 보험사업자와 모집자에 산림조합을 포함하였으며,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T/F팀을 구성하여 단기소득작물 등의 품목확대 및 입목의 보험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추진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 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중에서는 최초로 “뽕은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으며, 연속하여 2007년에는 “밤” 2010년 “대추”, 2011년 “복분자”를 보험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표고를 보험사업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표 3-64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임가, ha,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2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뚝은 감	2,094	1,511	1,580	2,194	1,615	1,985	3,113	2,226	3,275
밤	12	35	5	45	188	19	155	591	97
대추	811	430	713	1,112	532	1,849	751	359	1,284
복분자	400	113	127	400	113	183	371	89	196
표고버섯	-	-	-	-	-	-	3	1	16

향후계획

향후 산림작물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예측, 표준금액산정 및 보험료를 산출, 위험분산방안 등에 대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2. 7. ~ 2013. 6.)에 있으며,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뚝은 감, 밤, 대추 등 생산이 많은 단기소득 임산물에서 입목(立木)을 비롯하여 산림소득작물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아울러,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임산물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어촌어항과 서기관 정동기

☑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 강구 및 어업 외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 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3-65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 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지자체, 수협 등	1998~2001년	60억 원	2개소	융자조건 (연리 5%등)	가족호텔, 휴양시설, 수산물판매장 등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지자체	1998~2005년	420억 원	7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실내·야외전시관, 시청각실, 주차장 등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지자체	2007~2008년	54억원	1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고래전시관, 수족관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계속	-	134개소	국비80%, 70%, 50%	마을안내소, 샤워장, 진입로, 화장실 증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시행내용 및 성과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 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 외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1)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였다.

2)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제공과 지역 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 삼척, 전남 완도, 경남 거제 등 7개소에 4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였다.

3)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소실 위기에 처한 전통 고래잡이 역사현장 보존 및 고래박물관과 연계한 고래문화 체험 특성화 마을 조성으로 지역문화 계승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 남구 고래박물관 일원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고래해체장을 복원하였다.

4)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 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134개 마을조성(마을당 5억원 내외)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 남해 이어 등 전국 122개소에 79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3-66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까지	122	3	5	0	10	11	1	11	7	35	10	20	9
해제	-22	-	-2	-	-1	-4	-1	-3	-	-6	-3	-	-2
2014년 계획	6			2				1		1		2	
장래조성계획	28	-	1	-1	2	3	2	5	-	8	3	1	4
계	134	3	4	1	11	10	2	14	7	38	10	23	11

표 3-67 어촌체험마을조성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사업별		목표	2009년 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34	102	3	3	7	7	34
	사업비	53,893	34,055	1,250	500	1,930	2,777	13,277

* 국비기준(14년 이후 사업량은 해제된 사업장(22) 포함)

5)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관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으로 2005년부터 투자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33개소에 사업을 착수하여 20개소를 완료하였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광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3-68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사업별		목표	2009년 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이후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량	계속사업	19(7)	21(11)	25(15)	30(18)	33(20)	계속사업
	사업비	계속사업	36,088	42,882	49,964	58,440	66,416	계속사업

* 사업량 : 누계기준, ()는 완료누계, 사업비 : 국비 누계기준

☑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시행지역 어촌주민들의 어업 외 소득이 증가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적정수요인 134개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함과 더불어 마을별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으로 운영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연안지역별 맞춤형으로 어촌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어업 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 4 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제2절 채소산업

제3절 과수·화훼산업

제4절 축산업

제5절 임업

제6절 수산업

제 1 절

쌀 산업

1 효율적인 수급조절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 시행배경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비축제와 함께 농업인 소득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2년에 생산된 쌀 4,006천톤과 이월재고 762천톤, 수입 526천톤 등 총 5,294천톤이 시장에 공급되었다. 이 쌀이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0월까지 기간에 4,491천톤이 소비되어 2013년 10월말 총 재고량은 803천톤 수준이 되었다.

2012년에는 태풍 불라벤으로 인한 백수피해 영향 등으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전년의 496kg보다 4.6%(23kg) 감소한 473kg이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0.6%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5.2% 감소한 4,006천톤이 생산되었다.[재배면적 : ('11) 854천ha → ('12) 849천ha]

한편, 2012 수확기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370천톤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363천톤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2012년 수확기 이후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쌀값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비축미 150천톤을 시중에 판매('13.1.17)하여 수급 안정을 유도하였다.

☑ 향후계획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수급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한국은 식량으로 소비하는 쌀의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MMA 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씩 늘어 왔다. 이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 민간유통기능 강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성기

☑ 시행배경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1년까지 RPC 328개소(농협200, 민간 128)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이후 RPC통합 및 규모화 정책으로 2013년말 까지 총 8,233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234개소(농협151, 민간 83),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1,301개소를 설치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RPC의 과다설치로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1995년부터 지원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용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고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들녘경영체 및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75개소 육성을 목표로 RPC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RPC에는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2006~2007년 2년간 시범 추진 후 시행된 수탁판매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13년까지 45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대표브랜드 7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3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성기

☑ 시행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 비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 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7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로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둘째로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로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확대,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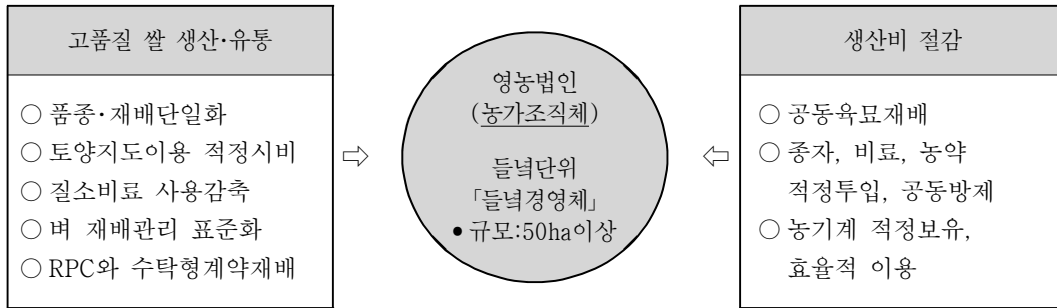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앙,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50ha이상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규사업(12개소)으로 추진하였고, 전문 컨설팅업체, 사업참여 경영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158개소의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위해 고령화 및 영세농 위주의 인적구성, 품종의 반복, 다수 생산자, 수확기 집중 매입 등으로 매년 수확기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장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2년에 ‘수탁형 계약재배’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육성하는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약정한 RPC 2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기준 ‘수탁형 계약재배’ RPC 4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향후계획

그 동안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

회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경영측면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탁형 계약재배 사업결과를 집중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농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쌀 소비 촉진

✕ 식량산업과 사무관 송재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내 생산량과 의무 수입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 쌀 수요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주식인 건강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사업 초기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먹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밥 중심의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식문화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이 필요하여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을 선

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10~2012년에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사이버 쌀 박물관을 통해 쌀 소비 촉진관련 콘텐츠 개발, 쌀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사업 추진을 통해 쌀의 영양학적 장점 등의 우수성을 알리고 밥 중심의 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쌀 및 쌀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및 쌀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쌀가공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1.11월)하고 이를 통해 쌀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신세대 입맛에 맞는 쌀요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쌀문화공모전,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대회, 가래떡데이행사, 쌀요리경연대회, 쌀면·떡볶이페스티벌, 쌀밀가루 공급 본격 추진 등 “쌀가공품평회”, “쌀요리체험프로그램”, “쌀가공업대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쌀과 함께하는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쌀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지양하고 사회 저변에 쌀 및 쌀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제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익성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쌀가공업체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쌀가공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기본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노지채소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정락

☑ 시행배경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은 시행 초 배추·무에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다.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협 등에 융자금(무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95년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단기간에 사업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농협과 유통공사(aT)의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던 계약재배 목표를 현실화하여 '17년까지 30%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내실화도 병행하였다.

먼저 농협의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매취사업에서 수탁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매취사업 방식에서 수탁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동 출하하는 수탁 물량에 대해서는 품대의 80%까지 지원하고, 시장격리 시 수탁사업 참여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수탁형 사업에 대한 공동선별비, 포전관리 및 출하작업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협중앙회와 사업농협의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중앙회는 판매사업을 주관하고 사업농협은 계약 및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출하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업 농협이 계약 등 사업을 주관하고 중앙회가 위탁 판매하는 연합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참여농가 및 조직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고추 비가림시설, 마늘 종구갱신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사업 등 정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시장격리 대상도 계약재배 물량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예비묘를 생산(배추 170만주)하여 계약재배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을 현실화(8~23% 증)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재배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향후계획

농협과 유통공사(aT)의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계약재배 확대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농협 중앙회 판매사업 물량의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고 연합사업 품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탁사업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탁물량에 대해 출하의무를 부여하고 목표가격 미달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차손 보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14년 완공되는 무·배추 출하조절시설(강원, 경북)을 활용하여 상시비축 등 출하조절을 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다.

2 시설채소

☒ 원예경영과 방문진 사무관

☑ 시행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의 기반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시설채소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에 따라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 지원된 시설원예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전문가를 통한 시설원예 작물재배 및 관리 기술·경영 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지순회 지도 등을 통해 시설원예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48종의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및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비닐하우스 36, 인삼재배시설 10, 버섯재배사 2)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후 온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의 40%에 달하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농어업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농어업용 에너지 비용을 20% 절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녹색농어업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비롯하여, 기존의 경유 의존율을 감축하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지열과 목재펠릿을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

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 357ha, 목재펠릿난방기 570ha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지열냉난방시설이 축산분야에도 확대·지원되었다. 2011년 6월에 수립된 농어업에너지합리화 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유류 의존도를 2009년 91%에서 70%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계획

한정된 자원인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스 등 지속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의 유류 및 전기 사용이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절감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 시설농업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제 3 절

과수·화훼산업

1 과수산업

☒ 원예경영과 사무관 진필식

☑ 시행배경

과실류는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03년 이후 소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과수농가 290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22.5천호이며, 대부분이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6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과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1인당 소비량도 60kg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04년 한·칠레 FTA발효 등 FTA 확대에 수입과실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그 동안 과수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 진전이 미흡하고, 각 국가와의 FTA 확대와 국내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산업발전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

2004년부터는 한·칠레 FTA이행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까지 7년간 FTA기금 1조 2천억 원을 조성하여 과수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는 한·미 FTA 등 각 국가와의 FTA 확대와 국내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여 2017년까지 경쟁력제고, 경영안정지원 등에 1조 3천억 원을 지원 하는 FTA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과수시설현대화 등 과수경쟁력제고에 2012년에는 1,111억 원, 2013년에는 1,1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670억 원(4,050ha)을 지원하였고,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19억 원(564ha)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경영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는 과원매매·임대차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7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이 되는 과수묘목에 대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지원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개소를 선정하여 1,23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개소가 준공·운영됨으로써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산과실의 품질 균일화와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과실공동브랜드 17개소를 육성하여 12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였다.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폐업지원제도는 '04년도 도입하여 '08년도 종료되었으나 '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재도입되었고, 협정발효 후 5년간('11.7 ~ '16.6) 시행할 계획이다. 한·칠레 FTA로 인한 폐업지원은 지원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여 폐업지원금을 과다하게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어, '07.11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시 품목선정 기준(사전지정→사후지정)* 및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순수입→순수익)**을 변경하였으며, 2012년, 2013년 각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피해 품목 미 발생으로 지원되지는 않았다.

* (과거)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현행) 수입증가로 피해 품목을 사후지정

** (과거) 순수입(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현행) 순수익(순수입-토지·자본용역비)

또한, 시설포도·참다래의 수입증가로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소득보전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였으며 당해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가격차의 80% 보전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시설포도는 4,560원/kg이며, 참다래는 1,700원/kg으로 2010년까지는 지급요건 미 발생으로 지원되지는 않았다. 2011년 한·미 FTA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을 피해보전직불로 명칭을 바꾸고 품목 사전 지정 방식에서 사후 지정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피해보전직불은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행하며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가격이 최근 5개년 가격가운데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9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품목별 직전 5개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90%)과 당해 연도 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계획이며, 2012년, 2013년에는 6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요건 미 발생으로 지원되지는 않았다.

☑ 향후계획

2014년도에는 지난해 보완 수립한 과수산업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비 573억 원을 지원하여 3,520ha 규모의 과원에 대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44억 원을 지원하여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러스 등 병해충

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규모화와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2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에 62억 원을 지원하고, 브랜드육성 사업에도 9억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화훼산업

☒ 원예경영과 사무관 우현경

☑ 시행배경

2013년 화훼 재배면적은 6,460ha로 2005년 7,568ha에 비해 14.6% 감소한 수준이다. 분류별 재배면적을 보면 절화류·분화류의 경우 감소한 반면 초화류·관상수류·화목류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시농업, 조경산업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면적은 과채류 등 타작목으로의 전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6% 감소하였다.

표 4-1 화훼생산현황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배농가(호)	8,945	12,509	13,080	12,859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9,450	9,147
재배면적(ha) <시설면적>	3,674 <3,503>	5,343 <3,054>	6,047 <3,336>	7,950 <3,448>	7,509 <3,208>	7,073 <3,063>	6,639 <3,112>	6,829 <2,994>	6,833 <2,856>	6,538 <2,674>	6,460 <2,553>
생산액(억원)	2,628	5,090	6,650	10,105	9,237	8,969	8,640	8,510	8,215	7,567	7,3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난 10년 동안 농업에서 화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재배면적, 농가수, 총생산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농업 중 화훼산업 비중

연도	재배면적(천ha)			농가수(천호)			총생산액(10억원)		
	전체(A)	화훼(B)	비중(B/A*100)	전체(A)	화훼(B)	비중(B/A*100)	농업(A)	화훼(B)	비중(B/A*100)
1995	1,985	5.16	0.26	1,501	12.51	0.83	25,855	509	1.97
2000	1,889	5.89	0.31	1,384	13.08	0.95	32,164	665	2.02
2005	1,824	7.95	0.44	1,273	12.86	1.01	35,089	1,011	2.88
2006	1,800	7.69	0.43	1,245	12.44	1.00	35,232	941	2.67
2007	1,782	7.51	0.42	1,231	12.02	0.98	34,685	924	2.66
2008	1,759	7.07	0.40	1,212	11.59	0.96	38,470	904	2.35
2009	1,737	6.64	0.38	1,195	10.69	0.89	41,364	864	2.09
2010	1,715	6.83	0.40	1,177	10.35	0.88	41,677	851	2.04
2011	1,698	6.83	0.40	1,163	10.05	0.86	41,358	821	1.99
2012	1,730	6.53	0.37	1,151	9.45	0.82	44,300	757	1.71
2013	1,711	6.46	0.38	1,142	9.15	0.80	44,609	737	1.65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꽃 소비문화를 정착하여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고, 침체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3년 「꽃 생활화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생산, 유통, 소비, 수출로 구분하고 생산자 단체,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왔다.

첫째, 고품질 화훼 안전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양액재배 및 에너지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처리, 저온유통 및 병해충 방제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 수출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화훼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우수 신품종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우량종묘, 구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둘째, 화훼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선진국 수준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충청권에 설립중이며, 고품질 화훼 유통을 위해 습식유통 시범사업을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 꽃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하여 「2013 대한민국 화훼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꽃을 사랑하는 유명인 선정’, ‘스타마케팅’, ‘이달의 꽃 홍보’ 등 꽃 생활화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꽃사랑 농업사랑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초등학생 5~6학년, 10만명에게 소형 화분을 보급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미래소비자의 관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접점인 일선 화원의 의식전환과 전문성 강화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한국화원협회와 함께 「착한꽃집」3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착한꽃집」을 대상으로 분화용 QR코드 부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꽃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가정에서 기르는 꽃의 이름, 특징, 물주기, 공기정화 등 꽃 관리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제공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계획

최근 국민들이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꽃을 가꾸고 즐기려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화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꽃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신상품을 개발 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유망품목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화훼가 고소득 농산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화훼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우수한 국내품종 개발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집단화된 화훼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 선진화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며, 화훼유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습식유통기반을 경기권에서 전국 농협공판장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화원의 역할 확대 및 전문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화훼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꽃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절화중심의 수출에서 분화, 자생화 등으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위주의 수출에서 러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등 시장개척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축산업

1 한우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 시행 배경

한·미 FTA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 시행 내용 및 성과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12)말 가임암소 마리수 대비 44%가 사업에 참여하여 566천 마리가 가입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을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지급조건을 개선하였고, 가격조사대상 송아지를 기존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준가격도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도 중점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40여개 한우 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에는 쇠고기생산성향상 지원사업과 한우농가 조직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농가조직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우산업 조직화로 시군 지역별로 한우사업단 162개를 인증하였으며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한우농가조직화사업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한우사업단 10개소에 대하여 10억원씩 지원하였다.

아울러,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대책은 대형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직거래 장터, 브랜드가맹점 등 직거래 확대,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홍보 및 산지 소값 안정대책

한우자조금의 경우 할인판매 지원 등 소비촉진과 교육·홍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TV광고 제작·방영,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월) 및 쇠고기 이력제('09.6월)의 전면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 산지 소값이 한·미 FTA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 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의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260천톤)이 2012년(234천톤) 대비 10.8%, 2011년(186천톤) 대비 20.1%로 크게 증가하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한우의 가격 하락의 피해가 인정되어 2012년에 한우 및 한우 송아지를 출하한 농업인에 대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후계획

그간 산지 소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소 사육마리수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1년부터 농가 자율적으로 사육마리수를 감축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결의대회, 저능력우 대상 농가 자율도태 등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한우의 출하기간을 고려할 때 사육마리수 연착륙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소 사육마리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개선 및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 등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우량 송아지 공급을 통한 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은 2017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낙농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우만수

☑ 시행 배경

DDA, FTA 확대 진전으로 유제품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우위에 있는 가공유제품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과 국내 낙농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가격 경쟁력 열위, 수급상황과 무관한 가격결정 체계, 산업주체 간 협력체제 미 구축, 유업체 주도의 수급조절체제 지속 등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 확립을 통한 유통의 합리화, 생산자 자율에 의한 원유수급조절체제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시장의 확대에 낙농과 유업체의 공동노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안정 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시행 내용 및 성과

낙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급불균형 및 낙농가-유업체간 원유가격 갈등해소,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낙농산업선진화대책(13.6.7)」이 확정·발표되었다. 동 대책의 일환으로 원유수급 안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원유쿼터관리를 위하여 원유생산 쿼터관리, 수급안정을 위한 낙농수급조절협의회 구성, 원유거래 기본원칙 마련, 소비확대 대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를 시행(14.3.11) 하였으며, 국내 낙농생산 기반 유지 및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자 지원시기를 조정하고 수요자 지원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제품 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유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14.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우유생산비를 반영하여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첫 시행되었으나, 시장조절 기능 저하 등 개선·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13년 수급상황은 '12년대비 18만톤 감소한 2,093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28천톤을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412, 가공시유 175, 유제품 341)하고 나머지 165천톤을 분유로 가공한 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표 4-3 우유 수급상황

(단위: 만 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생 산	223	218	219	214	211	207	189	211	209
- 수 요	308	312	310	304	311	325	360	345	368
·시 유	154	156	158	158	157	154	148	158	159
(백색시유)	(132)	(136)	(138)	(138)	(140)	(138)	(132)	(141)	(141)
·유 제 품	154	156	152	146	154	171	212	187	209

또한, 정체상태에 있는 유제품 소비홍보를 위하여 우유자조금 사업으로 우유의 우수성과 우유 음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낙농관련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08년부터 '12년까지 실시한 낙농체험 관광사업을 통해 전국에 체험목장을 조성함으로써 '13년 한 해동안 30만명이 방문하는 등 도시민에게 우유와 낙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체험목장을 학생들의 우유급식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소년기의 우유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 워크숍 및 스쿨밀크 웹진 발간,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부대행사로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참여 경연대회,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업체의 자율적인 학교우유급식발전 사업비 거출(0.7원/팩)을 통해 지속적인 우유급식 확대 및 홍보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표 4-4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단위 : 천 명, 천 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3,768	3,855	3,762	3,654	3,538	3,456
	유상급식	3,328	3,464	3,260	2,840	2,547	2,477
	무상급식	440	390	502	814	991	979
연간 원유 총생산량(A)		2,139	2,110	2,073	1,889	2,111	2,093
연간 백색우유 소비량(B)		1,385	1,390	1,362	1,338	1,405	1,392
우유급식 연간 소비량(C)		146	148	147	142	138	135
대비율	백색우유 대비 (C/A)	10.5%	10.6%	10.8%	10.6%	9.8%	9.7%
	생산량 대비 (C/B)	6.8%	7.0%	7.1%	7.5%	6.5%	6.5%

표 4-5 최근 5개년 우유급식률 변화

(단위 : 천 명,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초	2,798	80.5	2,682	81.3	2,534	80.9	2,427	82.2	2,288	82.2
중	622	31.0	628	31.8	630	33.0	635	34.3	672	37.2
고	416	21.2	432	22.0	469	24.1	454	23.6	476	25.1
특수	18	76.3	20	81.5	21	86.1	23	93.7	20	79.6
계	3,854	51.6	3,762	51.8	3,654	52.1	3,538	52.5	3,456	53.1

향후계획

낙농가의 안정적인 원유생산과 소득안정을 위해 원유수급조절 및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국산 우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新 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유제품 해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국산우유 소비촉진을 통한 자급률 향상을 위해 국산우유 사용(K-MILK)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낙농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3 양돈산업

☒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서재호

☑ 시행배경

FTA 등 대외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유류비 상승, 분뇨처리 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말 발생한 구제역을 극복하여 2013년 12월 현재 991만마리로 작년 동기 992만마리에 비해 0.1% 감소 하였으며, 양돈농가수는 5.6천호로 전년 동기 보다 감소하였다.

구제역 극복으로 2013년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하여 공급량 감축(모돈 감축)을 추진하고 도매 시장 가격 지지를 위한 도매시장 공급 물량 구매 비축 지원 및 돼지고기 수요 확대를 위하여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소비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돼지고기 수출 추진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을 수출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생산성향상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작업과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돈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돈팜스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양계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주동철

☑ 시행배경

2013년 12월 양계 전업규모(3만마리 이상) 농가는 1,850호로 전체 사육농가 3,087호 대비 60% 수준이며, 사육마릿수 점유율은 87%로 규모화 및 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13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58만톤이며, 이중 수입량이 13만톤으로 자급률은 78% 수준으로 2000년 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 수입국가는 브라질(5만9천톤)과 미국(4만5천톤)으로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닭고기 수출량은 26,117톤으로 베트남 수출증가 등으로 2000년 1,710톤보다 15배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축사에 대한 시설현대화, 가축계열화사업, 계란 집하장 및 가공장 시설사업, 양계자조금 지원 등과 더불어 양계산물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되었으며,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양계농가에 227개소(70,413백만원) 사업 비 선정기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3개소의 계열주체에 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계란의 수급조절 유도를 위해 계란 집하장·가공장 시설자금 52억원을 3개소에 지원하였다.

한편, 그동안 육계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으나,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농가들은 사육경비 및 병아리 등 원자재 품질 등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2009년 계열화사업 연구용역 실시, 관련단체 및 전문가와 계열화사업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농가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원 입법 과정을 통해 '13.2.2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의 분쟁 등을 해소하여 상호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 양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2013년도에도 소비홍보, 농가교육,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등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2014년도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계열화사업, 계란집하장 및 가공장 사업, 양계자조금 지원 등을 통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유도, 사육자재 등 품질기준 고시 준수, 분쟁조정 위원회의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연 2회) 실시, 모범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방역관리과 사무관 홍기성

시행배경

국제 사료가격 상승 및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조사료 공급을 위하여 논을 이용한 동계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보다 저렴한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비,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조사료 유통센터 등 예산지원을 '12년 1,240억원에서 '13년 1,5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겨울철 유희(논·밭)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내산 사일리지 품질균일화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종·축산농가의 상호신뢰 회복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사업비 지원단가를 사일리지 제조비는 60천원/톤, 경영체에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150백만원/30ha, 장거리 운송비는 60천원/톤(기금 40%, 자담60%)을 지원 중에 있다.

소 사육두수 및 조사료 급여비율 증가로 조사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량도 증가되어 '13년도에는 조사료 공급량이 573만톤 수준이다. 이중 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은 4,672천톤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수입산은 1,059천톤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면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13년도 조사료 자급률은 82%('12년도(80%)

보다 2% 증가)로서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가 등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저하(수분과다, 이물질 함유 등)에 따른 수입건초 선호(품질균일, 이용 편리성) 등에 기인한다.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강화 등으로 유희농경지 이용이 증대되어 조사료 재배 면적은 '12년 대비 11.2% 증가한 298천ha이다.

☑ 향후계획

그간, 우리부에서는 기후변화, 개방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사료 생산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조사료 증산대책('11.10)」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조사료의 낮은 수익성, 이모작 기피 경향으로 경종농가의 참여 저조에 따라 목표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해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유희산지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선 다변화,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도를 위한 품질평가 및 가격차등구조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13.4)」을 마련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14년부터 동계 유희논을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시 밭직불금을 지원(40만원/ha)함으로써 경종농가의 유입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를 도모하고, 품질평가를 통한 품질등급제를 운영('14~'15 시범)함으로써 고품질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방역관리과 사무관 김정주

☑ 시행배경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

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수립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월)」을 수립하였다.

대책은 4개 대과제 및 16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통해 ‘17년까지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민간전문관리 설립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 및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12년 693억원에서 2013년 853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9) 754 → (‘10) 791 → (‘11) 801 → (‘12) 693 → (‘13) 853

또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2년 88.7%에서 ‘13년 89.2%로 끌어 올렸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녹색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5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

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1991년부터 2013년 까지 16,46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액비저장조 700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1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4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 5개소 → ('09) 39 → ('10) 56 → ('12) 85 → ('13) 98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태 등 평가

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평가결과 3년 연속 “하”등급을 받는 경우 모든 정책지원을 제외하고, 불량 액비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액비저장조의 이용을 제고를 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저장조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소비정책과 사무관 정승교

☑ 시행배경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더욱 확대하여 식용란을 생산하는 부화장에서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로써 주요 축종에 대하여는 농장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 HACCP 시스템(Farm-to-Table HACCP system)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

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총 217천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198두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검출율 0.10%)되었다. 이는 2012년도의 잔류물질 검출률 0.2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부적합률은 미국·EU 등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 균의 오염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축산농장에서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4,079개소에서 2013년 5,310개소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제기된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및 보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부산, 난산, 산육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고, BSE 검사를 거친 후 폐기하고 폐기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4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감축하여 2011년 7월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2013.8)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 HACC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전문인력 확충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며,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장 및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방역총괄과 사무관 장재홍

☑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미국·일본 등에 소해면상뇌증(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 체계 전환에 따라 농가의 자율접종체계 확립 및 백신접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 결정이후, '11.9월부터는 기존 O형 단일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형+A형+Asia1형)을 100% 공급하고 있고,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담당농장을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검사와 혈청검사를 확대·강화하여 백신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점 관리하였다.

'10~'11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 단계로 격상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

시한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매뉴얼 습득 및 지자체·관계기관의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 강화하여 '13년에는 4회(현장훈련, 매뉴얼 훈련, 도상훈련, 평가대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소독 전담반(400개)이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 예찰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 417명을 채용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월 2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농가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통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11년 4월 경북 영천 마지막 구제역 발생이후 여러 차례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그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제시하는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조건에 따른 방역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13년 10월 11일에는 우리나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서를 OIE에 제출하였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하지만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고병원성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심 할 수는 없는 상황임으로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형식

☑ 시행배경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 설치로 시작된 UR다자간 농산물협상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DDA, FTA, 쇠고기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물 수입확대 추세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축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화 및 가축개량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산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화 거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00년)하여 도축되는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계란(2001년)과 닭고기(2004년)에 대해서는 업체의 희망에 따라 등급판정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거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현재 주요 축산물(소, 돼지, 계란, 닭, 오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축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된 후 도체상태로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위생검사에 합격된 도체만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체별로 시행된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도체의 품질가치가 유통단계 및 소매단계까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도소매 가격이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2013년 등급별 가격차이는 한우의 경우 최고등급인 1++등급과 최하등급인 3등급 간 8,365원/kg으로 2012년 대비 822원이 축소되었으며 돼지는 1+등급과 2등급 간 368원/kg으로 2012

년 대비 37원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축산물의 품질 간 가격 차등화의 정착은 양축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표인 한우거세율은 2012년 86.1%에서 2013년 93.8%로 7.7%p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의 경우도 거세율은 2012년 98.3%에서 2013년 98.5%로 0.2%p 증가하였으며 1등급(1+포함)이상 출현율도 2012년 65.8%에서 2013년(상반기까지) 67.2%로 1.4%p 증가하였다.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판정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며 엄격한 공정과정 심사결과에 의해 지정된 등급판정시행 작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학교급식법에 납품기준으로 축산물의 등급이 설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정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의 경우 2013년, 35개 시행집하장에서 858백만 개의 계란이 등급판정 되었으며 이는 2012년 판정물량인 713백만 개 대비 20.3%가 확대된 것이다. 닭고기는 2013년 29개 시행 작업장에서 78백만 수가 등급판정 되었으며 2012년 66백만 수 대비 18.2%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계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사업은 학교급식에 이어 대형할인점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에도 등급의 활용도가 확대되어 등급판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이후 그 판정결과 및 연계된 가격정보 등을 신속하게 양축농가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하고, 검증·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시행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된 IT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며 등급통계, 출하지원, 확인서 조회, 경락가격 조회, 돈육대표가격, 축산물검수시스템, 부위별 요리 방법, 축산물브랜드 등 다양한 축산물생산과 유통·소비 정보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등급판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축산분야 전문적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소 검수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률은 77%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여, 등급판정결과 활용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등급판정 대상 품목인 소, 돼지,

계란, 닭 및 오리 등에 대하여 등급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에 맞는 등급제도의 개선, 영농활용 등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용적 해결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등급판정사업 현장과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013년은 대내외 20개 과제를 수행하여, 소·돼지 등 등급판정 기준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그 외 논문투고 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향후계획

국제적 경제 위기,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소비의 효율성과 품질관리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자,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선택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등급판정정보 내에 양축농가 및 유통업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제공이 단절되지 않게 전산장비의 안정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생산·유통·소비주체가 원하는 축산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고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10 축산물 이력제 추진

☒ 방역총괄과 사무관 김정권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 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며,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0년 및 2011년 구제역 발생,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 신속한 방역지원 및 한우 소비량 증가 등 소 이력관리 운영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2011년부터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돼지고기이력제도 실시방안을 준비하였으며, 2013년 12월 27일자로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법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되었으며, 2014년 12월 28일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12년부터 전국 46개 브랜드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

와 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 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지역축협 등 135개소를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시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통 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DNA 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각종 이력업무 처리 속도 및 저장용량 개선 등을 통해 현장업무 및 방역 효율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

돈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돼지고기이력제 업무추진 단계별 사업실시요령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도에는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2013.12.27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2014.12.28일부터 전국적으로 돼지고기이력제가 의무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부터 전국 16개 브랜드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농장단위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는 30개 브랜드 경영체 등을 추가하여 현재 전국 총 46개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전국 돼지사육두수 대비 32.3% 참여 중, 통계청 '13년말 기준)하고 있다.

표 4-6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13.12월 기준)

구분	참여업체	농가 및 마리수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개소수	'12년(1차) 16 (1유형 7, 2유형 9)	558농가(1,200천두)	13	8	34
	'13년(2차) 30 (1유형 20, 2유형 10)	777농가(2,000천두)	19	19	40
계	46	1,335농가(3,200천두)	32	27	74

* 1유형 : 사육 → 판매단계, 2유형 : 사육 → 도축단계

또한, 2013년도에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및 각종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돼지고기이력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애로 및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14년말 전국단위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력번호 표시기 개발·적용 등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쇠고기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기반이 열악한 소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이력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등을 통한 등록 이력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제도 이행수준이 미흡한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

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

2014년도 말 시행 예정인 돼지고기이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돼지도체 이력번호표 시기 설치 확대, 이력지원실 운영, 이력관리시스템 보완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본 사업 시행을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실무협의 회 운영, 교육·홍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에는 돼지사육농가, 유통업소 등 이행대상자에 대한 이력관리 의무 내용 등을 적극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 대상인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자에 대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등을 홍보하여 동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릴 계획에 있다.

그림 4-2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방법

	
<p><쇠고기 이력정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 www.mtrace.go.kr에서 검색 ■ 스마트폰 : 마켓·앱스토어→조회→“안심장보기”앱→설치→이력정보 조회 ■ 휴대전화 : 6626(肉肉이력)+휴대폰 인터넷버튼 	<p><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 : pig.mtrace.go.kr에서 검색 ■ 스마트폰 : 마켓·앱스토어→조회→“돼지고기이력정보” 앱→설치→이력정보 조회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 시행 배경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 시행 내용 및 성과

축산물의 브랜드 사육비중은 2004년 한우 21.8%, 돼지 45.5%이던 것이 2009년 각각 42.4%, 62.0%로 크게 향상되었고, 2013년에는 한우 55.7%, 돼지는 48.3%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지속적인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TA/DD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 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서 ①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도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9개소, 979억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 중점 지원하고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도축두수의 1% 수준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집중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을 통해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컨설팅·교육 강화와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안의섭, 서은경

☑ 시행배경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종자의 개발과 이를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으로 육성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유전적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은 종자와 묘목이 사용될 경우 임목의 생장감소가 수확기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불량한 형질의 임목이 생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지가 확실한 우수종자를 사용하고,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림조립용 불량종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조립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량한 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종자를 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에서 생산·공급하거나 종자의 산지 확인, 품질관리는 물론 나아가 양묘에서 조립전까지 산림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행을 위하여 국제식물 신종보호연맹(UPOV)에

가입(2002.1.7.)하여 식물신품종보호제도(PVP, Plant Variety Protection)를 도입하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이 영향에 따라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체결된 이후 2010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이 채택되는 등 생물종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송 등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는 *Rubus*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을, 2012년 1월 7일 부터는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품종(임산물)은 현재 약 7,400여 종으로(표 4-7 참조)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의 취지로 미루어 향후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신품종 출원 유도 및 개인 육종가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강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신품종 요건 심사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2008년 8월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5건의 신품종 출원을 유도하였고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1,590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중

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147종을 개발하였고, 신제품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11년 처음 9품종 등록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48건의 신제품이 등록되었다.

표 4-7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중

구 분	산 립 분 야
2008. 3. 1(15종)	뽕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백운풀, 별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2009. 5. 1(약 7,462종)	모든 산림식물(Rubus屬 제외)
2012. 1. 7.	모든 식물

※ 자료 : 농림부 고시 2008-10('08. 2. 21), 2009-28('09. 5. 1), 2011-178('11. 11. 2.)

표 4-8 산림분야 신제품보호 출원현황

구 분	산 립 분 야
2008(18)	밤나무(5), 표고버섯(3), 쑥(3), 감나무(2), 기린초(2), 별개미취(2), 백운풀(1)
2009(45)	표고버섯(10), 감나무(5), 밤나무(5), 곰솔(4), 음나무(3), 잔디류(3), 구절초(2), 대추나무(1), 등골나물(1), 먼나무(1), 부처꽃(1), 산양삼(1), 소나무(1), 억새(1), 인동덩굴(1), 주름잎(1), 주목(1), 쯤개미취(1), 지리대사초(1), 털부처꽃(1)
2010(38)	표고버섯(7), 아까시나무(4), 헛개나무(3), 감나무(2), 곰솔(2), 구절초(2), 밤나무(2), 현사시나무(2), 개미취(1), 금평의다리(1), 대추나무(1), 돌나물류(1), 사스레피나무(1), 산사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소사나무(1), 우목사스레피나무(1), 장수버섯(1), 쯤개미취(1), 해국(1)
2011(29)	개미취(1), 곰취(1), 구절초(1), 기린초(2), 꾸지뽕나무(2), 대추나무(1), 두릅나무(1), 마가목(3), 말오줌매(1), 밤나무(1), 백화등(1), 산초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어리병풍(1), 표고버섯(9)
2012(38)	감나무(5), 곰취(3), 구절초(1), 꾸지뽕나무(1), 다래(1), 동자꽃(2), 백리향(1), 복분자딸기(5), 비비추(1), 소나무(1), 원추리(4), 잔대(1), 쪽(1), 찔레꽃(2), 털머위(1), 털목이버섯(2), 표고버섯(3), 호두나무(3)
2013(38)	음나무(3), 감나무(1), 잔디(7), 소나무(1), 반송(1), 쪽(1), 다래(2), 잣버섯(1), 꾸지뽕나무(2), 털목이버섯(1), 로스트라타노각나무(1), 함박꽃나무(1), 호두나무(4), 왕대(2), 산초나무(1), 기린초(1), 밤나무(1), 표고버섯(5), 헛개나무(1), 꽃송이버섯(1)

※ 자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등록원부

그림 4-3 제정된 중별 특성조사요령



그림 4-4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나) 산림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책임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책임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 현재 26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특성평가 및 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5천종, 103만점의 생명자원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표 4-9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단위 : 종, 점, ha)

구 분	종수	보존점수
종자	2,432	33,209
영양체	5,335	446,860
미생물	563	2,313
DNA	14	24,969
집단(현지내보존, ha)	16	2,938ha
식물·곤충표본	16,707	528,705
합계	25,051(16집단)	1,036,056(2,938ha)

※ 자료 : 2013년 농수산생명자원 시행계획 - 산림분야 생명자원 보유현황('13)

다) 우량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검증된 우량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및 채종림(채종임분 포함)을 확대 지정하고 채종원과 채종림의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10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

구 분	면적(ha)	대상 종	비고
채종원	759	60	
채종림	202	13	지정·변경('94~'12)

※ 2013년 12월 현재

라)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영세한 묘목생산을 지역기반 종자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자 2002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클론생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1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관 정	136공	20	20	22	10	10	11	5	6	9	7	8	8
간이온실	140동	16	14	17	9	9	10	8	12	15	2	14	14
토양개량	434ha	-	96	98	62	51	12	35	42	10	4	12	12
클론생산시설	23동	-	-	-	-	-	-	-	-	-	11	6	6

※ 산림청, 2013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향후계획

가)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육종가의 신품종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종별 특성 조사요령(TG) 등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신품종 보호 조기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 및 묘목시장에서 불법종자 근절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대한 계도 등 종자유통단속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10.10, 나고야)」이 채택됨으로써 3개 책임기관과 함께 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 작성과 조사·수집·보존·증식 및 Gene Bank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산림생명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물질을 탐사하는 연구도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다.

나)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및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채종원 등을 961ha(73종)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조성 시설(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클론생산 시설 등)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한 종묘생산업이 지역기반의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녹색성장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한창술

☑ 시행배경

일본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히 황폐해진 산림을 녹화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제1, 2차 치산녹화('73~'87),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88~'97),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에 따라 조림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을 수립하여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13년까지 436만ha에 111억 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여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대통령 '08.8.15. 광복절 경축사)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여, 2013년에는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 1만 6천ha(4,000만 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3천ha(500만 본), 유희토지 조림 1천ha(100만 본) 등 총 2만 2천ha(4,700만 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비축과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등 국토보전의 공공적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조림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수종을 집중적으로 심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 산림녹화

시기에 심어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공익조림을 실시하고, 산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 및 안면소나무를 고품격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충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유희토지 조림 등 산림의 기능과 산주의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4-5 한국의 치산녹화



▶ '60년대 황폐한 산림('60년대 서울)



▶ 녹화된 산림(강원 횡성)

조림수종은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 목재생산을 위한 용재수종을 기본수종으로 하고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옻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등과 같은 특용수종을 심었으며, 생활권 주변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벗나무 등과 같은 경관수종을 심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리기테다소나무 등 생장이 빠른 속성수를 바이오순환림으로 식재하고, 조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치산녹화기에 심어진 리기다소나무는 벌기령이 지나 쇠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벌채를 통해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백합나무 등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2013년에는 1만 1천ha의 리기다소나무 등 불량림 수종갱신(樹種更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종갱신을 통해 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2013년에는 산사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 등의 산림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조립을 위하여 산림재해방지조립을 2천ha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조립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6 산림재해방지 조립



▶ 산불피해지 조립 전(강원 양양)



▶ 산림재해방지 조립 후(강원 양양)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유휴토지 조립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2,500ha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2007년도에 절반에 가까운 1,051ha를 조성하고 유휴토지 조립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2,000ha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8,528ha를 조성하였다.

표 4-12 최근 3년간 조립사업 추진실적

단위:ha, 백만본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면적	62,998	21,179	20,039	21,780
본수	135	45	43	47

향후계획

산림자원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바이오순환림, 유휴토지 조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목재자원 공급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08~'17)동안 23만 1,000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할 계획('20년까지 10만ha)이며, 매년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조림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제림 단지 육성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권장현

☑ 시행배경

우리는 일본강점기와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헐벗고 황폐된 산림을 국민적 노력으로 불과 3~40년 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만큼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산림면적의 59%('10년 말)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으로서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70~80년대 국토녹화 이후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 수종을 다양화하는 등 경제림 조성 과 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육성할 대상지가 구분되지 않아 집약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인공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3년간('99~'02) 경제림 대상지에 대한 산림실태를 조사하여 '02. 7월 경제림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8월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조사하여 2003.12월 전국 1,221개단지, 245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선정하고 수치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림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경제림 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림 단지를 최종 정비

하여 전국 450개 단지 292ha(국유림 105개단지 58만ha, 민유림 345개단지 234만ha)를 확정(2005.9월)하여 경제림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13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2005년)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단지 수(개소)	450	105	345
면적(만ha)	292	58	234

경제림 육성 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별 산림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여건과 임상, 산림기본계획 등 기존 산림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산림관리계획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민유림 128개 시·군 345개 단지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며,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방안과 장기 경영모델을 마련하고자 기초연구(2007~2009년)를 수행하였다. 경제림단지 지정 익년도부터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을 경제림단지에 집중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림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목재생산위주의 경제림단지를 목재생산 경제림단지와 소득수종을 포함한 일반경제림 단지로 재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4-7 경제림육성단지 입목생육 상황



▶ 대관령경제림육성단지(금강소나무, 강원 강릉)



▶ 방장산경제림육성단지(편백나무, 전남 장성)

☑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2년 말 현재 16.2%로 약 83.8%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92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경제림 육성단지 중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하고 산림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산림경영 의지가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고, 산림경영전문가가 수립한 장기 산림경영계획을 토대로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우수 산림경영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도재영

☑ 시행배경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전국(산림 637만ha)을 6대 기능⁸⁾으로 구분하여 산림의 고유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기능별 잠재력을 고려하여 GIS 기반의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8) 6대 기능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특성상 별채를 통한 투자자본 회수율이 낮아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국토자원 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월등히 높아짐을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100%(2013년 이전 90%)를 보조하고 있다.

녹화된 산림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며, 산림을 통해 농산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녹색 복지국가 시대의 주요 산림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98~'07)동안 총 301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현재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이며, 2008~2013년까지 261만 7천ha를 실행하였다.

표 4-14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3)

(단위 : 천ha)

연도	실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5,627	4,892	735
1998-2007	3,010	2,574	436
2008-2012	2,246	1,985	261
2013	371	333	38

주 : 정책사업에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을 포함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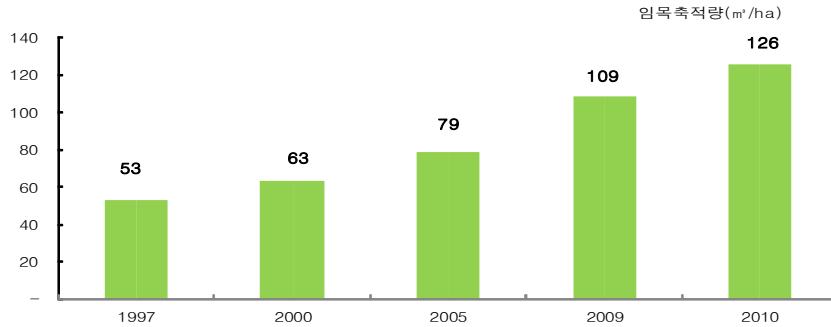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숙련된 임업 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사업으로 실행되는 정책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종료 이후 산림분야 기능인 양성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병행 추진되었다.

그 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 본격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이 1998년 이전보다 약 2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숲가꾸기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숲이 더욱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8 연도별 임목축적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기후변화 대응 및 농산촌 일자리 창출로 녹색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에 총 130만ha 숲을 가꾸어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숲가꾸기의 주요 추진 성과로 첫째, 우리 숲의 외연적 성장과 더불어 숲의 내부구조도 다층화 되는 등 숲의 생태적 안전성이 증진되었다. '02년 조사된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산림 215만ha를 대상으로 '제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13)'에 따른 1차 숲가꾸기를 완료하여 숲이 더욱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산림 영급별 목재의 안정적 생산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림단지 중심으로 정책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숲가꾸기 작업시 베어진 산물의 수집에 주력하여 펠릿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자원과 산업용재로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인공조림지 위주의 숲가꾸기 비중을 확대하여 경제림 자원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숲가꾸기 산물수집 공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을 집단화·규모화하고 숲가꾸기 설계 단계부터 산물수집·공급·활용 계획을 반영하고 임업기계장비 활용확대를 통해 2010년 이후 연간 100만m³ 이상을 꾸준히 수집하여 산림자원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4-15 숲가꾸기 산물 수집 실적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집량 (천㎡)	6,516	380	653	819	1,132	1,301	1,202	1,029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셋째,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그룹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현장 토론회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임업기술 습득으로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정례화하여 현장 근로자의 기술자격을 관리하고, 숲가꾸기 담당자 실무교육 및 근로자 기술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업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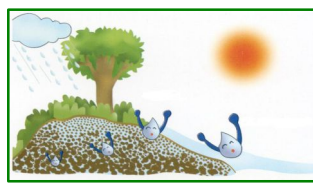
또한, 숲가꾸기 실행지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13.12)’을 구축하고, 세부실행내역 및 임지정보에 대한 이력을 DB로 구축하여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넷째, 녹색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의 맑은 물 공급기능을 개선하고 수자원 확대에 기여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전국 29개 기설 댐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따른 댐유역 숲가꾸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녹색댐 기능



홍수조절기능



갈수완화기능



수질정화기능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섯째, 산림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물수집 품셈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12.1)하였으며 산림의 고유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을 제작('13.3)하였다.

또한,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2014~2018) 추진계획을 수립('13.12)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 등의 재해예방·복구를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은 산주의 동의 없이 우선으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12.6)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3년부터는 현장 산림재난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전국 27개단으로 확대·운영하여 생활권 주변 피해 위험목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대국민 현장민원을 해소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 10년간 「제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육림(育林)차원을 넘어 종합적 산림관리 정책으로 진화하였다.

이 시기에 목재생산 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산림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별 산림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2014년은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2014~2018) 추진계획의 처음년도로서 2,496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4만 6천ha(5개년 계획 139만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12천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표 4-16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구분	단위	연도별 추진계획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책숲가꾸기	천ha	1,386	246	270	270	300	300
공공산림가꾸기	명	22,900	3,380	4,380	4,380	5,380	5,380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17 2014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구분	계획	비고
숲가꾸기(ha)	246,000	
· 민유림	199,000	· 정책숲가꾸기
· 국유림	47,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명)	12,238	· 상시고용사업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서는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라는 목표아래 1)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계획 확립, 2) 경제림 육성을 통한 목재생산·공급능력 향상, 3) 공익림 숲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4)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확대, 5) 숲가꾸기 제도개선 등의 5대 추진과제를 정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능별 숲가꾸기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전국 산림에 대한 기능구분도를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를 목재생산림 중심으로 재편하여 단지 위주의 집중 산림경영을 통해 목재생산·공급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셋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에 기초한 5대 공익기능별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생태·경관 기능이 강화된 숲의 구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조림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림 성공률을 제고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의 「산림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사유림의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여 소반별·필지별 DB를 구축하고, 풀베기 사업에 설계 및 검측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산주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현장 위주의 점검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중심으로 도시·농산촌 지역의 저소득계층 3,380명을 상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장 민원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확대·운영하여 일상 생활속 산림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림청 산불방지과 사무관 이원희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89건의 산불로 77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규모면에서 미국(7만 7천 건, 653만ha), 캐나다(8천건, 193만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불이 특정시기(2~5월)에 사람의 활동(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64%가 산림이라는 점에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18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단위: 건, ha, 억원)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건 수	544	516	405	418	389	570	282	277	197	296	389
면 적	1,588	2,067	254	230	227	1,381	297	1,090	72	552	776
건당피해	2.9	4.0	0.6	0.6	0.6	2.4	1.1	3.9	0.4	1.9	2.0
피 해 액	41	75	4	4	4	39	45	291	25	250	78

자료 : 산림청, 2013년 산불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일반적으로 봄철과 가을철 기상여건은 그 해의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13년 봄철은 강수량은 예년(271mm)의 86%에 불과한 236mm였으며, 건조특보 발령일 또한 121일로 예년평균(99일)은 물론 작년(88일)에 비해서도 많

이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이 불리한 해였다. 특히 3월 9일에는 100년만의 때 이른 이상고온으로 인해 하루에 2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중 도심에서 발생한 포항산불(산림 79ha, 건물 111동, 인명피해 30명)과 야간에 발생한 울주산불(산림280ha, 주택 37동, 인명피해 3명)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3년 발생한 총 산불은 296건으로 이로 따른 산림피해는 552ha로서 예년과 대비해서 75% 수준이다.

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확대운영 등 총력 대응태세 유지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조기에 연장운영(3.20~4.20 30일→3.10~4.30 50일)하였으며 이 기간에 동안 ‘중앙 산불상황실’의 실장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하는 등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산림청,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근무(3.18~5.7, 강릉)를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산불관리센터장에 해당지방 산림청장을 임명하고 헬기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명(식목일)·한식 전후(4.5~7)에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입산허가 중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조치를 통해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산불관계관회의’, ‘산불대응관계관교육’ 등을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 핵심대책을 직접 전파하고 산불현장 진화지휘체계 확립과 진화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BH 재난안전대책 긴급점검회의(2회)’는 물론 ‘안전정책조정회의(4회)’를 통해 ‘산불방지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산불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산불의 사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발견·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및 피해면적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영방송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을 홍보하였으며, 산불위험정보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농산촌 이장, 군부대, 유관기관, 언론사 등 7만여 명에게 발송하여 산불 조심 기간에 24시간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일반국민과의 접촉이 많고 기동성이 우수한 우정사업본부 집배

원을 활용(14천명)하여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교재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성능을 보강하고 산불신고 단말기(14천대) 활성화로 감시원 위치확인 및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등 감시 인력의 현장근무와 예방활동을 내실화하였으며 일반인의 산불신고 활성화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스마트폰용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였다.

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차단 및 산불방지시설 확충

지난해 가을철부터 3월14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 제거반(1,157조 10,695명)’을 구성하여 산림인접 지역의 농산폐기물, 등산로 및 도로변 가연물질 등 산림 인접지 산불요인(1만 ha)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금지기간」(3.10~4.30)을 정하여 논·밭두렁 불 놓기 허가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 제거와 동시에 ‘산불방지 숲가꾸기’를 우선하여 실행하고, 문화재·전통사찰, 산림연접 주택지, 원전 등 주요시설과 송전선로, 도로 및 철로변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떨어진 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1,592ha)하여 산불피해 확산을 차단하였다. 또한, 사찰, 문화재, 휴양림 등 주요 시설물과 수목원, 금강소나무숲, 민통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가 필요한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소화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에 대비하였다.

라) 지상·공중 진화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광역 산불진화대(8개대)를 운용하여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간 균형과 시너지 증대를 이루었으며, 대형산불과 야간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전국권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소화시설 및 진화장비 표준화를 통해 기계화 산불진화 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지상 산불진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 대형·초대형 헬기 가동 가능비율을 90%이상 유지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위험 지역에 이동 배치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헬기의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헬기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운항정보시스템(SIS)’을 도입하여 헬기 위치와 비행정보 등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했다.

마) 헬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산림항공 안전관리체계 강화

5월 9일 안동 임하호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초대형헬기(S-64E)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헬기에 탑승 중이던 조종사 2명과 이들을 수색하기 위해 참여한 119 구급대원 1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산림항공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6.28)’을 수립하여 5개 분야 50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선진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본청 2명(5급 1, 6급 1), 및 산림항공본부 3명(5급 1, 6급 2)의 인력을 확충하여 산림항공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 향후계획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발생이 빈번해지고 대형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선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에 따라 '17년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2천명으로 확대하고 진화헬기 50대, 산불진화차 1,600대, 진화지휘차 278대, 기계화 진화장비 995대, 무인감시카메라 950대, 산악기상관측망 200개소 구축 등 현대화·첨단화된 진화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 김기환

☑ 시행배경

곤충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약 150만여 종으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생물종으로 알려졌다. 이 곤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4,000여 종이며, 산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요 산림병해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솔나방, 흰불나방 등 20여 종이다.

이러한 병해충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1.2%에 달하는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신종 병해충의 발생 및 기존 병해충의 확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와 교통의 발달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산림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예찰·방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 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2012년도보다 11% 감소한 122천ha이며, 주요 4대 병해충은 5% 감소한 81천ha이며, 매년 10% 이상 감소 목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19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병해충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ha)	290,404	225,345	167,084	137,397	122,265
소나무재선충병	5,633	3,547	5,123	5,286	11,550
참나무시들음병	2,489	1,812	3,307	2,680	3,090
솔잎혹파리	155,897	113,123	82,125	68,031	59,309
솔껍질깍지벌레	32,497	21,855	12,524	8,945	7,050
흰불나방	15,478	13,325	13,016	10,842	8,965
잣나무넓적잎벌	4,576	4,865	3,365	1,475	1,220
솔나방	5,198	1,267	1,461	1,799	1,191
밤나무해충	41,464	31,629	21,207	15,022	4,492
기타병해충	27,172	33,922	24,956	23,317	25,398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97년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2004년 경남·경북지역 및 중부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하여 2006년 말에는 전국

9) 4대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6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2005. 5월) 이후 집중방제 체계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방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 말에는 피해면적이 감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름철 이상고온 및 가뭄으로 매개충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 60개 시·군·구, 피해면적은 11,550ha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하는 방법도 매우 어려우며, 2013년도에는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경기 양평군 등 11개 시·군·구에서 신규 또는 재발생하는 등 전년도보다 감염목 발생 본수가 대폭 늘어났다.

나) 솔잎혹파리 방제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전국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는 1988년에 피해면적 32만 7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년 후인 2004년도에는 7만 3천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19만 6천ha에 발생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예찰·방제정책 추진으로 2013년도에는 5만 9천ha로 전년도보다 13%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우량한 곰솔(해송)림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써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최초 발생하였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도에는 발생량이 4만 5천ha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도에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대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원면 모항리에서 신규로 발생하여 확산 우려가 있었으나 항공방제, 나무주사, 임업적방제 등의 노력으로 3만2천ha로 약 21%가 감소하였다. 2013년도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제방법으로 고도화하고 적기 예찰과 방제를 통하여 2006년 대비 8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도 경기도 성남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계속 확산하여 2008년에는 29만 8천 본이 발생하였으나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끈끈이롤트랩, 유인목 설치, 소구역 선택베기 등 복합방제를 실행하여 2010년에는 18만 1천 본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잦은 강우 등으로 매개충 밀도가 증가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33만 1천 본까지 피해가 확산하였다. 이에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대처하고,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방제를 추진하였다. 2013년말 현재 30만 9천 본의 피해목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제 중이다.

마)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 강화

2011년 산림병해충의 범위가 기존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2년부터 생활권 수목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052개소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나무병원 10개소, 대학의 수목진단센터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나무병원 등에서는 수목진료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계획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과 활발한 국제교류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빈발하고, 기존의 일반 병해충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다른 지역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병해충별 생활사를 적용한 맞춤형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고, 임업적 방제를 통한 피해지의 환경을 병해충 발생 및 증식에 불리하게 조성함은 물론 피해 확산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제하는 사후방제에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다. 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림에 대한 재해저감 등 임업적 방제 확대,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등 나무주사 실행 전 강도의 슈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숲으로 만드는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생활권에서의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추진을 위해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를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친환경 방제방법 개발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서기관 조화택

☑ 시행배경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지질 등의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은 화강암·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응집력이 낮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강우강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평균 2~3개)과 함께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대형화·빈발화되고 있으나 불규칙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산사태 발생 변동 추이를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980년대 231ha, 1990년대 349ha, 2000년대 713ha로서 약 3.1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00년대 들어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 현격히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10년 단위 산사태 피해 현황

(단위: ha)

구 분	'80년대	'90년대	'00년대	'11년	'12년	'13년
피해면적(ha)	231	349	713	824	491	312
복구비(억원)	28	150	867	1,477	971	532
인 명(사망)	37	23	8	43	1	3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시행내용 및 성과

산사태는 천재지변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후 복구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선제적인 산사태의 예방·대응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미흡,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미흡 등 전반적으로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후 복구위주의 정책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 산사태방지 관련 법적근거 마련

2012.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사태예방 장·단기대책의 수립·시행,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나)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여름철산림재해대책기간(5.15~10.15) 동안에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하여 전국단위의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을 총괄지휘하고 산사태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산사태관련 대국민 홍보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사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동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별 기상상황을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주의보·경보 등을 발령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산사태위험등급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산사태 예방대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라)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규정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설정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관계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현장 점검·정비 및 지역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

마) 사방사업의 자연친화적 조성

사방사업의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 등으로 사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방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산림재해 안전망 구축)로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 4-21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국고)	101,040	173,883	183,047	179,008	233,718	272,178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방담과 같은 사방 구조물 설치 시 사용모재(母材)를 다양화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이동통로 시공을 확대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방시설의 신공법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및 개발된 공법에 대한 현지적용을 확대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사방시설은 도시생활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방지를 위하여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 중심의 기능개선 요구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현장 상황관리 능력 및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시간 예측력을 강화하는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기상청의 MAPLE을 활용한 산사태 예측정보 분석 고도화, 땅밀림·도로변 산사태 DB관리 기능 개발, 산사태관련 주제도의 3차원 지도 서비스 개발 등의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나)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 강화

2013년말 현재 실태 조사된 전국의 산사태취약지역은 14,201개소로서 이중 5,150개소가 지정되었고, 현재에도 지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활하게 지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50개단, 200명)을 활용하여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현장 점검·정비 및 주민연락처 확보 등을 통해 유사시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도 전문가를 활용하여 1만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전 개소에 대하여 위험요인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다) 선제적 사방사업을 통한 산사태 재해저감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899개소), 계류보전(584km) 등 사방사업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 집중 시행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상기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 완성도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 현장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방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설계·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방시설의 재해저감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 현장 대응 인력 확충 및 복구 역량 강화

산사태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산사태 발생패턴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예방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발생시 원인조사·진단 및 복구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산사태 발생시 단순한 응급복구 차원이 아닌 한차원 더 높은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복구대책을 통하여 견실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 사방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사방시설의 위치(좌표값), 종류 및 사후관리 등 이력사항에 대한 DB관리를 통해 생활권 지역 및 노후화 된 시설 등을 집중관리하고, 사방시설이 신설되는 지역과 보수하여야 할 지역 등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방시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기준 등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생활권 및 노후화된 사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함과 아울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등 사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산사태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바) 선진 외국과의 기술 및 정보 교류 확대

세계의 산사태방지 선진국은 국토면적 중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인구가 과밀한 일본·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산사태방지 기술과 정보에 대한 국가 간의 정보공유, 전문 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는 글로벌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김영혁

☑ 시행계획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자생식물자원의 보존과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생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식물이 곧 자원이며, 식물자원의 지속할 수 있는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수목원 조성 및 육성

「세계식물보전지구전략(CBD, '10)」에서는 희귀 식물종의 75%이상을 ‘현지의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하여 기후대·식생권역별로 국가 수목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수목원 확충의 궁극적인 목표는 BT·IT·ET 등 기술발달에 따른 미래 고부가 유용 식물자원의 보존·이용·촉진에 있고, 국가전략 수립 시, 국내·외 유용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패턴전환에 따른 산림생태 교육·탐방·체험의 새로운 휴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04년부터 기후·식생 등을 고려하여 4대 권역별 국가수목원 확대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14년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09~'15)」과 「국립중앙수목원('12~'20)」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고, 「국립새만금수목원('15~'24)」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올림픽수목원('16~'20)」은 '21년 개원을 목표로 기본구상 연구 중이며, 이들 수목원은 「국립DMZ자생식물원」이 올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16년, 「국립중앙수목원」은 '21년,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5년에 각각 개원할 예정이다.

표 4-22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명 칭	구 분	기능 및 역할
1. 국립광릉수목원	현 국립수목원을 개편 (경기 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생물관련 연구·교육중심 수목원 네트워크 관리·운영 광릉숲의 역사·생태적 보존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6년 개원예정)	신설(경북 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방계 고산식물의 장기·영구보전 식물신가지 창출 및 seed vault 조성
3. 국립중앙수목원 ('21년 개원예정)	신설(충남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형 국립수목원 한국정원의 연구 및 교육 온대수종의 장기보전 연구
4. 국립DMZ자생식물원 ('14년 개원)	신설(강원 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생태계복원(DMZ식물) 연구 산림 소득화 연구
5. 국립새만금수목원 ('15년부터 착수 예정)	신설(전북 새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대식물 및 해안식물 보전 연구 간척지 녹화 및 방염·방풍 수종 연구 인공해안림 벨트 조성 연구

나)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사료 전시실과 식물·곤충·화석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산림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13년말 현재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10개 시·도에 12개의 산림박물관이 개관되어 수목원 관람·전시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4-23 산림박물관개관 현황

명칭	조성연도	관리기관	규모(m ²)	주소
국립산림박물관	1987	산림청	4,628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51-7
충남산림박물관	1997	충남도	3,173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산21-1
강원산림박물관	2002	강원도	4,306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28-5
전북산림박물관	2002	전북도	5,584	전북 순창군 북흥면 서마리 252
경북산림박물관	2003	경북도	5,284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
경남산림박물관	2003	경남도	5,566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440
대구산림박물관	2003	대구시	1,65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84
충북산림박물관	2003	충북도	1,660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3
경기산림박물관	2004	경기도	1,654	경기 오산시 수청동 332-4
전남산림박물관	2005	전남도	1,600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
충남아산산림박물관	2012	충남도	6,020	충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5
경기여주산림박물관	2012	경기도	1,525	경기 여주군 매룡리 282
전남영광산림박물관	2014	전남도	5,767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401-1

다) 생태숲 조성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함에 따라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 위주의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리 방지토록 하는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태숲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현지 내에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말 현재 39시·군 지역에 총 44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중 25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나머지 19개소는 조성 과정에 있거나 개원을 준비 중이다.

표 4-24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단위: 개소)

년 도 별	합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태숲 조성	44	32	5	4	3	-	-

☑ 향후계획

가) 수목원 조성 및 육성

국내 수목원은 식물종 보유 수량 및 특성화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기조성된 수목원을 특성화, 내실화한 보완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목원이 위치한 권역별 특성, 중점 식물 수집종 및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조성된 각 수목원의 특성화,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온대중부권역의 향토식물자원의 보존·증식·연구 및 도심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을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조성된 산림박물관을 특성화, 내실화할 계획이다.

다)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

중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를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도재영

☑ 시행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약 1/8수준이며,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강수량의 65%가 최상류 수원인 산림지역에 내리지만 산림내 저장량은 14%에 불과하여 홍수, 가뭄,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수자원 저장량 확대를 위한 녹색댐 기능제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에 따라 용수개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립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립과 나무 아래 심기,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립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심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매년 추진하였다.

녹색댐 기능 제고를 위한 수원함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임지여건에 따라 침엽수 인공림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복층림, 혼효림으로 유도하였고 불량한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과 개량사업을 실행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천연림으로 유도하여 수원함양기능과 산사태 방지 기능을 높였다.

또한 산림청은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38개 댐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 등을 통해 녹색댐으로 조성하는 「녹색댐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29개댐 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녹색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표 4-25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숲가꾸기 대상댐	합계 (개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사업 착수	비고
탐진댐, 대곡댐	2	'02	'02	'03	시범
안동댐, 임하댐, 소양강댐, 횡성댐, 달방댐, 광동댐, 부안댐, 보령댐	8	'05	'06	'06	-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 대청댐, 용담댐, 섬진강댐,	8	'06 '06~'07	'07	'07	-
밀양댐, 충주댐, 연초댐, 구천댐, 수어댐	5	'07	'08	'08	-
주암댐, 주암조절지댐, 합천댐, 남강댐, 운문댐,	5	'08	'09	'09	-
충주댐	1	'09~'11	'10~'12	'10~'12	
기타 신규댐(12개)	11	'13이후	'13이후	'13이후	-

※ '13년 현재 전국 29개댐의 숲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향후계획**

2014년에는 댐유역 숲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충주댐 충북·경북유역 등 42천ha의 숲을 가꾸어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유역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덩굴류제거와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4-10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① 홍수조절기능		○ 나지 대비 홍수기에 28.4톤/일·ha 더 머금음
② 갈수완화기능		○ 불량림 대비 갈수기에 2.5톤/일·ha 더 흘려보냄
③ 수질정화기능		○ 질소 14.3ppm의 물을 1.7ppm으로 정화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사무관 심양수

☑ **시행배경**

국유림을 대부(貸付)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이를 법률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라고 한다.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기는 국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의 대부행위와는 구분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대부·사용허가 실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8,525건, 5만 117ha로, 이는 2012년 대비 건수 447건, 면적 2,545ha가 감소한 것이다. 전년도 대비 공용·공공용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은 증가하였으나 비임야 일반재산의 총괄청 인계 및 조림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 지역 내 입목매수에 따른 계약해제 등으로 전체 건수 및 면적은 감소하였다.

(단위 : 건, ha)

구분	합계		대부		사용허가		분수림(조림대부지 포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1년	8,894	54,715	3,521	6,374	5,083	24,295	290	24,046
'12년	8,972	52,662	3,344	6,246	5,374	24,437	254	21,979
'13년	8,525	50,117	2,662	5,835	5,634	23,751	229	20,531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나)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중단, 다른 용도 사용 등으로 대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는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333건 중 87%에 해당하는 2,026건이 '양호', 123건(5%)은 '경고', 184건(8%)은 '불량' 판정을 한 후 '경고'와 '불량' 판정을 받은 대부지 등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대부지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39건)한 바 있다.

(단위 : 건, ha)

구분	합계		양호		경고		불량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0년	2,717	24,495	2,481	21,059	105	684	131	2,752	취소 : 11
'11년	2,894	29,216	2,543	14,823	214	13,811	137	582	취소 : 8
'12년	2,679	25,681	2,385	10,839	183	14,076	111	766	취소 : 5
'13년	2,333	21,708	2,026	8,661	123	964	184	12,083	취소 : 39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 향후계획

산지전용을 수반하여 산림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국유림의 개발 편입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지양하고 공사유림과 교환하여 대체 국유림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인이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유림 대부지실태조사시 관련법령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로 미납, 다른 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지적되었을 경우 실태조사 점수와 상관없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취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대부지 육성을 위해 기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사무관 김위동

☑ 시행배경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701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또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어 2005년 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11,650ha를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26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구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		%		%
면적(ha)	275,077	100	179,110	65	95,967	35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요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자연생태계 및 인문사회 자원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 조사자료를 토대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백두대간종합정보시스템 수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275천ha로서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701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백두대간 자원의 변화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물리적 환경, 동·식물상, 식생 등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 환경,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이다.

표 4-27 백두대간 보호지역 2단계 자원실태조사 현황

년도	1년차('11)	2년차('12)	3년차('13)	4년차('14)	5년차('15)
권역별	설악산권역 (향료봉~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보은~무주)	지리산권역 (거창~지리산)
조사거리	100km	157km	172km	154km	10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자원실태조사 1단계('06~'10)실태조사가 2010년 완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자원실태조사 2단계로 1단계 조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3년차로 속리산 권역(봉화~문경) 172km구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남한지역 정맥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확대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의 기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과 생태적·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남한지역 정맥의 실태조사는 정맥의 보전·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가지 친 큰 산줄기로서 백두대간과의 연계 생태축이고 백두대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녹색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맥에 대한 명확한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산림훼손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국토의 주요 생태축으로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해 6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생태적,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토의 중요 생태축이자 중요한 산줄기와 물줄기를 차지하는 중요 요충지인 한남정맥과 금남정맥에 대한 정밀한 자원실태조사 분석과 공간적 범위의 규명을 통해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현명한 관리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 문수산, 전라북도 진안 조약봉에서 충청남도 부여 부소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311km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표 4-28 남한지역 9개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년도	'09	'10	'11	'12	'13	'14
권역별	낙동정맥 매봉산(태백)~ 봉화산(부산)	호남정맥 주화산(진안)~ 장계산(광양) 금남호남정맥 영취산(장수)~ 주화산(진안)	금북정맥 칠장산(금광)~ 지령산(안흥) 한남금북정맥 속리산(보은)~ 칠장산(금광)	낙남정맥 옥산(하동)~ 봉화산(김해)	한남정맥 칠장산(안성)~ 문수산(김포) 금남정맥 조약봉(진안)~ 부소산(부여)	한북정맥 장명산(과주)~ 오두산(화천)
조사거리	418.4km	514.2km	413.82km	193km	311km	165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추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인문지리·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시설로 구성되며, 국민 홍보·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6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시작하여 충청북도 괴산군에 2009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개관을 하였고, 2011년 경상북도 상주시 폐교부지, 2013년에는 강원도 양양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개관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전라북도 남원에 생태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경상남도 거창, 전라남도 구례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라)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사업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7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

다.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은 자연경관 훼손과 유기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 살포로 백두대간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 및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고랭지밭의 생태적 관리방안”으로 백두대간 경작지 중 매도희망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의 사유토지 등을 매수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지형, 식생, 인공구조물 등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2006년 3ha, 2007년 3ha, 2008년 10ha, 2009년 5ha, 2010년 10ha, 2011년 11ha, 2012년 15ha, 2013년 4ha 등 총 61ha에 대하여 복원 완료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한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북 장수 육십령, 경북 문경 벌재, 충북 괴산 이화령 등 3개소에 대해 복원하였다.

마)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추진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2013년말 현재 31,526ha 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결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안의 사유토지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고, 현지토지소유자의 매도불응과 토지소유자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토지나 현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하여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29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연도별	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2,412	15,538	103,721	311	3,124	16,899	2,101	12,414	86,822
2005	255	2,410	10,713	55	361	1,350	200	2,049	9,363
2006	450	3,354	14,005	90	523	2,278	360	2,831	11,727
2007	276	1,292	7,742	31	164	1,439	245	1,128	6,303
2008	159	1,296	6,861	20	106	666	139	1,190	6,195
2009	191	1,384	9,993	19	468	2,429	172	916	7,564
2010	526	1,662	27,425	38	703	3,679	488	959	23,746
2011	158	1,342	8,399	25	519	3,353	133	823	5,046
2012	185	1,220	7,711	18	168	949	167	1,052	6,762
2013	212	1,578	10,872	15	112	756	197	1,466	10,116

주 : 보호지역 밖은 보호지역 연결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사유토지의 적극적인 매수를 위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2008.9.19)하였다. 또한 토지위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3.5)하여 2008년 기준 매수실적(1,296ha) 대비 2009년부터~2013까지 매년 평균 1,437ha를 매수하여 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수한 사유토지 중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은 2008년, 2010년 폐시설물 철거 및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복원사업을 통하여 백두대간 생태계의 조기회복과 생물종다양성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

백두대간의 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 정책추진에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백두대간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백두대간 주민을 백두대간을 지키고 백두대간과 함께 살아가는 백두대간보호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백두대간 주민이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림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해 온 결과 주민의 임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민 만족도가 82.7점, 2010년도에는 88.6점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6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기준 지원사업유형별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은 안정을 이루며, 점차적으로 임산물 가공분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표 4-30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별	합계	'05~'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69,623	29,370	9,600	8,631	8,620	6,616	6,786
저온저장고	18,078	7,005	3,359	2,953	2,200	1,306	1,255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8,007	8,773	844	1,536	969	1,553	4,332
생산기반 조성(가공)	9,886	5,004	1,105	723	2,057	322	675
산채재배시설	8,990	3,447	2,482	1,107	969	728	257
생산소득장비(관수·관정)등	5,262	560	524	1,272	2,012	871	23
표고재배시설	3,977	2,576	403	328	240	346	84
임산물직판장·집하장 등	5,423	2,005	883	712	173	1,490	160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42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6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벌채를 유보한 소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표 4-31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24	53	63	49	63	60	68	68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향후계획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는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분야와 대상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산림 자원의 변화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조사된 자료의 DB화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두대간자원실태조사 2단계 '14년 조사대상지는 덕유산 권역(보은~무주) 154km구간을 조사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한지역 정맥조사는 백두대간 상 남한지역 정맥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 실태, 생태적 가치 및 훼손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서 남한지역 8개 정맥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09년 낙동정맥(418.4km), 2010년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514.2km), 2011년 금북정맥, 한남금북정맥(413.82km), 2012년 낙남정맥(193km), 2013년 한남정맥, 금남정맥(311km)에 이어, 2014년에는 한북정맥(165km)에 대한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 이후에는 조사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태계변화상 등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은 백두대간지역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의 홍보 및 체험을 통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청소년 생태체험 교육 등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에 2015년까지 모두 6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백두대간 훼손지에 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2010년도 공간정보 구축 결과, 전체 3,197ha(302개소) 중 농경지가 829ha(162개소)로 30%를 차지했으며 대규모 개발단지 25%(818ha, 8개소), 도로 14%(455ha, 6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태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폐군사시설, 폐광산, 고랭지 경작지 등에 대하여 주변식생 및 경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복원·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이 통과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중 현재 단절되어 복원을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반도 남북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연결 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역사성 회복 및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사유토지 매수는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당시 지역특성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접된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 내외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 60,000ha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나 사유림 매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 될 수 있으며,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별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사유림)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산림소유자의 불만해소와 백두대간의 생태적·자연경관 등의 보호로 자연환경·경관의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격차해소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심기호

☑ 시행배경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립·숲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책·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국민보건휴양과 산악스포츠를 위한 장소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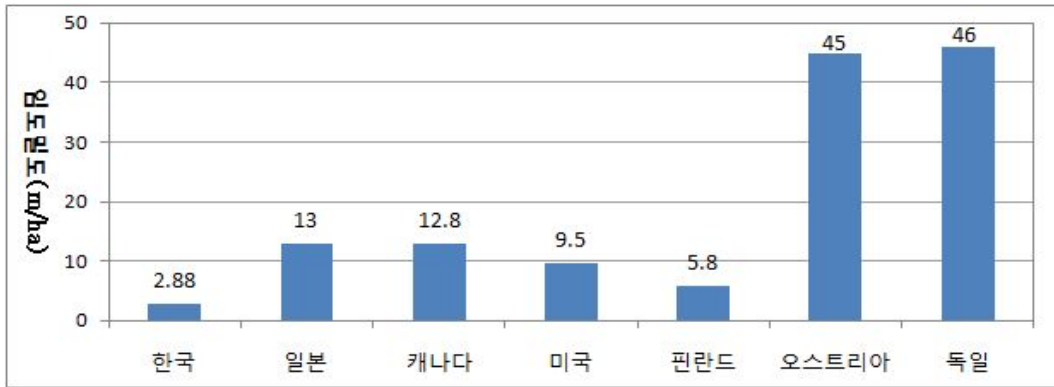
☑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임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8,384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8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산림사업 물량의 확대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 목재생산량 증가로 임도 시설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1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32 임도시설 기본계획(요약)

구분	계획	'10년까지			누 계
		'10년까지	2011~2015	2016~2020	
사업량 (km)	계	16,572	5,779	9,190	31,541
	국유임도	4,842	1,478	2,130	8,450
	민유임도	11,730	4,301	7,060	23,091
사업비 (억원)	계	10,608	8,672	13,934	33,214
	국유임도	2,444	2,006	3,082	7,532
	민유임도	8,164	6,666	10,852	26,132
ha당밀도(m)		2.60	3.50	5.00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향후계획

임도망 구축은 제3차 임도 설치계획에 따른 간선임도와 목재생산 등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에 시설된 임도 중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노선은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자연적인 임도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풍수해에 의한 임도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를 이용한 휴양·여가·레포츠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도를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임도설치 계획은 <표 4-32>와 같다.

표 4-33 2014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획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808 (316)	182,519	144,206	25,542	12,771	()내는 구조개량
국 유 임 도	245 (116)	54,810	54,810			간선임도 130km 작업임도 115km
민유임도(보조)	563 (200)	127,709	89,396	25,542	12,771	간선임도 336km 작업임도 227km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간선임도는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 경영상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유림간 및 지자체간의 연계성 등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임도망을 구축하고, 작업임도는 일정한 유역을 경계로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최소 규격의 임도를 개설하여 저비용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도모하여 산림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공조림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 낮은 단비(73백만원/km)로 설치한 임도의 경우 일부는 재해발생위험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같은 기존 임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구조개량을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로 만드는 등 유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표 4-34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km)

구 분	임도시설 현황	총대상 물량	구조개량사업 실적						2014 이후
			소 계	2009까지	2010	2011	2012	2013	
계	18,384	13,478	11,527	9,060	540	487	815	625	1,951
국유임도	5,589	3,260	2,207	1,757	132	105	88	125	1,053
민유임도	12,795	10,218	9,320	7,303	408	382	727	500	898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영순

☑ 시행배경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 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사업의 경험부족 및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8개 시·군)을 통한 기계화 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기계수(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28,671대로서 지방산림청이 4,041대(14%), 지방자치단체가 17,516대(61%), 산림조합이 7,114대(25%)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임업기계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계화 산물수집의 사유림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도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트랙터집재기 등 산물수집 기계장비의 세트화 보급 및 기계화 영림단을 1개단씩 양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계화 산물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

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4-35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장비 구분	계(대)	지방청(대)	시·도(대)	산림조합(대)
계	28,671	4,041	17,516	7,114
임 도	390	110	57	223
임목생산	11,258	1,522	7,307	2,429
조림·육림	5,880	844	3,524	1,512
목재가공	1,130	124	780	226
산림보호	6,875	848	4,397	1,630
양 묘	1,003	194	536	273
행 정	2,135	399	915	821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36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설치년도	기 관 명	소재지	보유장비
계	9개소		216대
소계	7개소		188대
2001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타워야더외 8종 13대
2002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타워야더외 7종 11대
2003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타워야더외 9종 11대
2003	순천시 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연향동	타워야더외 8종 32대
2004	평창군 산림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HAM200외 6종 18대
2005	청주청원산림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북부집제기의 7종 29대
2006	산청군 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타워야더외 11종 74대
소계	2개소		28대
2009	남부지방산림청		타워야더외 8종 20대
2010	북부지방산림청		타워야더외 7종 8대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37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 백만원)

센터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계	45.2	748	48.3	637	51.2	645	54.0	494	57.2	418
기능인	30.6	154	42.4	116	49.7	46	68.8	23	87.9	19
기술	43.9	86	45.5	54	54.9	83	68.0	51	101.1	49
기계	75.9	122	65.7	113	57.3	99	75.6	106	109.0	132
순천	62.9	150	60.3	119	50.7	111	41.9	61	16.4	29
평창	50.9	96	39.4	66	39.8	58	28.7	47	43.5	64
청주청원	18.6	51	30.8	84	26.8	74	20.9	62	3.2	24
산청	55.3	89	45.2	85	70.4	174	59.7	144	29.2	101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 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07.10월부터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산주가 임업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지, 임업신문 등의 전문지 및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 ① 임업용 동력천공기, ② 임업용 약제주입기, ③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포함한다), ④ 임업용 동력 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⑤ 임업용원치, ⑥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⑦ 트랙터부착형 집계기, ⑧ 굴삭기부착형 집계기, ⑨ 타워야더, ⑩ 포워더, ⑪ 목재파쇄기, ⑫ 톱밥제조기, ⑬ 동력임내차, ⑭ 밤수집기, ⑮ 자동지타기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또한, 2003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표 4-39 임업용 먼세석유류 공급현황

(단위 : kl)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계	3,522	3,522	4,269	4,122	4923	
휘발유	3,240	3,240	3,837	3,800	4606	
경 유	282	282	432	322	317	
윤활유	-	-	-	-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향후계획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능인영립단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팀 경영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립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기계수(Operator)를 지속해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노동부담과 생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업기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임업기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능인영립단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임목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숲을 잘 가꾸고 자연친화적인 임목생산을 위해서 임업기계화의 가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펴나가고자 한다.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영순

☑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Ⅱ~Ⅲ 영급에 속해 있다. 또한, I 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59%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립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립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1,146단 9,441명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표 4-40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립단 조직 현황

구 분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1,022	8,859	1,090	9,005	1,146	9,441
국유림 영립단	141	1,619	146	1,606	147	1,652
산림조합 영립단	392	4,306	357	3,877	367	3,997
산림사업법인 영립단	489	2,934	587	3,522	632	3,79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 임업노동력 확보 및 후생복지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과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계속 증가하던 임업분야 재해율이 최초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으로서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능인영림단에게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적정 배분토록 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임업기능인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기능인교육에 참여하는 영림단원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영림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 사업 등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계획

산림작업은 아직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에는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산촌 인력 감소가 심화할 전망으로, 전문노동인력의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

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형규

☑ 시행배경

임업의 장기성(40~60년) 및 저수익성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6조 7,508억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2조 9,841억원으로서 임산물 총 생산액의 44%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표 4-4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기임산물 생산액	18,328	19,267	19,849	20,090	21,464	26,576	28,489	30,336	29,841

☑ 시행내용 및 성과

가)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업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을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경수·분재토양개량, 산양삼이력제지원, 친환경 밤생

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생산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생산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생산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42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산양삼	수액
주생산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35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지를 산림소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6개소 4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4-4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산림복합경영	404	28,853	248	13,661	40	872	38	820	29	4,500	24	4,500	25	4,500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16개 단지에

대하여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대책 추진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2012, 44품목)하였으며, 2014년 까지 고려영경귀, 병풍쌈, 만삼 등 57품목에 대해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0.2.4)하여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였고,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 생산과정의 확인,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11.7.25) 청정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산양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물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하여, 양양송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9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또한,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 2013년 12품목 7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향후계획

단기임산물 소득원화 정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한-중 FTA 등에 대비 생산시설의 현대화·집단지화·단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 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김용진

☑ 국산재 이용 촉진 시행배경

그 동안 지속적인 국산재 공급 확대 노력으로 국내 목재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3년 목재 자급률은 17.4%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 목재 소요량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는 원목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원유 및 운임비 상승, 자국 원자재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원목보다 목재 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기령에 도달한 주벌 임지의 부족, 대부분의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시기적 집중화 문제, 목재 신수요 증대(목재펠릿, 에너지용, 한옥 등)로 목재 산업체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목재는 대부분 간벌 소경재로서 섬유판, 펄프·칩 등 산업용재, 표고자목, 톱밥 등 농·임업용 자재, 루바·물당재 등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목재보다 떨어짐에 따라, 국산 목재 고부가가치화 및 임도 시설 확충, 임업기계화 등 산림 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산 목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목재산업의 구조는 제재목 등의 고급재의 용도는 건축 경기 등의 위축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급재 용도는 바이오에너지용 등의 수요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목재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목 부산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비하고 웰빙, 국민건강 증진, 임분 구조 개선과 목재산업 육성, 목재문화 확산, 다변화하는 용도별 목재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산재 이용 촉진 내용 및 성과

2013년 말 현재 수입 목재를 포함한 총목재 수급량은 28,151천m³으로서, 이 중 국내재는 2012년 대비 8.7% 증가한 4,897천m³를 공급하여 국산재 자급률은 17.4%로 전년보다 1.2%p 증가하였다.

표 4-44 2013년 목재 수급 실적

(단위 : 천m³)

수요	공급	합 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률(%)		
		합계	원목		제품	소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계		28,151	8,654	19,497	4,897	23,254	3,757	19,497	56.6	17.4
제 재 용		5,736	3,980	1,756	692	5,044	3,288	1,756	17.4	12.1
합·단판용		3,042	442	2,600	29	3,013	413	2,600	6.6	1.0
펠프·칩용		10,926	980	9,946	980	9,946	-	9,946	100.0	9.0
보 드 용		3,066	1,531	1,535	1,475	1,591	56	1,535	96.3	48.1
바이오매스용		1,865	702	1,163	702	1,163	-	1,163	100.0	37.6
기 타		3,516	1,019	2,497	1,019	2,497	-	2,497	100.0	29.0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3년도 목재수급실적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사유림에서는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집하장 17개소를 운영해왔으며,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설치된 목재유통센터에서는 낙엽송과 소나무를 주원료로 원주재, 내장재, 판재 및 각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직거래하여 고부가가치 목조주택, 건조·방부목 등 목제품 개발·보급, 목재펠릿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유림에서는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청별

임지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구역’, ‘표고자목용 목재생산구역’, ‘합판용 목재생산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목재 체험교실 운영 및 목재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의 친환경성·건강성을 홍보하여 목재이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간벌재 및 국산재의 용도개발을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 시범사업으로 최근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가공시설 보완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하였다.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 40억원, 보드류시설 현대화 지원 30억원, 유통센터 원료 구입 30억원,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84억원 등 총 18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목재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목생산업자도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을 갖춰 해당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벌채사업의 현황 파악 및 벌채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차적으로 2013년 11월까지 1,061개 업체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였다.

국산재 이용 촉진 향후계획

앞으로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국내 목재 산업 육성 및 목재 문화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4년은 2013년보다 5.7% 증가한 518만^m의 국산재를 공급하여 자급률을 1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산업용재 적기 공급을 위해 용도별 목재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에는 국내 시장 수요에 맞는 목재 공급을 위해 벌기령 기준을 완화하고, 불량림 수종갱신 활성화를 위해 불량림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로 수목의 가치 증진을 위해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활용할 수 있도록 굴취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주로 국산재를 이용하는 분야(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에 대하여 2013년보다 30억원 증가된 214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관련 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목재의 우수성과 목재의 활용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재이용캠페인, 목조건축 세미나, 목재체험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마.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김용진

☑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행 배경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임목 별채 감소, 자국 원재료 보호 등으로 인한 수입 여건이 악화하여 원목 및 제재 부산물이 감소하였다. 임목 부산물, 사업장 또는 건설 폐목재는 파티클 보드의 원료, 열병합발전소 등의 목질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며 양질의 폐목재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여 목질 자원의 순환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폐목재 감소와 수입 목재 감소 등에 따른 제재 부산물 감소로 인한 보드업계와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간의 원자재 경합으로 산업용 원료의 부족난이 심각하여 목재 재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 목재 재활용 촉진 내용 및 성과

섬유관, 파티클 보드 원료인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을 40억원,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 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자금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목재의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였다. 목재 이용 연장을 위한 보존처리 목재 품질 인증 및 친환경 보존처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목재 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기존 산림작업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및 산지전용에서 발생하는 원목을 폐기물로 분류하였던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연료 또는 목재산업 원료의 용도로 이용되도록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목재 재활용 촉진 향후 계획

2014년에는 폐목재 및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목·목재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4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저급재의 원료 경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벌채지에 버려지던 임목 부산물(가지, 후동목, 지엽)등도 자원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법규 정비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사무관 김종렬

☑ 시행배경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생산기반의 미비, 생활환경의 열악, 인구의 과소화 등 도시 및 농촌보다 낙후지역으로 전락함에 따라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된 산촌생태마을 조성(구 산촌종합개발사업)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 사전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까지 총 2,943억원을 투자(지방비, 융자포함)하여 204개 마을을 조성 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 소득수준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에 각종 운영·관리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2010년도에 116명, 2011년도에 116명, 2012년도에 92명, 2013년도에 88명을 배치·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되어 예산편성권이 이관되었다.

표 4-4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전설계	295	93	15	10	20	15	18	33	36	30	25
마을조성	240	47	12	34	15	10	20	15	18	33	36
투자비	339,574	85,059	24,327	26,852	16,225	20,364	25,683	29,391	31,392	35,059	45,222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 향후계획

앞으로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산촌역량강화사업과 더불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하는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촌역량강화사업을 도입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1년간 장기적인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각 도단위의 마을 리더 협의회와 농한기 주민현장학교를 운영토록 유도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향후 베이비부머세대의 귀산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산촌미리 살아보기 캠프’를 실시하여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촌을 알리고 정착을 유도하여 산촌에 인구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사무관 전덕하

☑ 시행배경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생태관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자연휴양림은 2013년에 4개소(국유1, 공유3)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56개소를 운영하여 이용자 수가 12,78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도 10개소(국유1, 공유9)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표 4-46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현황(2012년말)

(단위 : 개소)

구 분	지정 현황		조성 현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76	176,106	156	130,040
국유 자연휴양림	93	145,528	40	107,258
공유 자연휴양림	112	22,677	98	21,194
사유 자연휴양림	71	7,901	18	1,588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표 4-4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계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25,938	65,105	7,627	8,691	9,437	10,684	11,614	12,780
국유 자연휴양림	38,493	18,958	2,361	2,759	3,258	3,661	3,736	3,760
공유 자연휴양림	76,215	39,884	4,749	5,191	5,356	6,281	7,077	7,677
개인 자연휴양림	11,229	6,263	517	741	823	741	801	1,343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에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79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3년에도 5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14년도 조성계획, 2017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4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3까지 운영	2014 조성	2013이후
계	413	335	15	63
자연휴양림	180	156	10	14
산림욕장	233	179	5	49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 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앙단위 10년 계획인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첫째 산림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용체계를 확립, 둘째 자연휴양림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농·산촌 등과 연계 강화, 셋째 다양한 투자주체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넷째 공·사유 산림휴양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 다섯째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품격 있는 맞춤형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지정 타당성 평가제도,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ISO 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휴양포털시스템 ‘숲에 On’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휴양정보, 마일리지 제공, 웹회원 마이페이지 제공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더욱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계획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휴양수요에 맞춰 2014년에는 자연휴양림 10개소(국유1, 공유 9), 산림욕장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으로 산림휴양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면서, 자연휴양림내 경관상으로 표현되는 Hardware와 숲체험프로그램 등 Software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통하여 산림휴양정책이 산림청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으로서 국민의 포지셔닝을 제고시키고, 한국형 산림휴양시설의 모델을 구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문화 진흥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전덕하

☑ 시행배경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는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유치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산림체험·교육을 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12.7.26)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산림교육종합계획('13~'17)」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법의 시행, 종합계획 수립으로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의 설치·지정 및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유아들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위하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08년부터 운영하였다. '12년 유아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약 42만명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산림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숲체험·교육의 과학적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5회 산림교육 국제세미나를 개최(6.26)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다.



<국내 숲유치원 NHK 소개>

<숲유치원 활동 소개>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주말산림학교’, ‘방과후 숲교실’, ‘1교1숲 운동’ 등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2011년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을 위한 대책으로 범국민적인 ‘숲으로 가자!’ 운동을 추진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수목원, 휴양림 등 산림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산의 날’ 행사는 제12회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 밖에 국민들이 직접 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산림 박람회, 숲 올림피아드, 우드락 페스티벌, 단풍 문화축제 등을 통해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www.foreston.go.kr)을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 ‘숲에On’은 국민들이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생태마을 및 수목장림, 유·무형 산림문화자산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즐기는 숲해설서비스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어린이 숲에On」, 외국인을 위

한 숲에On 영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보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자수가 3년만에 평균 3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 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산림 내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계획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 국가산림교육센터 등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당일·숙박형 등 유형별, 장소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산림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사무관 정병길, 김영기

☑ 시행배경

여가시간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보 여행을 비롯한 길 걷기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원 등 도시생활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산로에서 이러한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고,

제주도 올레길이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길게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을 연결하면서 걷는 길에 대한 문화와 수요가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휴양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라마다 중장거리 도보길을 조성해 오고 있다. 산업혁명과 도시화 등의 변화를 먼저 겪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 트레일(Trail)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걷기 열풍에 힘입어 자연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연보도(自然歩道)를 조성하였으며, 그 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트레일을 조성하고 있다.

트레일은 산책, 도보여행 등 걷는 활동을 주로 하는 여가를 위한 기반시설로, 선진 외국의 유명 트레일은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막대한 관광수입도 올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한국갤럽, 2010)’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약 40.6%인 1,500만 명이 한 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증진할 수 있는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등산은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산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산행습관, 등산관련 정보부재 및 안전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등산로의 과다이용으로 샛길발생 및 등산로 주변의 훼손증가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도 저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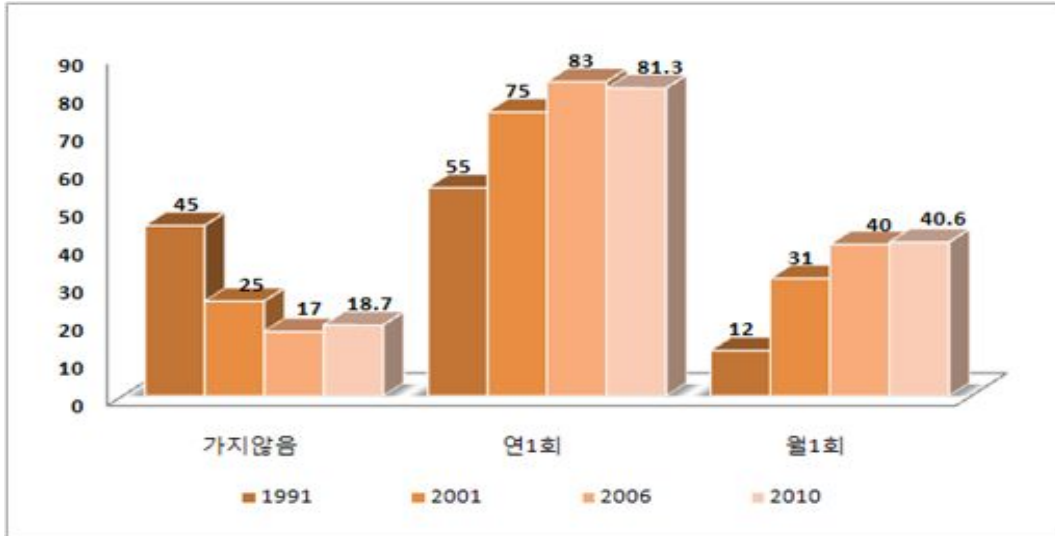
산림청에서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행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4,440개의 산에 총 17,598km의 등산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등산로 가운데 훼손이 심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이 전체 등산로의 약 3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에서는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산행수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

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 등산학교 운영, 등산로 DB구축을 통한 등산로 정보 서비스 등 등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4-12 등산인구 증가추이

(단위 : %)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한국갤럽, 1991·2001·2006·2010)

표 4-49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조 건수	7,096	7,718	7,825	8,602	10,882
구조 인원	7,598	7,505	8,049	7,655	9,399

자료 : 소방방재청

☑ 시행내용 및 성과

숲길정책은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산행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걷기 쉬운 다양한 길을 조성 제공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숲길 중 등산로는 훼손지역을 매년 일정량으로 복원·정비하고 트레킹길은 노선 선정과

연계하여 가치 있는 자원조사도 병행하게 되는데 자연자원(명산, 유명 계곡 등), 문화자원(지역의 설화·생활상 등), 연결자원(옛길·고갯길 등), 기반자원(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등)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용자에게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 거리 20km 이상의 숲길에 방문자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주요 노선에는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등이 배치되어 다양한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며, 마을 고유의 역사·풍습,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백두대간트레일과 DMZ트레일 연결 지역인 인제구간을 2012년 100km를 조성하여 지리산까지 연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숲길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2년에는 숲길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계획이다. 또한, 2018동계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트레일 조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07km의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등산트레킹센터를 통하여 지역숲길 단체와 협력하여 지리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DMZ편치불둘레길 등을 운영 관리하여 즐겁고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트레킹반, 여름캠ป์,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산행인구에 비례하여 산악사고 증가를 감소하기 위하여 올바른 산행문화 및 산악구조대 전문교육을 한다.

산림청에서는 2007년부터 지리산 둘레를 따라 5개 시·군(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을 잇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인「지리산둘레길」조성 계획에 따라 그 첫 사업으로 2007년에 시범구간 21km, 2008년에 50km,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40km, 2011년에 63km를 조성하여 총 274km 환형의 둘레길을 2012년 5월에 통합 개통식을 하였으며, 현재 방문자 안내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산둘레길」은 산의 정상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밖의 산림과 마을이 어우러진 지역을 조망하며 지리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옛길과 고갯길 등을 복원하는 수평적 개념의 걷는 길을 가족 단위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는 길이다.

「지리산둘레길」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의 산림생태와 문화·역사자원을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등과 연계하고 특히 지리산둘레길과 국립공원 탐방로와의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지리산권역의 통합 숲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4-13 지리산둘레길 전경



자료 : 산림청

트레킹길은 등정(登頂)이나 능선종주 등 수직적 형태의 노선은 지양하며, 가능한 임도, 옛길, 마을길 등을 발굴하여 마을과 마을을 수평적으로 잇고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한다.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백두대간트레일과 낙동정맥트레일, 동서를 잇는 DMZ트레일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지역의 주요 산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보호지역은 가급적 노선에 포함되지 않게 하되, 전국에 산재한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자연부락 등을 거점지역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트레킹길을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표 4-50 5대 트레일 및 5개 명산 둘레길 구축계획(안)



5대 트레일 (기본계획)	'13 까지	'14 계획	명산 둘레길 (기본계획)	'13 까지	'14 계획
소 계	512	20	소 계	308	17
DMZ트레일('10) (825km)	47	4	지리산('05) (274km)	274	-
백두대간트레일('12) (2,165km)	89	16	한라산('09) (80km)	34	9
낙동정맥트레일('11) (594km)	376	-	설악산 (350km)	-	-
서부종단트레일('13) (876km)	-	-	속리산('13) (194km)	-	8
남부종단트레일('13) (682km)	-	-	덕유산 (200km)	-	-

자료 : 산림청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이 2011.3.9) 공포되고 2011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등산로만 정의하던 것을 숲길의 종류를 확대·변경하여 등산과 트레킹, 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는 길로 정의하였으며, 숲길기본계획 수립, 연차별계획과 숲길조성계획, 운영·관리,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훈령인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에 규정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을 수립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등산로 분야에서는 2011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의 등산로를 조사한 결과 33,372km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06년 대비 15,774km가 증가하였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와 계획적으로 조성된 등산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숲길관리청에서 ‘07년부터 숲길조사관리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등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가 12,312km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06년 4,894km보다 7,418km보다 늘어난 것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4,416km 정비하였지만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2010년에는 등산로정비 매뉴얼을 개정·보급하여 이용자 안전과 등산 환경을 고려한 훼손 유형별 정비요령을 담아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표 4-51 전국 등산로 현황

관 리 주 체	산(개)	노선(개)	연장거리(km)	비고
합 계	3,368	9,797	33,372	○ 백두대간등산로 684km (지리산 천왕봉 ~ 설악산 향로봉)
산 립 청	307	860	4,149	
지방자치단체	3,046	8,668	27,554	
국립공원관리공단	15	269	1,669	※ 관리 : 일반지역(산림청) 437km,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247km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표 4-52 훼손등산로 정비 실적 및 계획

구분	총 연장	정비대상 (총연장)	정비실적(계획)							'14 계획
			계	'03~'08	'09	'10	'11	'12	'13	
사업량 (km)	총계	12,312 (33,372)	6,887	828 (-)	1,173 (779)	1,254 (790)	1,161 (790)	1,227 (800)	1,244 (1,027)	974
	백두대간· 정맥	-	935	410	100	129	102	118	94	81
	생활권 등산로	-	5,934	418	1,073	1,125	1,059	1,109	1,150	893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트레킹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53km에 이르는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하였다. 그 대표적으로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연결하는 지리산둘레길 274km, 금강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중심으로 금강소나무숲길 40km, DMZ핀치볼둘레길 47km를 조성하였고 기타 한라산둘레길이 총 80km 중 34km, 낙동정맥트레일 376km를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 지역숲길로 내포문화숲길, 서울둘레길, 무장애숲길 등이 연차적으로 조성 중이다.

표 4-53 트레킹길 조성 실적 및 계획

연도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14~'21
조성실적 (실적 누계)	7,614 (1,753)	21 (21)	50 (71)	75 (146)	244 (390)	426 (816)	332 (1,148)	605 (1,753)	5,861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리산둘레길을 운영하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역 숲길단체(사단법인 숲길)를 설립하고 5개 시·군(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아우르는 공동협약을 통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립(2008)하여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등산 활동을 지원하는 홍보·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건전한 등산문화 보급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소외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등산교육을 2013년까지 20,468명을 시켰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목적으로 숲길 조사업무를 하는 숲길조사관리원 1,947명, 숲길안내 및 숲해설을 지원하는 숲길체험

지도사 935명을 고용 숲길업무에 투입하여 수집한 산행정보를 토대로 100대 명산과 우리산 100을 출간하였으며 숲길안내센터에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등산객의 산악사고 증가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으로 313건을 구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림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시·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립산악박물관을 우리나라 대표 명산중의 하나인 설악산이 있는 도시인 속초시에 연면적 3,882㎡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2014년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이 전면시행 등으로 기존의 건강 중심의 산행활동에서 가족 중심의 체재형·체험형 활동으로 산행문화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숲에서 생태와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주변 경관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는 복합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킹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능선 종주 중심의 등산문화로 전국 유명산의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압력을 분산하고 주능선 종주 및 산 정상을 찾는 수직적 등산문화를 걷기와 체험위주의 수평적 등산문화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숲길정책의 전환점에 와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숲길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조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2011. 9. 10일 개정 시행에 근거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숲길의 근간은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지역숲길을 연결하는 산림생태·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숲길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 숲길을 우선 구축하는 5대 트레일로 백두대간·DMZ·낙동정맥·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과 지리산·한라산·설악산·속리산·지리산둘레길 등 5대 명산 둘레길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전국을 하나로 잇는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등산로 또한 백두대간 7개 권역, 정맥 9개 권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등산로로 지정·관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도시근교·마을 뒷산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에 대한 조성·관리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숲길의 보전적 활용 측면에서 전국적인 산림문화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숲길 주변 경관관리, 숲길 인증제도 도입, 예약탐방제 확대, 숲길 바우처 제도 도입, 숲길의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숲길이 유지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숲길 산행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선거리 20km 이상 숲길에 안내센터 설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산악구조대 조직·운영,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등 이용자를 위한 산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숲에 On」 site 유지관리 강화, 숲길 종류별 DB구축 등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숲길관리청의 조직 정비 및 인력확충, 예산확보 체계 전환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한다.

숲길기본계획은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길문화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기본계획의 목표로 첫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지속할 수 있는 숲길로 이용 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숲길을 지역사회 활력 증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숲길정책을 펴 나아갈 것이다.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사무관 김주미

시행배경

수목장은 장묘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인공시설물이 필요 없는 장묘방식으로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장사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묘지는 2천여만기로 국토의 1%에 해당하는 998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주택부지 면적(2,177km²)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및 국토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 수목장립을 조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목장립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이다. 수목장립이란 이러한 수목장을 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나 실제로 수목장을 한 산림을 말한다.

이러한 수목장립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 수목장립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가) 수목장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25)으로 수목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목장의 종류별 세부면적,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수목장립을 조성·운영 할 수 있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산지관리법」개정('07.7)을 통해 수목장립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를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수목장립의 허가면적 범위를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등「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0.5)하여 더욱 쉽게 수목장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국유 수목장립(하늘숲추모원) 조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립 모델 개발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일원 국유림 55ha 중 10ha에 2,009그루의 추모목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

수목장림을 조성하였다.

국유 수목장림의 주요시설은 안내센터, 추모로, 추모광장, 수목장림 등이며 추모목의 주요수종은 소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등이다.

국유 수목장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 사용료 및 관리비를 책정하였으며, 국민공모를 통해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을 『하늘숲추모원』으로 정하였는데 『하늘숲추모원』은 ‘사후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위탁계약 체결 후 '09.5.20일 개장하였다.

또한, 수목장림 수요증가로 지속해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추모목분양률이 96.5%에 달해 추모목 본수를 2,009그루에서 3,049그루로 확대(분양구역 확대)하였다.

다) 하늘숲추모원 이용 만족도 조사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신 1,700명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에 의한 설문조사('12.5.1~7.13)를 시행한 결과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92%가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수목장을 권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을 하게 된 동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69%로 가장 많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라는 응답이 14%로 그 다음 많았다.

하늘숲추모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이며, 보통이 11%로 나타났고 불만족한 경우는 2%, 미응답이 3%로 나타났는데, 자연환경이나 운영관리의 공신력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사후에 자연과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자연 및 국토의 훼손이 없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19%로 그 다음을 이었다.

라) 하늘숲 묘원 운영 성과분석

2014. 7월 현재 전체 추모목 3,049그루 중 2,509본이 계약되어 82.29%의 분양률을 보이

고 있다.

'09.5월 개장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견학한 사람만 12만 9천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수목장림의 경우 공동목보다는 가족목이 월등히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목의 경우 사용계약 완료시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앞선 것으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숲 추모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수목장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의 경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가족목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 수목장 관련 자료 발간

수목장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수목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정을 사진,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는 수목장」이라 행정 간행물을 발간('10.1)하였다.

아울러,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을 발간('10.6.30)하여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이 편람에는 수목장림 입지선정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수목장림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해보고자 하는 민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목장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으로서도 불법·무허가로 조성된 사설 수목장림으로부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집이라 생각된다.

향후계획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권역별 모델수목장림을 신규조성하여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이 더욱 쉽게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용자지원 등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사)수목장실천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수목장 실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목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수목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박승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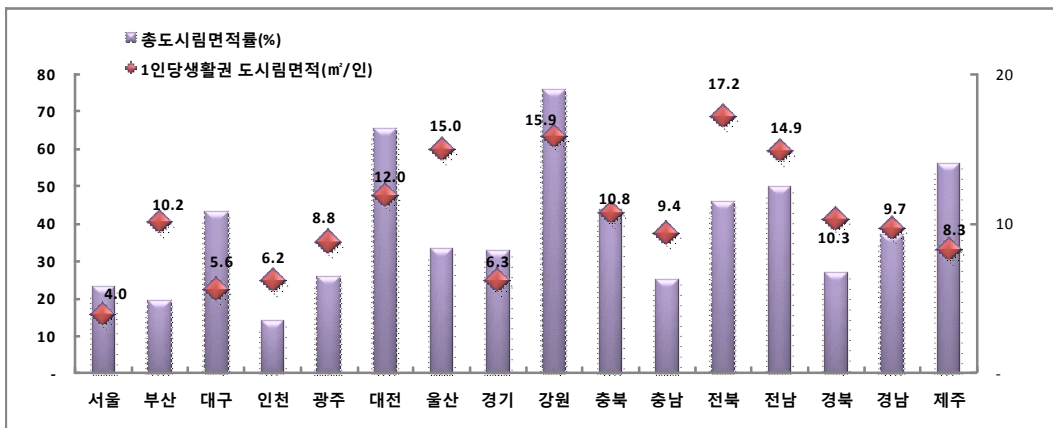
☑ 시행배경

우리나라 인구의 약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인 경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6.73㎡로 런던(27㎡), 뉴욕(23㎡), 파리(13㎡) 등 선진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기오염,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투수층 확보를 위해 녹색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여가·건강 등의 높은 관심과 생활권 주변 환경의 중요성 증가로 녹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녹색쉼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 내 녹색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도시 내 숲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새로운 숲 조성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기존 도시숲의 관리·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4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2011년도말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내·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야 한다.

표 4-54 도시숲의 규모별 유형과 기능

구 모	유 형	기 능
대규모 숲	산림, 공원 등	·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 시민들의 당일 체재형 휴식공간
중·소규모 숲	학교숲, 녹지, 비오톱	· 소형생물종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 숲	정원수, 자투리 숲	· 직접적인 거주 환경 개선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선형 녹지	가로수, 하천변녹지대 등	· 각 요소의 연결 요소 · 생물종의 이동통로, 생물 서식처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그림 4-15 녹색네트워크 개념도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외곽의 산림을 선적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13년도까지 50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매년 사업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2,44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 향후계획

도시숲 조성은 ‘도시숲 확충 등 도시녹화운동 전개’의 국정과제(12-4)와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변경된 「도시림 기본계획」(2013~2017)을 바탕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 가로수 조성·관리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강효덕

☑ 시행배경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도시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가로수는 도시숲과 하천·공원 등 흩어진 녹지공간을 수렴대로 연결하여 동물이동통로 및 생물서식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며 소음 방지 및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등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가로수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속물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개정·고시(2013.12.31, 산림청 고시 제2013-87호)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표 4-55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장거리(km)	1,300	1,008	784	1,017	1,227
본수(천본)	279	251	132	156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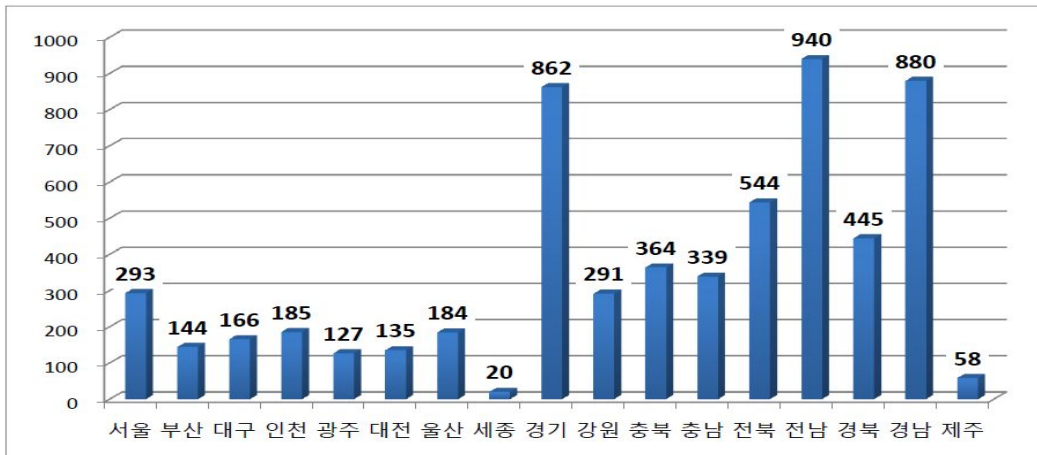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가) 가로수 조성

전국의 가로수는 2013년말 현재 5,976천본(37,845km)으로서 2012년 대비 338천본(1,227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류 23.5%, 은행나무 16.4%, 이팝나무 6.4%, 느티나무 6.3% 등이다. 시·도별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14.7%, 경기 14.4%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6 2013년말 가로수 시도별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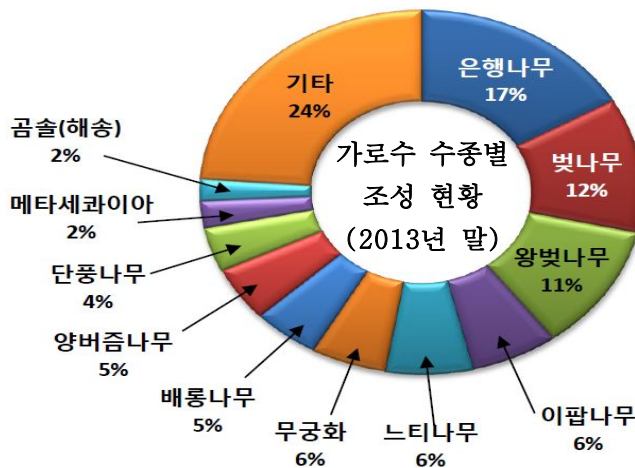
(단위 : 천본)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평균거리는 1,067km로 2009년 이후 조성 거리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1,017km, 2013년도 1,227km를 조성하면서 다시 상승추세로 들어섰다. 2013년도에 식재된 가로수는 주요수종은 왕벚나무(28천본, 8.3%), 이팝나무(23천본, 6.8%), 배롱나무(14천본, 4.0%) 순이었다. 꽃을 볼 수 있는 화목류의 식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역별 특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그림 4-17 2013년도말 가로수 수종별 조성 현황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나) 생육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가로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협소한 생육공간 및 부적절한 토양으로 뿌리발달 및 생장이 극히 저조하여 가로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발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도모하고 투수층의 확대 및 관목식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4-18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 가로수 수형관리 등 가로경관 창출

산림청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그림 4-19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시행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상가 간판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09년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지역 랜드마크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생활공감 정책과제에 채택('09.7)되었고 가로수가 도시환경의 하나의 요소를 넘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미관과 경관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가로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조성된 총 143종의 수종별 특성과 식물학적 특성, 관리상의 유의점을 수록한 가로수도감 '한국의 가로수'를 '12년에 발간하여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림 4-20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가로 녹지의 양과 질 증진을 위해 개발된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모델”을 지속적 적용·추진하고 시민들이 가로수의 관리 주체가 되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아. 학교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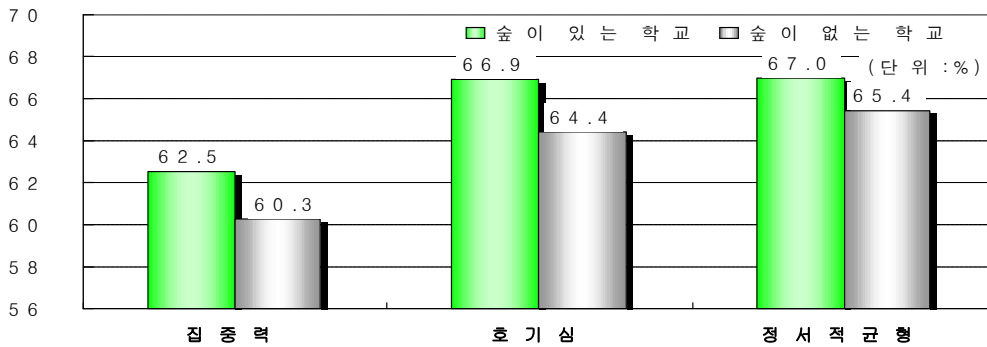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송갑수

☑ 시행배경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와 학교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량을 확충하고 학교육외 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1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시행내용 및 성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사)생명의숲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1,271개교를 조성하였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사)생명의숲, 2009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학교숲 조성 실적

(단위:개교)

연도	2009까지	2010	2011	2012	2013
신규	810	59	88	155	159
누적	810	869	957	1,112	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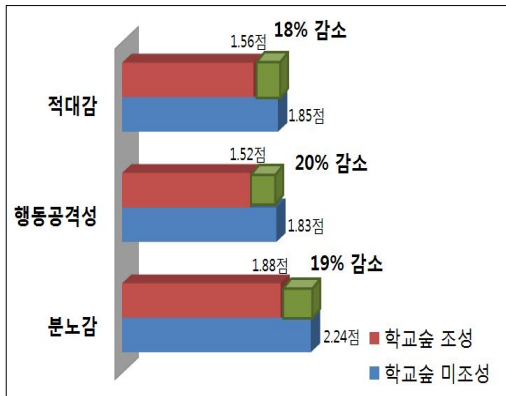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지방자치단체 간 학교숲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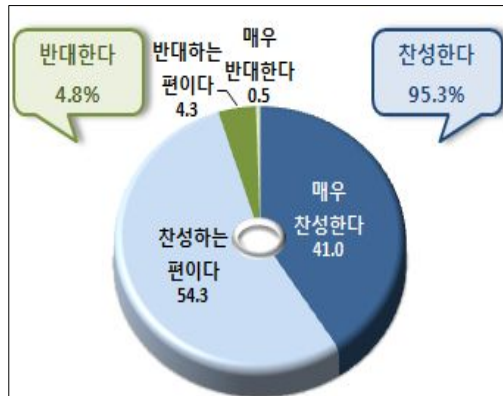
2013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학교숲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아이들의 적대감, 행동공격성, 분노를 18~20% 완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갤럽에서 ‘학교숲 조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95%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숲은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휴식을 통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확대 조성을 원하고 있다.

그림 4-22 학교숲 효과 분석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학교숲 효과 분석(국립산림과학원, '13)



학교숲 조성 확대 국민의견(한국갤럽, '13)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향후계획

학교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13, 한국궐립연구소) '학교숲의 조성 및 확대'에 대해 일반국민의 95%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학교숲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13, 국립산림과학원) 공격성 완화에 기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가.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남성

 시행배경

WTO(세계무역기구)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제9차 다자간 통상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시행내용 및 성과

DDA 농업협상은 UR 협상 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환경, 지적권,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분쟁해결 등 9개 분야에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02년부터 본격

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다. '0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아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03. 9월 칸툼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한동안 협상이 공전되기도 하였으나 '04년 8월 자유화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Agreement)이 합의되면서 협상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05.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홍콩에서 개최하여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수출·수입국간의 대립, 비농산물(NAMA)협상은 미국, 캐나다 등선진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간 견해차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06. 7월에는 국내보조 감축에서 미국이 기존입장을 고수하여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모든 분야에서 DDA 협상 중단(suspend)”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07.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재개되었다. 4월에는 농업, 비농산물(NAMA), 규범 의장들이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초안을 제출하여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진전을 기초로 7월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08. 2월, 5월, 7월, 12월 4차례에 걸쳐 의장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특히, '08.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 간의 의견대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09년 미국 Obama 행정부 출범, 인도 총선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G8 정상회의(7.8-10)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9.24-25)에서 '10년 DDA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OECD, APEC 등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Momentum)이 형성되었다. 11.30~1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활동전반을 점검하고 DDA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10. 3월에 DDA 현황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하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DD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1. 4월 WTO 사무총장은 협상분야별 진행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11. 5월부터는 제8차 WTO 각료회의(12.15-18, 제네바)시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DDA 협상 의제를 중심으로 WTO 사무총장 등을 주축으로 소규모 패키지(December Package) 논의 등 분야별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

'13. 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13.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MC9)에서 일부라도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발리패키지를 타결하여,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농업분야 일부와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잔여 DDA 이슈의 작업계획을 수립중이며, 대다수 국가가 발리패키지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협상을 진전시켜야한다는 공감대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이, 비농산물(NAMA) 협상에서는 관세감축공식, 미양허 품목(합판, 섬유관, PB 등) 처리문제,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논의(임산물 Sectoral 협상), 신속해결메커니즘(HM), 투명성 등 비관세장벽(NTBs) 해소가 주요 협상쟁점이다.

산림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인, 학계, 협회, 생산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남성

☑ 시행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 특정국가 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통상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FTA를 확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3년 10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9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며,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타결되어 발효준비중이다.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진행중이고, 일본, 멕시코, GCC와는 협상재개를 위해 여건 조성중이다.

☑ 향후 계획

임산물 협상 대응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자, 전문가, 학계, 단체 등 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산물 FTA 협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는 최대화하기 위해 상품 및 원산지분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조립 등 임업투자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 임산업 글로벌화 및 원목 등의 원자재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투자 및 협력분야 협상에 임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 해외조림 확대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사무관 차준희

☑ 시행배경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 강화로 주요 목재생산국의 원목수출 금지, 원목 가격상승 등에 영향을 받았다. 연간 목재수요량의 약 83%(‘13년 목재자급률 1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목 등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목재의 단순수입 의존은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수요가 외국자원에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요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국내기업들의 해외조림 실적은 314천ha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파라과이 등 13개국에 31개 기업이 진출하여 해외조림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해외조림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림, 육림 및 가공투자 사업비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1,498억원을 장기, 저리(연 1.5%)로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하였다. 또한, 투자 진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비를 2006년부터 연간 250백만원 예산으로 기업별로의 사업비의 70%까지(3,500만원 한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 지원 및 국제산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2013년까지 103명을 선발하여 9개국 23개 기업·기관에 파견하였다.

해외조림 진출기업의 해외 조림목에 대한 국내 반입은 2000년부터 속성수인 아카시아를 위주로 시작되어 2013년까지 원목, 펄프용 칩, 연료용 칩 및 목재펠릿 등 원목환산 1,395

천m³의 목재류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식재된 조림목이 벌기령에 도달함으로써 해외 조림목의 국내 반입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2006년 8월 1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임업협력 강화를 통해 50만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6일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협력 MOU」체결로 조림대상지 20만ha를 확보하였고, 2009년 10월 22일 「한-캄보디아 산림투자 MOU」를 체결로 20만ha를 확보하는 등 조림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사업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투자기업 중심의 협의회 운영 및 컨설팅 지원강화 등 정책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 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확대(2013년말 기준 28개국), ODA 프로젝트사업 시행을 통한 산림녹화기술 전수 등과 연계하여 해외조림 투자기반 구축 및 투자 여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57 해외조림 추진실적

(단위 :ha)

구 분(ha)	계	'93~'09	'10	'11	'12	'13
13개국 31개 업체	314,355	207,449	20,602	25,456	25,871	34,977

자료 : 산림청, 2013년 임업통계

☑ 향후 계획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정비, 정책지원사업 확대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림사업을 기존의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중심에서 목재펠릿,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해외 산림자원 확보 사업을 다변화 할 계획이다.

1 연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최경삼,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도순·이세오·이병래

☑ 시행배경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 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서·남해가 해양환경 특성이 상이하고, 어구어법도 지역별, 해역별로 다양하여 동일 수역에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지역간, 업종간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UN해양법 발효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조 5,893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8,560척을 감축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1%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5,635억원을 투입하여 15,928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815억원을 투입하여 1,3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13) 45,598척으로 33.5% 감소
- 어획량(만톤) : ('00)119 → ('05)110 → ('11)124 → ('13)104

적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적당 생산량이 17.3M/T이었으나 2013년에는 22.0M/T로 27.2% 증가하였으며, 적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7,890만원으로 233%로 대폭 증가하였다.

2)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인공어초 219천ha를 시설하였고, 갯녹음 발생 해역에 2013년까지 47개소에 3,334ha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군·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 까지) 20개소, 2단계(2012~2020년까지)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09년부터 56종(해면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 시행하여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하였으며, 2013년도는 65종(해수면 50종, 내수면 15종)으로 확대 하였다. 제1단계('07~'99/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불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는 '10~'12까지 감성돔, 강도다리, 꽃게, 해삼을 대상으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종묘방류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해역별로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등 4종을 시작으로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5종으로 대상어종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자원 회복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 여건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 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TAC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17천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1,181척, 1,226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TAC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판매장소를 121개소로 확대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등에 대해 자원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변동에 적극 대응하며, TAC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제도의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원상태와

어업현실을 반영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해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근해업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동 법률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근해어업실태조사는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함으로써, 2014년부터는 전년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자료로서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업에서 발생된 페어구나 페어망에 의한 어업자원 감소와 해양환경 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생분해성 재질(PBS : Polybutylene succinate)의 친환경 어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자망 및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270억원(국비70%, 지방비30%)을 지원하여 대게·꽃게·조기 자망 및 꽃게·붕장어 통발 등 약 2,000여척에 대하여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였다.

표 4-58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척)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요예산	20	43	39	40	43	43	43
지원척수	150	212	252	263	347	350	364

☑ 향후계획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선세력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연근해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해가는 한편,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정감척을 통해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11.7.26)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변경, 어선현대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어구의 성능과 품질 및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유실된 폐어구가 유령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해면양식어업

✳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이규선,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창석

☑ 시행배경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생산량 증대 중심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고 있다. 또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에서 벗어나 외해의 대규모 양식어장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 중심의 가두리 양식장을 외해나 육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 외해양식 활성화

내만 위주의 양식으로 상습적인 적조피해 발생, 어장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교적 어장환경이 양호한 외해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06년), 전라남도('07년), 강원도('08년), 경상북도('09년), 전라남도('10년) 등 총 6개소에서 시험어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전라남도 및 제주도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외해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2013년까지 외해양식어업 9개소(참다랑어 5개소, 일반어류 4개소)를 개발하였으며, 외해양식 주요 대상 어종인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사료 사용 등을 야기 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4년부터 배합사료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2년부터 배합사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위한 사전 기반을 조성 중이다.

3)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70개 해역에 대한 등급 설정을 위한 위생조사·평가가 마무리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26개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동 제도는 수산물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20개 품목(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굴비, 바지락, 전복, 다시마, 멸치, 굴,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새우, 꽃게, 꼴뚜기, 고등어, 삼치, 꼬막)에 대해 4,9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종합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수급뿐 만 아니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양식 인프라를 개선하고, 과도한 양식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내수면어업

✕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 시행배경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 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점차 양식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인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 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으로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 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지원, 국가어도종합시스템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3년도에 4개도 10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3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괴산군 칠성면 사읍리(괴산댐)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2)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지원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고, FTA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경상북도 의성군에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고, 경제성 있는 내수면 양식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국가어도종합시스템구축

하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보(洑), 댐과 같은 수리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은어, 연어, 뱀장어 등 주요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동 및 산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유용 가치가 높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하여 어류 이동통로(어도, 魚道)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개정('12.5.23) 및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의 어도설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림 4-24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설치 현장



보령 대천천 어도설치현황



산청 덕천강 어도설치현황

☑ 향후 계획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향후 농업용수 보관용 유희저수지를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대국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가공·유통이 집적된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등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원양어업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신경식

☑ 시행배경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 증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조업 경쟁의 심화,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규제 강화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어선척수 등과 같은 우리 원양 선단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인프라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수산 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수산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도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의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와 해외 수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원양산업을 태동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총조사를 완료하였다. 해외를 무대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총조사 결과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주력업종인 참치 선망어선 4척의 신조대체 사업을 완료하였다.

어업 외에도 양식,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의 수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1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투자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개 국가의 투자여건(수산업 정책, 법령, 산업동향, 투자

환경) 등을 조사·제공하였다. 원양산업 거점 국가의 교민을 임명한 명예수산물 8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향후 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수산 투자 기업 지원사업은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실정이며, 용자 조건이 광물, 농업 등 타 해외자원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용자 조건을 개선하고 조사사업에 보조금도 지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에는 IUU어업 규제 강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ODA 지원 확대, 연안국, 지역수산 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 원양기업 및 원양산업 전문 인력 육성, 노후 어선의 현대화,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확대 등 원양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5개년간 원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밑그림이 될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 5 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제2절 교육여건 개선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제4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제 1 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1 일반농산어촌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기환

☑ 시행배경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 즉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 측면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5-1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경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전북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전남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제주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역량 강화 지원가능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 개선으로 분류 * 소득사업은 지양	<통합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2013년부터 면 단위는 70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심 - 지역소득 증대 지원가능	<통합된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 2013년부터는 25~50억원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통합된 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기존마을 정비	기존마을 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통합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 시 지방비 부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 지 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 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 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통합된 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색농촌체험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구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고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살기좋은도시만들기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마을공동소득 창출 및 문화조성	○ 지원내용 - 마을공동소득 창출, 마을공동문화 조성 ○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	<통합된 사업> ·없음 * 2013년부터 신규시범사업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 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 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 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등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중심지 육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되었다.

시행내용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스스로 통합적인 중장기 농촌계획의 수립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체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117개 시·군, 1,162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을 지원하여 48,068명의 신규유입효과를 얻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표 5-4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계	930,447	918,246
세종	2,559	3,483
경기	38,506	33,696
강원	67,551	60,077
충북	76,583	79,236
충남	114,485	115,290
전북	112,492	115,113
전남	204,380	200,994
경북	160,130	157,331
경남	133,415	132,680
제주	20,346	20,3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예산설명서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내용의 창의성 저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 소득사업 사유화 등 부실 운영,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주민 지원체계의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다양한 사업군 신설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역량에 맞는 단계별 투자로 정책방향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역량과 사업 규모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읍면소

재지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개편되어 읍·면소재지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거점이자 농촌의 발전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향식 사업 지원을 위해 ‘농촌 현장포럼’ 확대, 광역단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GIS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보완,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사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형주

☑ 시행배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면,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에는 총 10,000동(사업비 5,000억원)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표 5-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물량(세대)	7,000	8,000	8,000	8,000	10,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40	50	50	50	50
융자재원	280,000	400,000	400,000	400,000	50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또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보급하였다.

한편, 2013년 농어촌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3.6.4)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송림마을,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방축마을, 전남 진도군 군내면 안농리 안농마을,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주치골 마을 등 4개 지구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향후계획

2014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지원한도를 높이고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지원물량의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에게 특별배정 하는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문화 정착 및 경제성 있는 주택보급을 위해 적정형(affordable)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의 본격 추진여부는 시범사업이후 지역주민들의 반응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이다.

3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 환경부 생활하수와 사무관 윤태근

☑ 추진배경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정에서 생활수준은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농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대부분의 주택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하수도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하수발생원인 농촌지역 자연마을단위에서부터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원 등 하천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다.

농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1.6%('12년)이나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62.1%로 낮다. 특히, 면 지역의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41.9%로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표 5-6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추이

(단위 : %)

구 분	'08	'09	'10	'11	'12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시 지역	92.5	93.4	93.8	94.2	94.6
농어촌 평균1)	49.1	52.6	56.0	59.5	62.1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주1)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도농복합시 읍, 면지역)

농촌마을하수도 시설현황

2012년 말 기준 농촌지역에 2,895개소, 2,337천m³/일의 공공하수도시설이 운영 중이며, 89%(2,563개소)는 500m³/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도이다. 이중 1999년 이전 설치된 시설이 18.9%이고, 2004년 이전까지 설치된 시설이 52.7%(누계)로 약 절반 이상의 하수도시설에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표 5-7 시·도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현황

구분	전국	특광 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개소)	2,895	39	252	311	218	308	382	718	255	379	33
누적용량 (천m ³ /일)	2,337	346	543	133	145	247	159	250	253	228	34

3) 농촌마을하수도 예산투자현황

최근 5년간('08~'12) 하수도분야 전체 투자 금액 9조 1,600억원 중 농어촌 지역은 22.3%인 2조 459억원 투자하였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종료된 '12년의 경우 1조 8,234억원 중 농어촌지역은 13.9%인 2,543억원 투자하였다.

표 5-8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비율
총 투자액	14,456	19,232	19,048	20,630	18,234	91,600	100
하수처리장	4,957	6,577	6,505	7,787	5,999	31,825	34.7
하수관거	4,003	5,697	6,967	6,590	8,404	31,661	34.6
농어촌하수도	3,809	5,289	3,949	4,869	2,543	20,459	22.3
농어촌마을하수도	929	1,403	1,007	1,510	1,588	6,437	7.0
댐상류하수도시설	1,983	2,861	1,892	2,534	-	9,270	10.1
면단위하수처리장	897	1,025	1,050	825	955	4,752	5.2
기 타*	1,687	1,669	1,627	1,384	1,288	7,655	8.4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하수도차입금상환 등

☑ 향후계획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농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에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이농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농촌마을하수도를 새로 1,030개소 신설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 1,900개소도 개량하여 농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자연부락단위로 설치·관리하는 농촌마을하수도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공법에 대해 운영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유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도록 농촌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김영

☑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 목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보조율 70%)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내용 및 성과

'94. 2. 7 농업정책심의회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를 촉구 하고, 이어 '94. 6.2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국무회의 심의(농어촌특별세지원 대 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지원사업” 포함) 등을 통해 '9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2,533억원(국비기준)을 투자하여 189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했 다. 2013년에도는 75억원을 투자하여 15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 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표 5-9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추진실적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95~'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2,458	2,089	104	101	84	80	75

자료 : 환경부, 2013년

향후계획

2014년에는 80억원을 투자하여 12개소 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 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 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시설의 광역화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환경부 수질관리과 주무관 손중훈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의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을도모하고,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1988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06억원을 투자하여 145개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2013년에는 691억원을 투자하여 37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2014년에는 682억원을 투자하여 24개소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2013년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신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14개소(계속사업 12개소, 신규사업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환경부 유역총량과 주무관 현세환

☑ 시행배경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배출 또는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시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 9,665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여 전국에 89개소(10,733m³/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30개소(2,911m³/일)의 시설을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성시 등 액비화시설 15개, 장수

등 퇴비화시설 4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추가로 영주 등 19개 시설을 설치 중이다. 이중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5개소 포함되어 있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및 수질·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계획

2017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0개소를 신·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자원화 시설설치를 추진(지역단위 통합센터 10개소,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10개소,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10개소)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정화·자원화 처리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표 5-10 가축분뇨 처리현황(2012)

(단위 : 천톤/년)

구 분	계	자원화			정화처리			기타
		계	퇴비	액비	계	공공	농가	
전 체	46,489 (100%)	41,236 (88.7)	37,656 (81.0)	3,580 (7.7)	5,132 (11.0)	3,133 (6.7)	1,999 (4.3)	121 (0.3)
돼지	17,748 (100%)	13,160 (74.2)	9,580 (54.0)	3,580 (20.2)	4,550 (25.6)	3,133 (17.7)	1,417 (7.9)	38 (0.2)

자료 : 환경부, 2012년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지도사 임 은 성

☑ 시행배경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배울거리 및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노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0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전국에 658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개선,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먼저, 건강관리를 위하여 게이트볼, 생활체조,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양 교육,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교육, 한자, 한글 교육, 풍물, 무용 등의 동아리 모임을 통해 학습 및 사회활동을 하였다. 또한 노년 활동에 적합한 환경개선을 위해 건강 산책로, 휴식공원 등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계단 및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활동으로는 농작물 생산 활동, 전통장류 등 식품가공 활동, 모시, 왕골, 짚풀 공예 등의 공예품 제작 활동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생활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의 종합적 지원을 하는 한편, 농촌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공사례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각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규 마을 대상자를 위한 교육(4.19. 115명) 및 종합평가회(12월)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마을 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우수 실천마을

벤치마킹 등 농촌고령자와 마을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5년 55.4%, 2010년 71.5%, 2013년 78.7%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령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을은 활력을 되찾고 고령자는 삶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생활만족도 결과>

(’05) 55.4 → (’10) 71.5% → (’13) 78.7%

* 농촌고령자의 삶의 보람 및 자긍심 함양을 통한 삶에 대한 희망 제시

향후계획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풀어가고자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0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156마을(1년차 80, 2년차 53, 3년차 23)을 대상으로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사례와 성과를 발굴·확산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소득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내 노인보호체계 구축 등 마을민간 상호 돌봄 공동체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 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 구분역

☑ 시행배경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이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1996학년도 도입 시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였으나, 199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의 3%, 2006학년도부터는 입학정원의 4%로 확대하였으며, 학생선발 여부 및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표 5-1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단위: 명)

연도	대학수	모집인원	선발인원
2010학년도	192개교	12,793명	11,449명
2011학년도	192개교	12,839명	11,625명
2012학년도	193개교	12,742명	11,695명
2013학년도	199개교	11,900명	11,180명
2014학년도	198개교	11,945명	11,124명

자료 : 교육부, 2013년

향후계획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어촌 학령인구, 특히 우수한 학생이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이지은

시행배경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UR타결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자녀, 취약계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학자금 용자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사업운영을 위해 매년 용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정부가 311억원을 출연하여 40,267명을 대상으로 1,021억원(상환금 채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5-12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연도	국고출연금(백만원)	용자현황	
		지원자수(명)	용자금액(백만원)
1994	8,000	1,723	1,712
1995	22,000	19,176	19,089
1996	20,000	19,302	19,252
1997	12,400	19,936	19,849
1998	15,100	19,562	19,396
1999	17,300	19,748	19,578
2000	30,550	20,668	20,475
2001	18,000	18,016	25,023
2002	15,000	16,571	23,764
2003	4,000	19,936	36,698
2004	2,100	26,424	60,652
2005	12,733	25,206	63,702
2006	48,288	24,964	67,664
2007	44,097	26,333	76,942
2008	41,260	26,721	83,743
2009	47,500	28,966	92,916
2010	50,521	31,093	101,218
2011	60,482	33,273	110,295
2012	35,507	33,694	92,496
2013	31,100	40,267	102,115
계	535,938	471,579	1,056,579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 이래 수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도입 당시에는 학기당 용자 한도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학기당 150만원, 2003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이외에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09년부터 지원 시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2011년 용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수혜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3년에는 장기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제를 도입(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향후계획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 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귀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자 및 단기 연체자에게 상환 등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주무관 윤덕영

☑ 시행배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농림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농어촌특별회계,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지원된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6개관에 1,1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10개관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문화향수권 및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읍·면 지역에서 288개관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관수)

구분 \ 연도	1995~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원액	573	56	97	114	146	110	60	100	1,256
도서관수	99	11	14	17	19	15	11	10	196

향후계획

2014년에는 4개관 건립에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도서관건립·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 3 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개선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광기형

☑ 시행배경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 고 지원율	8 %	18 %	28 %	28 %	28 %	28%	28%	28%	28%	28%
월 평 균 지원세대	606천세대	603천세대	521천세대	504천세대	484천세대	457천세대	435천세대	413천세대	402천세대	387천세대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340억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1,626억 (4.3% ↑)	1,718억 (5.7% ↑)	1,704억 (0.8% ↓)	1,789억 (5.0%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향후 계획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12.10 개정안 국회제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은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양진선

☑ 시행배경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령 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및 기계 사고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는 매우 높는데 반해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의 대부분은 공공 보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은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589억원으로 235개소, 2012년에는 568억원으로 185개소, 2013년에는 588억원으로 169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율이 69.7%('13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1994~2013년)

구분	대상기관 수 (개소)	지원현황 (개소)	개선율 (%)
보건소	152	124	81.6
보건지소	1,247	1,010	81.0
보건진료소	1,855	1,135	61.2
전 체	3,254	2,269	69.7

주 : 신축(이전신축) 지원 받은 경우만 포함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미개선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다.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양진선

시행배경

의료시설 및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서, 오·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균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리’ 단위에 본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2013년 현재 1,855여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진료원 선발 및 교육,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양진선

☑ 시행배경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의촌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형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주

로 배치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1차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3년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직사는 총 3,876명(의과 2,411명, 치과 485명, 한의과 980명)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215명(82.9%)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및 응급처치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표 5-16 2013년도 공중보건직사 배치현황

구분	2013년			
	합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계	3,876	2,411	485	980
보건(지)소	3,215	1,848	457	910
병원선, 이동진료반	29	15	7	7
국·공립병원	273	219	1	53
교정시설 등	69	53	16	-
국가보건기관	95	82	4	9
보건단체, 복지시설	31	30	-	1
응급의료기관 등	164	164	-	-

☑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성 및 보건의료 수요 분석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직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박기형

☑ 시행배경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에 의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3년 현재 월 평균 290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경영주가 아닌 협업 농업인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2002.12	2003.1~2004.6	2004.7~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2013년
기준등급(기준소득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지원금액 (월/원)	2,200~4,400	4,400~7,700	8,800~19,800	9,900~21,600	9,900~23,400	9,900~27,900	9,900~32,850	9,900~35,550

*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의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861	984	924	1,238

☑ 향후 계획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소득감소 등으로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14 : 79만천원→85)해 나가는 한편,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촌 보육여건 개선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강봉규

☑ 시행배경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촌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3년에는 6개소(3개소는 이동식 놀이교실)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우수한 보육교사들을 유인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3년에는 약 41천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5-1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10	5	10	5	3
이동식 놀이교실	1	5	4	2	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표 5-20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인원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30,388	33,435	36,517	40,816	41,37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향후계획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 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기준인원을 확대(당초 15인→20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근무수당도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박기형

시행배경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 실시 후,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6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 2013년은 80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 이상, 2013년에는 3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2013년에는 15천 농가에 63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농어촌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천 가구에 8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5-21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2008	28	5,792	13	4,732	15	1,060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2012	25	6,300	15	5,460	10	840
2013	25	7,140	15	6,300	10	840

*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재조정

☑ **향후계획**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돌봄 대상 외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2014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 도우미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14년 12월 일 인쇄

2014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 (044)201-1718

디자인 및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